생협평론

특집 **협동조합 정체성 논쟁 1**

발제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

토론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에서 길을 찾자

나무로서 협동조합과 숲으로서 협동조합: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에 대한 단상

화폐 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제도 차이를 인식하자

협동조합운동, 천천히 톺아보면서 나아가기

토론에 대한 발제자 의견

좌담회 :
활동가 입장에서 바라 본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

이슈 현대판 봉이 김선달은 과연 누구인가?
-상수도 민영화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22조 원 퍼부은 4대강사업의 실체

2013 겨울
13호

2013 겨울
13호

생협평론 2013 겨울 (13호)

펴낸이	이정주
펴낸곳	(재) iCOOP협동조합연구소
편집위원	김기태 김아영 이대중 이선옥 이성선 정설경
편집위원장	염찬희
편집디자인	이경원 (스튜디오 보싸)
펴낸날	2013년 12월 20일
주 소	서울시 구로구 항동 1-1 성공회대학교 일만관 2B 204호
전 화	02) 2060-1373 / 4
구 독	1권 3,000원
e-book	교보문고, 리디북스, 알라딘, yes24에서 무료 구독 가능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협평론 2013 겨울 (13호)

길잡이
협동조합의 정체성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 염찬희 (편집위원장) — 4

특집 협동조합 정체성 논쟁 1

발제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 — 신성식 (아이쿱생산법인 경영대표) — 7

토론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에서 길을 찾자 —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장) — 24
나무로서 협동조합과 숲으로서 협동조합: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에 대한 단상 — 장종익 (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교수) — 30
화폐 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제도 차이를 인식하자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45
협동조합운동, 천천히 톺아보면서 나아가기 — 김동준 (성공회대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연구교수) — 56

토론에 대한 발제자 의견 — 신성식 (아이쿱생산법인 경영대표) — 68

좌담회
활동가 입장에서 바라 본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 — 김순희, 정설경, 정현화, 손범규 — 80

이슈

현대판 봉이 김선달은 과연 누구인가?
-상수도 민영화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 92
22조 원 퍼부은 4대강사업의 실체 —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 104

아이쿱생협 만평 — 이동수 (만화가) — 113

돌발논문
30년 후 기초연금, 현행법상 기초노령연금의 절반
-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 공약 후퇴, 쟁점과 대안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 114

기획연재 / 협동조합을 가다 ③
이 학교 매점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 김은남 (<시사IN> 선임기자) — 127

서평
현명한 소비자로는 부족하다
『질병판매학』 — 민앵 (살림의료생협 이사장) — 137

협동조합소식
전세계 협동조합들은 무엇을 고민하는가? — 김영미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 142

생협평론 과월호 목차 — 146

협동조합의 정체성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염찬희 (편집위원장)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3년 12월 한국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 1년 만인 현재 3,000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고 한다. 2013년 한 해 동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중개한 협동조합 관련 뉴스의 건수도 크게 늘어, 네이버의 경우 2012년과 비교하면 170% 이상, 2011년과 비교하면 28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다.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늘어난 것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이 월 평균 250건이 넘는 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협동조합에게 '협동조합은 어떠했는지?'에서 나아가 '협동조합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생협평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몇 차례에 걸쳐 특집으로 마련한다. 이번 호를 시작으로 앞으로 몇 호 더 논의의 장을 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특집 형식에서 벗어나 일종의 '지상(紙上) 콘퍼런스'를 마련해보았다.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끊임없이 그 정체성과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현장의 전문가에게 '협동조합은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발제를 부탁하고, 연구자들 약간 명이 발제에 대한 토론문을 작성한 후, 수집된 토론문들을 다시 발제자에게 보내 마무리 의견 글을 받는 방식이다.

이번 13호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했다.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성장한 아이쿱생협의 신성식 경영대표가 협동조합은 어떤 모습이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라는 제목으로 발제문을 써주셨다. 경제학자인 홍기빈 박사와 한겨레경제연구소의 이현숙 소장,

그리고 경영학적 입장에서 장종익 교수와 김동준 교수가 발제글에 대한 의견과 함께 자신의 협동조합론을 개진하는 방식의 토론글을 보내주셨다.

'지상 콘퍼런스'라는 새로운 시도가 편집자에게는 익숙한 편집 과정과 달라 낯설고 어려운 경험이었지만, 독자들께는 하나의 주제로 수렴시킬 수 있는 사고들을 접하는 색다른 경험이 되어 줄 것이라 기대한다.

이슈 꼭지에서는 언제나처럼 글 두 편을 접할 수 있다. 하나는 22조 원을 들인 4대강사업을 감사원이 총체적 부실사업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조목 조목 설명한 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의 글이다. 다른 하나는 물이 민영화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사회공공연구소 송유나 연구위원의 글이다. 공공재인 물을 주인인 국민도 모르는 사이에 팔 권리를 기업에게 주느냐 마느냐 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며, 만약 기업에게 넘어가 사영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경고하고 있다.

돌발논문은 "30년 후 기초연금, 현행법상 기초노령연금의 절반-박근혜 정부 기초연금 공약 후퇴, 쟁점과 대안"이라는 제목이 말해주듯, 박근혜 정부의 대표공약이라는 노인연금이 2013년 가을 정부의 발표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소장이 질문과 대답이라는 형식을 빌어 알기 쉽게 풀어주었다.

이번 호에도 협동조합 소개가 어김없이 자리하고 있으니, 성남에 위치한 복정고등학교와 서울 구로구의 영림중학교에서 학교 매점을 협동조합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이야기가 흥미진진하다.

2013년이 저물어 가는 지금 <생협평론> 13호를 엮으면서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협평론>의 정체성도 고민해 보려한다. 그리하여 2014년에는 더욱 의미 있는 <생협평론>을 선보일 것을 독자들에게 약속한다. icoop

생협 연구

특집 **협동조합 정체성 논쟁 1**

발제

-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

토론

-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에서 길을 찾자
- 나무로서 협동조합과 숲으로서 협동조합: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에 대한 단상
- 화폐 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제도 차이를 인식하자
- 협동조합운동, 천천히 톺아보면서 나아가기

토론에 대한 발제자 의견

좌담회

- 활동가 입장에서 바라 본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1]

신성식 (아이쿱생산법인 경영대표)

이 글을 쓴 목적은 협동조합 운동을 새로운 시각으로 검토해보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우선 기존 시장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는 협동조합 운동의 방향을 새로운 시장으로 바꾸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를 위해 협동조합 구성원들의 결합력을 자본 기업보다 수준을 한 단계 이상 높이자는 것이다. 그래야만 지나친 경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더 높은 생산성을 통해 사람 중심 경제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사람 중심의 경제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가치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협동조합이 갖는 정체성은 '사람중심의 경제'이고 그 가치는 '함께 행복하기'라고 할 수 있다. 자본 소유에 따른 의사결정이 아닌 1인 1표제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지향하는 구체적인 증거이자 함께 행복하기를 위한 기초다. 자본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사람중심의 경제는 사업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만 보장하면 실현되는 경제인가? 그렇게 간단하면 선각자들이 밤을 지새울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사람 중심의 경제는 자본과 상품이 없는 경제일까? 모든 경제활동의 기초는 상품이다. 상품 자체를 거부하는 생각[2]도 있지만 이는 타인의 소비를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채집해 온 인류 경제의 역사를 무시하는 발상이다. 경제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재화

1 이글은 내부 정책자료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를 재편집한 글이다.

2 상품이란 용어를 거부하고 '생활재'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이다. 재화나 용역을 생산, 소비하는 과정에는 대체로 노동과 자본이 필요하다. 기술을 별도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 기술은 노동에 속하기도 하고 자본에 속하는 설비에 축적되기도 한다. 자본 중심의 경제란 경제 활동에서 의사결정만이 아니라 그 활동의 결과를 자본이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람중심의 경제는 경제 활동에 필요한 의사결정과 그 성과를 그 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소유구조, 의사결정, 노동 기여도, 자본 가격 등 구성 요소가 다르고 가격 결정, 수요공급, 소비자의 책임 등 운영 시스템이 자본 중심 경제와 다르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활동이 쉽지 않다. 오히려 자본의 힘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되었고 더 팽창하였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1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 협동조합 조합원은 10억 명이라고 한다. 현재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 정도이고 경제 활동 인구를 50억 명 정도로 추산한다면 협동조합인은 20%에 이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협동조합이 그 정체성과 가치의 역동성을 잘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농협 조합원이 많아지거나 사업이 확장된다고 해서 한국사회에 사람중심의 경제, 민주적 가치가 확산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자본이 경제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자본은 큰 영향력을 미칠 경제사업의 시작을 가능하게 하였고 사업의 위험을 감당하였다. 사업의 성공은 더 큰 자본의 결집을 가능하게 하고 혁신을 촉진시켰다. 많은 사람들이 로또에 열광하듯이 열매가 크면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순환과정을 통해서 자본은 커져만 갔고 국가의 범위를 넘는 수준까지 성장하였다. 결국 누가 위험을 감당할 것인가가 키워드였다. 상품경제에서 파생하는 위험을 자본이 감당하면 자본 중심의 경제가 형성되고 사람이 감당하면 사람 중심의 경제가 될 것이다. 위험은 결국 비용과 손실이다. 노동은 이러한 위험을 직접적으로 감당하지 않았다. 감당할 여력도 없었고 자본이 그런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다.

위험을 감당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발생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환경에 대한 자본의 접근 방식이다. 물, 공기, 산림 등 자연조건은 사람이 생존하고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기초이자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하지만 자본 중심의 경제에서 이 자연환경은 수익을 높이기 위해 치르는 비용에 불과하다. 가령 공장폐수 처리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경제행위는 자본의 입장에서 수익을 증가시키지만, 사회 전체에서는 수질악화로 인한 식수 비용 증가, 환경악화의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경제학의 목적이 행복추구라고 한다면 자본 중심의 경제현실은 다수의 행복을 침해하는 이율배반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이러한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법률과 제도를 통해 이를 강제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그런데 국가가 이익균형자 역할에 충실해야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국가권력 획득방식조차 자본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이율배반현상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기업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충돌할 때 시장거래에서 해당 기업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할까? 시장거래에서 그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장 진입 절차를 까다롭게 하거나, 가격형성에 반영하거나, 사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험 같은 장치들을 도입해야 한다. 이 같은 장치들은 결국 비용을 상승시킨다. 비용 상승은 곧 수익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존시장의 기득권을 쥐고 있는 자본은 이를 쉽게 용인하지 않는다. 이 같은 개념에서 사람중심의 경제는 기업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충돌할 때 사회의 이익을 우선해서 작동하는 질서라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이 사람중심의 경제를 실현해가는 과정은 평탄치 않다. 무엇보다 기존의 질서와 새로운 질서는 양립하기 어렵다. 더 근본적으로는 기존의 시장 질서를 시장 안에서 개혁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기존 질서를 끝내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무력 혁명을 하거나, 합법 선거를 통해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개혁을 하는 것이다. 합법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사례도 많은데 북유럽 국가를 제외하고는 그리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지는 않다. 가장 비극적인 사례는 칠레의 아옌데 대통령이다. 혁명이나 선거 두

가지 방법 모두 기존 시장에서 새로운 질서를 도입하고자 한 것이다. 기존 시장이 의미하는 것은 기초적인 질서를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곧 기울어진 경기장에서 하는 경기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 기존 시장에서 사람중심의 경제가 독점자본, 과점 기업과 전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협동조합은 사람 중심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었으나 사업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자본을 키우는 데는 그리 성공하지 못했다. 애초 자본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구조로 출발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할 만한 매력적인 열매를 키울 수 없었다. 협동조합은 안정적인 운영이 일반화된 기조여서 자연스럽게 보수적인 경영으로 흐르게 된다. 또한 협동조합은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혁명과는 거리가 멀다. 다만 현실에서 스스로 하나씩 하나씩, 그것도 비폭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다. 그런데 기존 질서가 끝나고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변화가 축적되거나 단기간에 강력한 힘이 가해져야 한다. 이러한 현실론 또는 점진적인 방식이 사람중심의 경제가 갖는 혁신적인 가치와 그 방법에 대한 접근을 협소하게 만들고 심지어 방해했는지 모른다.

2. 새로운 관계는 새로운 시장에서 가능하다

사람중심의 경제가 실현된다는 것은 새로운 질서가 작동한다는 의미이다. 그 질서란 소유구조, 의사결정, 노동기여도, 자본 가격 등 구성 요소가 다르고 가격 결정, 수요공급, 소비자의 책임 등 운영방식이 다르게 작동한다. 협동조합은 그동안 구성 요소들은 다르게 형성되었지만 운영방식은 자본기업과 다르지 않았다. 노동인권, 환경보호, 농업회생, 윤리적 사회 등을 위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생산과 소비 과정에 감안해서 가격을 형성하고 이를 소비하지 않은 것이다. 사람중심의 경제는 자본 중심의 경제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그런 비용을 들이고도 소비자 가격이 높아지지 않으려면 결국 자본 조달 비용과 자본 수익을 줄이면 된다고 생

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 사업에서 노동자나 농민들이 만든 자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자본 이익을 순순히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협동조합 사업에서 자본 조달 비용이 줄지 않고, 소비자 가격을 높이지도 않으면서 사람중심의 경제를 위한 제반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가 새로운 질서의 시작여부를 결정한다. 사람 중심 경제는 이처럼 불리한 조건에 놓여있는데 그 상태에서 자본기업의 권력과 경제력이 막강한 기존 시장에서 자리를 잡는 것은 매우 어렵다. 기존 시장에서 자리를 잡는다고 해도 사람중심의 경제 질서를 실현하기보다 기존 질서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협동조합은 더 싼 가격을 찾고, 이를 위해 농민협동조합은 이웃지역의 농민을 배제하고,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는 3세계 노동자의 노동 가치를 외면하고, 노동조합의 노동자들은 바로 옆 동료가 자신과 같은 일을 하는데 60%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현실을 외면한다. 구조는 협동조합으로 설립되었지만 그 내용은 자본기업과 다르지 않다. 생존본능이 모든 생명체의 기본 동력인 것처럼 모든 조직은 생존을 우선으로 작동한다. 기존 시장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협동조합은 그 이상과 가치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생존을 위해서 그 가치를 포기하거나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에 사람중심의 새로운 질서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기존 시장이 아닌 시장 주변부와 외부에 새로운 시장을 구축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장의 주변부와 외부에서 새로운 시장을 구축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시장은 상품이 거래되는 곳이다. 일반적인 시장 상품이 거래되는 곳은 여전히 기존의 질서가 작동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로운 시장은 새로운 상품 즉, 시장 상품이 아닌 '독자 상품'[3]이 거래되는 곳을 의미한다. 이 새로운 시장은 넓은 의미에서 기존 시장이 확대된 것이므로 전혀 다른 시장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시장에 없는 상품이 새로운 생산-

3 독자상품은 관용적으로는, 유통업체가 제조사와 공동 기획하고 개발해서 자사 매장에만 출시하는 상품에게 붙이는 '프라이비트 브랜드(PB: private brand)'로 이해된다. 이 글에서는 소비자 협동조합이 그 협동조합의 운동 이념과 조합원의 바람을 담아 개발하여 독자적인 유통망을 통하여 공급하는 그 협동조합만의 상품을 의미한다.

유통-소비 질서를 구축하는 교환과 거래의 공간, 질서라면 새로운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 시장에 있는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굳이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기존 시장에 없는 상품이란 무엇일까? 넓은 의미로는 모든 상품은 이미 개발되어 있다. 다만 조금씩 진화할 뿐이다. 간단한 개선, 혁신과 창조가 반복되는 변화의 단계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융합이 작동하고 돌연변이도 발생한다. 그럼에도 기존 시장의 상품이 아닌 독자 상품이란 개념이 성립 가능할까? 논리적으로는 기존 상품의 영역이지만 현실에서는 독자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한 생협들의 상품은 유기농산물과 간단한 가공식품이 중심이었고 시장의 주변부에서 시작했다. 일종의 독자상품이라고 할 수 있었다. 기존 시장에 유기농산물이란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독자상품은 시장 상품이면서 시장 상품이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시장의 주변부 상품으로 시작되어 틈새시장을 개척한 후에 기존 시장 안으로 들어오려는 경향이 강한데 이런 경우는 독자상품이 되지 못한다. 독자상품은 시장의 경계에서 시장 밖으로 나가려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품의 출발은 소비자 요구에 따른 맞춤형 생산이다. 예를 들어 대량생산 양복과 맞춤형 양복은 양복이라는 같은 카테고리의 상품이지만 현실에서는 같은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 주문자 생산 방식은 이미 기존 시장의 영역에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독자 상품은 주문 생산 상품에서 한발 더 나아가 판매 대상을 한정하면서 돈만 주면 누구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자격(여기에서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이 시작된다)을 갖춘 소비자에게만 공급한다. 독자상품은 생산, 유통, 소비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상품이자 시장의 기초가 된다.

이러한 독자 상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새로운 상품인 독자 상품만이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면서 경제 관계에 참여한 다양한 사람들의 이익을 최대한 뒷받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비자, 농민, 노동자, 환경보호, 세계 평화 등을 위한 비용추가를 감당할 수

없다. 하지만 독자 상품이 곧바로 높은 생산성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우선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면서 상품 브랜드 포지셔닝으로 절반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나머지 절반은 농민, 노동자, 소비자의 협동 관계를 재조직하면서 얻을 수 있다.

새로운 시장의 필요성은 기존 시장의 역사와 현재를 보면 명확해진다. 현대 산업사회의 경쟁은 자연스럽게 독점, 과점체제를 만들면서 자유로운 시장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법으로 조정하려 하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세계시장이 만들어지면서 글로벌 기업의 작동은 독점, 과점체제를 더욱 강고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흐름은 자연스럽게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거꾸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을 높여준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존 시장에서 제한당한 소비자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할 수 있으면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품을 자본기업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수지가 맞지 않아서 뛰어들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그 시장을 자본이 스스로 없애온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자본이 스스로 없애버렸다고 해도 새로운 시장이 커지면 자본은 자연스럽게 다시 참여할 것이다. 그때의 자본은 기존 자본이 아니라 새로운 자본일 것이다. 기존의 자본은 수익한계에 빠져서 새로운 시장에 참여할수록 기존 시장의 수익이 축소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기존 자본은 새로운 도전자에 대응하기 위해 새 방어책을 쓰기도 한다.

새로운 시장을 구축하고 자본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찾는 새로운 상품이 오직 새로운 시장에만 있어야 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가 알아야 한다. 비슷한 특징의 상품이 기존 시장에 있다고 해도 그 상품과 유사할 뿐 같지 않다. 예를 들어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 홍길동 생산자의 고구마와 유기농 우리밀 라면은 새로운 시장에만 공급된다. 기존 시장에도 유기농 고구마, 우리밀 라면이 있지만 같은 상품이 아니다. 이러한 상품을 기존 시장에도 공급하게 되면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다.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상품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소비자에게만 공급되면 그에 따른

수요와 공급이 작동되면서 새로운 시장(두 번째 시장)이 형성되게 된다. 조합원만을 위한 농장, 조합원만을 위한 공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본이 비슷한 상품과 별도의 소비를 구축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장(세 번째 시장)이 형성된다고 해도 그 시장은 별도의 시장일 뿐이다. 언뜻 보면 새로운 시장의 질서는 기존 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시장의 규모가 작고 가격에 의한 수요 공급이 작동하지 않는 방식을 도입하면 자연스럽게 경쟁이 완화된다. 일정한 수준의 경쟁이 필요하지만 과도하면 적자생존이 발생한다. 너무 치열하면 독과점체제가 형성되고 너무 안일하면 소비자가 떠난다.

우리는 히말라야에서 아프리카 오지에 이르기까지 코카콜라가 공급되는 시장에서 살고 있다. 자본 또한 기본적으로, 때로는 부차적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만큼 기존 시장의 힘은 세계에서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본의 요구가 아닌 소비자의 요구를 지향한다 해도 실제 제공할 것이 많지 않다. 일본 생협에서 벌어진 NB(National Brand)와 PB(Private Brand)[4]를 둘러싼 논쟁은 이러한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논쟁의 요점은 이렇다.

소비자 조합원이 원하는 상품을 공급하는 것은 소비자 협동조합의 기본이자 민주적 운영의 요체이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신라면' 같은 시장상품(NB)을 원한다면 민주적 운영의 원리에 따라서 공급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생협이 독자 개발한 주문자 상품(PB)으로만 공급하는 것이 맞을까? 이 논쟁의 결론은 시장상품(NB)을 공급하는 것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다. 소비자 협동조합은 PB나 독자상품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생협은 대부분 공동구입-가격인하를 목적으로 한-NB 공급이 일반적이었다. 그런 토대 위에서 주문자 상품(PB)이 개발되었다고 갑자기 시장상품(NB)의 공급을 중단한다면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인 조합원 민주주의를 위반하게 된다. 따라서 주문자 상품(PB)을 목적

4 판매업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상표. 백화점, 슈퍼마켓 따위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상품에 붙인다.

으로 활동하는 생협은 어느 날 갑자기 조합원들이 신라면 공급을 원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의 설립목적과 취급 물품에 대한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PB를 일반화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독자상품의 성공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독자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생산자에게도 큰 부담이고 그것에 대해 일정한 소비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소비자에게도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독자상품을 얼마나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의 열망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생산자, 직원에게 미래 가치를 얼마나 보여줄 수 있을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시장상품(NB)만이 아니라 주문자 상품(PB)도 독자 상품이 아니라 시장상품이다. 독자상품을 개발해가는 과정에서 PB는 불가피하다. 개발 노하우와 시장의 흐름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새로운 생산자와 공급자가 새로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 새로운 시장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사회질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3. 새로운 시장은 꼭 필요한가?

협동조합에게 새로운 시장은 꼭 필요한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많은 협동조합은 기존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비중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시장의 지배자는 자본기업이다. 그런 흐름에서 북유럽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협동조합들은 기존 시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단순하게 보자면 그 나라의 유통산업이 발전하는 시기부터 소비자 협동조합이 존재해서 유통시장을 선점하거나, 시장의 주요 행위자로 유통산업의 발전 흐름을 적극 받아들이며 자연스럽게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시장의 유통 사업은 상

품(예: 신라면)을 가장 저렴하게 공급하는 경쟁인데, 일정 규모를 갖추게 된 협동조합의 경쟁력과 정도 경영으로 손실 위험률이 낮으므로 시장점유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성공사례가 일반화되려면 후발 협동조합도 같은 경로로 기존 시장에 안착할 수 있어야 했다. 안타깝게도 유통산업이 현대화된 이후에 출발한 협동조합은 규모화를 이루기 전에 기존 시장의 대규모 자본기업과 경쟁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큰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생협이 시작된 1980년대 후반기는 대형 할인점이 도입되면서 유통산업 현대화가 본격화된 시기다. 생협들은 규모의 효과는 고사하고 생존 자체를 위협받으며 기존 시장의 주변부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격차는 유럽과 일본 생협이 걸었던 길을 포기하도록 만들었다. 새로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주변부는 아웃사이더들이 새로운 발상과 혁신을 준비하기 좋은 위치이기도 하다.

협동조합이 기존 시장의 주도자로 서지 못한 보다 본질적인 원인은 협동조합 그 자체에 있다. 협동조합은 그 목적과 방법에 의해 존재 영역이 다양한데 목적에 따라 공동이용, 비용절감, 공동소유로 구분할 수 있다. 공동이용은 공동으로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것으로 소비자 협동조합, 의료, 육아, 금융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협동조합의 목적에는 비용절감 효과가 포함되나 부차적이다. 비용절감은 공동이용과 우선순위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농민, 도매 협동조합 등이 비용절감을 우선목표로 하는 협동조합들이다. 공동소유는 사업의 성격과 상관없이 공동소유를 통해 존재형식을 바꾸려는 것으로 노동자협동조합, 지식협동조합, 언론 협동조합 등이 있다. 협동의 원리가 지식, 언론 등 사업의 내용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하나의 목적만을 위한 협동조합은 작동하지 않는다. 또 공동요구의 우선순위가 변하기도 한다. 가격인하를 우선하다가 직접 생산을 시도한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 농자재 공동구입을 통해

비용을 낮추다가 판매 사업이 중심인 된 농협 등이 그렇다.

이렇게 다양한 사업의 형태와 영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성격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금융협동조합은 기존의 시장 구조에 근거해서 작동될 수밖에 없다. 기존 시장이 붕괴되면 금융협동조합도 붕괴된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협동조합 은행은 건실하게 생존해 주목받았다. 당시 금융시장 중에서 고수익 고위험 파생상품 시장이 붕괴되었는데 협동조합 은행은 그 시장에 뛰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금융위기가 경제전반의 위기로 발전해서 세계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였다면 협동조합 은행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정도의 경제위기에서 자유로운 협동조합은 거의 없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기존 시장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협동조합은 비교적 충격이 약할 것이다. 지진의 진앙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충격이 약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같은 이치로 농민 협동조합의 주요 시장은 기존 시장일 수밖에 없다.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폰테라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많은 농민의 생산물을 팔고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시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제 3세계 농민들의 고통을 신경 쓰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노동자 협동조합인 몬드라곤은 노동자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들 협동조합은 자연스럽게 자유무역을 옹호하게 되고 기존의 세계 경제 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이다. 더 싼 가격만을 추구하는 흐름에서 지속가능한 농업과 노동의 가치, 공정무역은 존재할 수 없다. 이들의 요구에 가장 알맞은 사업자는 기존 시장에서 뿌리내린 사업체들이다. 이들은 아웃소싱과 수직계열화, 비정규직 노동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기존 자본기업이 능숙하다. 신라면을 보다 싸게 구매하려는 소비 협동조합이 시장에서 밀려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협동조합의 DNA는 사람중심의 경제이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자본 중

심의 시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나마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은 새로운 상품에 대한 요구가 있는 소비자 협동조합이다. 기존 시장이 충분히 자유롭고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다면 공동이용의 필요성이 생겨날 일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시장은 기존 시장에서 충족되지 못한 새로운 요구가 사업의 목적이 되는 협동조합에만 필요하게 된다.

4. 더 높게 날기 위해서는 더 높은 출력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강한 동력이 필요하다. 높은 생산성, 수준 높은 브랜드, 인간과 지구의 공존을 위해 협동조합에게는 강한 동력이 필요하다.

1) 소비자: 이용과 자본

소비자 조합원 간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 즉 최소한의 상호성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그 책임을 높여야 한다. 소비자 조합에서 소비-공동구매-는 책임이 아니라 권리에 가깝다. 공동구매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은 약속을 어긴 측면도 있지만 공동구매의 이점을 떨어뜨리게 한다. 하지만 권리의 사용을 강제할 방법은 딱히 없다. 따라서 조합원의 책임은 소비의 이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자본 조달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자본 조달이 강화되면 공동구매의 힘이 강화되고 나아가 기술개발, 상품개발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쿱의 수매선수금 같은 성격의 자본금은 이기적 동기가 이타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대표적 사례이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먼저 자본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책임을 지면서 조합(협동)이 그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지를 보려 할 것이다. 이러한 소비자의 상호성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자본과 결집되지 않는 공동의 힘을 바탕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소비자는 위험회피를 당연하게 여긴다. 복권 당첨이 사전에 확인될 수

있다면 누구나 복권을 구입할 것이다. 하지만 위험은 줄일 수 있는 것이지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협동조합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 어려움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데 자본 기업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입증된다. 이 과정에서 많은 활동가와 직원의 헌신이 마중물로 작동하였다. 성과물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참여하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그들의 책임도 높아져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면 '무임승차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마중물 효과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여자 우선 원칙'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데 소비 그 자체를 통해서는 기여자 우선 원칙을 실현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기여자에게 물품가격, 조합비 등을 할인하는 방법이 있으나 그 관리가 어렵다. 따라서 성과가 확인된 소비에 대해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자본에 대한 책임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것이다. 가입출자금과 이용출자금을 조금 높이는 수준이 아니라 조합의 자본조달 비용이 0에 도달할 수 있는 자본 총액을 목표로 1인 당 조합원 수로 나누어서 조합원의 책임 출자금으로 정한다.

2) 농민: 생산량, 가격결정, 소비자 설득

농민의 역할은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고 언제 얼마큼 생산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농업생산에서 생산만큼 중요한 것이 판매다. 하지만 농업 생산물의 생산과 소비는 전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바이오 에너지와 같이 비식품적인 요인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규모화 일반화되고 있다. 따라서 제반 변수를 모두 고려해서 적절한 생산을 결정하는 문제조차 농민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다.

한편으로 생산 방법의 일반화는 생산물 가치를 높이는데 어려움을 겪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농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 역할인 가격 결정, 생산량 결정의 역할을 품목별 단체 등으로 넘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농민들은 그에 대해 충분히 동의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공동출하 정도의 역할 분담으로 농업의 어려움을 줄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농민 협동조합은 충분한 협력 체제를 통해 시장 변화에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협력의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이조차도 협동조합의 충분한 역할로 보기 어렵다. 보다 본질적인 역할은 현재의 시장구조에 있다. 생산자와 품목별 단체에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한편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소비자가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편리성, 이미지를 구입의 중요한 요소로 삼는다. 이러한 관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생산자가 소비자를 직접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시장 경제에서 가능하지 않은 일이며 매우 힘든 과정이다.

3) 노동자: 생산-고용 유연성

시장경제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는 무엇일까?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지속될 문제는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문제일 것이다. 소비자가 무엇을 얼마나 구입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동차, 컴퓨터 등은 소비자 주문 즉시 제작 방식을 도입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품은 추정을 통해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생산소비 불균형은 항상 지속된다. 소비되지 않는 상품을 어찌할 것인가? 물론 덤핑 등으로 다양한 소비채널을 만들겠지만 생산비가 보장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상품의 가치는 결국 소비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급자들은 판매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주장한 '자유로운 시장'은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힘의 균형상태일 뿐이고 그 균형은 깨져서 시장 과점과 독점화 경향이 필연적으로 진행된다. 결국 이기적인 행위가 타인의 행복을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타인의 행복을 빼앗기도 한다. 보다 현대적인 문제는 과점기업이

부패한 뒷거래로만 형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정치권력과 결탁한 자본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SK텔레콤은 국유기업을 인수해서 시작했지만 상당한 통신품질을 이루어 냈기 때문에 독과점 형성이 가능했다. 과점 독점 기업이라 해도 첫 번째 요건은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이 유지되어야 한다. 결국 과점기업은 다수 소비자의 선택을 바탕으로 성립한 것이다. 상품의 품질을 올리고 유지하는 과제는 기본적으로 노동하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된다. 설비의 비중이 커지는 경향이 많지만 그 설비조차도 노동의 힘으로 만들어 낸다.

그렇다면 협동조합에서 노동은 어떤 역할로 협업을 이루어야 할까? 이는 자본 중심 기업에서도 쉽지 않은 생산-고용 유연화에 관한 문제이다. 소비되지 않는 상품이 발생하면 노동 가치는 어떻게 될까? 노동자 스스로가 주인으로 기업을 운영할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생산과 소비의 불일치는 재고로 나타난다. 다양한 노력으로 재고를 줄일 수는 있다해도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주문량 자체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고정 생산비, 특히 노동력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판매 흐름에 비례해서 생산요소를 줄일 수 있으면 고정자산 투입 비용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의 문제만 남는다. 하지만 노동력은 다른 생산요소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서 투입을 자유롭게 하기 어렵다. 비정규직, 시간급이 강화되는 현상의 이면에는 생산-고용 유연화 문제가 있다.

노동력이 다른 생산요소와 다른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야말로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핵심은 지속성이다. 지속성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른 생산요소와 다르게 노동하지 않아도 생활 할 수 있는 비용이 필요하다. 생산설비는 가동하지 않아도 유지관리비, 감각상각비 등이 투입되지만, 이에 대한 고정 지출이 많지 않고 매각하거나 빌려줄 수도 있고 감각상각이

끝나면 폐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노동자는 기계나 원재료처럼 유연하지 못하다. 따라서 생산 감축, 고용유연화에 대해 노동자들의 격렬한 저항이 일어나는 것이다. 협동조합도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소비흐름에 맞추어 생산과 공급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기업의 중요한 경쟁력인 시대이다. 대신 노동의 지속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이 문제를 결정한다. A라는 상품을 만들던 노동자가 B라는 상품(혹은 기업)을 만드는데 투입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경우 진정한 생산-공급 유연화가 이루어진다.

물론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소득과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이 제도는 실업보험, 재교육, 재취업 알선 같은 것으로 대체로 국가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5] 일반적으로 국가의 역할은 너무 포괄적이라 노동력의 재투입에 큰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생산 기업 단위에서 벌어지는 생산요소 투입량의 변동에 대한 반응속도가 느리다. 결국 이 문제는 완전고용을 전제로 기업연합체에서 담당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농민이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 개인적으로 결정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처럼 노동자 스스로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에 대해서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 결국 어떻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이 오차를 조정할 수 있는가에 의해 기업의 경쟁력이 결정된다. 협동조합은 이러한 생산-고용유연화에 가장 적합할 수 있다.

5. 마치면서

이 글은 협동조합이 왜 많은 이들의 열망을 담아내지 못했는가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쓴 것이다. 예를 들어 부산이라는 도시를 가기 위한 방법으

5 스웨덴에서 실업보험은 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로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부산에 가는 방법은 굳이 협동조합이 아니더라도 다양하며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지속가능한 농업이나 고용이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 같은 요구는, 부산 가는 길에서는 찾을 수 없고 달나라를 가야만 해결될지 모른다. 달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그만한 추진력을 갖추어야 한다. 굳은 결의와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 icoop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에서 길을 찾자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장)

2013년은 한국 협동조합사에 큰 족적을 남긴 한 해였다. 지난해 연말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되면서 1년도 채 되지 않아 협동조합 3천여 개가 만들어졌다. 국내외 협동조합 전문가들도 깜짝 놀랄 정도의 성과였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30%가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과연 협동조합이 대안 경제 모델로 지속할 수 있을까?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할까?

신성식의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는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다. 그는 협동조합이 왜 많은 이들의 열망을 담아내지 못하는가에 대한 검토를 위해 이 글을 썼다고 말한다. 협동조합의 맏형격인 생활협동조합의 전문 경영인으로 오랜 시간 직접 경험하면서 쌓인 생각들을 정리해 놓았다. 그는 협동조합이 나아갈 길로 첫째, 새로운 시장으로 협동조합 방향을 바꾸고, 둘째, 조합원의 결합력을 자본기업보다 높이자고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날 협동조합의 문제점으로 '기존시장에 있는 상품을 제공하는 것', '조합의 자본조달비용이 높은 것' 등을 꼽았다.

두 가지 부분에서 의견을 나눴으면 한다. 하나는 기존 시장과 협동조합 시장은 과연 구분되는 것인가? 또 다른 하나는 호혜와 협동의 사람중심 협동조합에서 출자금을 통해 조합원의 결합력을 높이는 것만이 능사일까?

기존 시장과 협동조합 시장은 과연 구분되는 것인가?

우선 시장의 구분에 대해 짚어봤으면 한다. 협동조합의 대가 스테파노

자마니 볼로냐대 교수의 말처럼 협동조합은 기존 시장경제와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완의 역할을 한다.

"협동조합이 자본주의에 대항한다거나 대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기업의 대안(alternatives)이다. 시장경제 안에는 자본주의적 경제, 공공경제와 함께 협동조합경제가 공존할 수 있다."

신성식의 글에서는 읽는 사람에 따라서는 자본중심, 사람중심 두 개의 경제가 분리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협동조합은 새로운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여기에서 또 다른 대안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 여기(here and now)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는 노력이 협동조합 운동이다. 따라서 협동조합 운동은 기존 경제를 보완하는 역할에서 시작한다.

협동조합에서 출자금을 통해 조합원의 결합력을 높이는 것만이 능사일까?

협동조합 구성원의 자본력을 자본기업보다 높이자는 의견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신성식은 "'자본이 경제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로 자본이 큰 영향력을 미칠 경제사업의 시작을 가능하게 했고, 사업의 성공은 더 큰 자본의 결집을 가능하게 하고 혁신을 촉진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는 자본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으로까지 비춰질 수 있다. 협동조합은 자본에 대한 지나친 추종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과 이어진다. 더 큰 자본의 결집은 혁신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필자의 지적대로 "사회 전체에서는…환경 악화의 비용을 지불하게 해서…다수의 행복을 침해하는 현상"을 가져왔다. 즉, 사람들이 자본을 지나치게 추종하면서 오히려 다수의 행복이 침해되고 소수의 이익 독점이 초래되었다. 협동조합은 자본 대신 다수의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가능하다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신성식은 "조합의 자본조달비용이 0에 도달할 수 있는 자본총액을 목표로 1인 당 조합원 수로 나누어서 조합원의 책임 출자금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동전의 양면처럼 자본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보일 수도 있다. 물론 자본조달비용이 0에 도달할 수 있다면 왜 나쁘겠는가. 하지만 협동조합의 힘은 자본조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많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는 조합원들과의 관계의 힘에서 온다.

자본기업과 비교할 때 협동조합 기업은 자본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자본은 우선 조합원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 협동조합 7원칙 중 3번째 원칙에 따라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자본조달에 공정하게 참여하며 자본을 민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즉,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사업이용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자본을 조성한다는 뜻이다. 협동조합의 자본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합원 출자와 더불어 협동조합 내 발전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에서는 사람이 자본을 통제한다. 따라서 조합들이 협력하면 더 많은 자본도 만들어 낼 수 있다.

신성식이 지적하고 있는 '생산-고용 유연성'은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다. "협동조합은 생산-고용 유연화에 가장 적합할 수 있다"고 결론을 맺고 있지만, 어떻게 가장 적합한지 설명이 덧붙여져 있지 않다. 얼핏 잘못 이해하면, 경기가 나빠지면(재고가 늘어나면) 자본 중심의 기업과 달리 사람 중심의 기업인 협동조합에서 쉽게 노동력을 줄일 수(즉, 해고할 수)있다는 말로도 들릴 수 있다.

이 대목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봤으면 한다. 협동조합은 본질적으로 잉여를 많이 내(생산요소의 최대한 활용 등을 통해) 이익을 나누자는 측면과, 어려워졌을 때 손해(위험)를 같이 분담하자는 의미도 담고 있다. 과도한 자본 투입으로 경기의 변동이 지나치게 된 지금, 자본을 가지지 못한 다수가 경기의 변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콩 한 알까지 나눠 먹는다"는 생각으로 위험을 함께 나눠가져야 한다. 그것이 협동조합의 정신이다.

협동조합은 사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었으나, 사업 위험을 감

당할 수 있는 자본을 키우는 데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필자는 말한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개별 협동조합이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자본 중심 기업에 견줘 분명히 한계가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 컨소시엄, 즉 협동조합을 이어주는 지역별·산업별 네트워크는 작은 협동조합 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각 단위 조합의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들 네트워크는 자본 조달 면에서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정보를 유통시키고 혁신을 공유하도록 해 줄 수 있다.

자본주의가 꽃을 피워 자본이 권력을 독점한 상황이지만, 더 이상 효율과 이윤만이 유일한 합리적인 근거가 아니다. 협동조합에서 모아지는 협력의 힘이 자본 못지않은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 협동조합에 대해 신성식은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갖는 데는 녹록치 않은 한국 협동조합의 여건에서 지금의 성과를 내는 어려운 과정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가치의 역동성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조심스러운 접근이지만 다소 비관적으로 보인다. 막 싹 트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운동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긍정과 격려의 의견도 중요하다.

협동조합 연구가 존스턴 버첼 영국 스털링대 교수는 "협동조합 연구자들의 임무는 비판적이면서도 파괴적이지 않아야 하고 환상을 깨면서도 희망을 꺾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운동은 풀뿌리 차원에서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격려와 독려가 더 필요하다.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 오랫동안 협동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만든 협동조합 7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선배 협동조합들이 생생한 경험을 더 적극적으로 나눴으면 한다. 실제 협동조합을 꾸리면서 어떤 애로점을 겪을 수 있고, 어떻게 걸림돌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지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공유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한다.

파고르 파산의 교훈

최근 세계 협동조합계를 놀라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노동자협동조합의 이상적 모델로 오랫동안 칭송받던 몬드라곤 협동조합 기업집단의 파고르전자가 파산 신청을 했다. 세탁기, 냉장고 등 백색가전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이니 스페인의 부동산 거품 붕괴, 그리고 곧 이은 유럽연합의 위기에 직접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저가 아시아 제품과 경쟁에서 치이고 스페인 경기침체에 눌려 고전을 면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이 임금 20%를 자진 삭감했지만 경영실적 하락을 되돌려놓기엔 힘이 달렸다.

지난 5년간 몬드라곤 내의 협동조합들은 파고르전자를 살리기 위해 약 4억 달러 규모로 '협동조합 간의 협동'(협동조합 제6원칙)을 실천했다.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계속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모양이다. 몬드라곤 그룹은 자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파고르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스페인 바스크 정부는 몬드라곤 그룹이 파고르 자금 지원의 효과가 없으리라고 보는 상황에서는 정부도 할 역할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속 협동조합 간의 연대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파고르의 자금지원 요청에 그룹 소속 유통협동조합 에로스키와 다른 두 조합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에로스키 역시 경쟁에 치여 경영난에 빠진 상태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스테파노 자마니 교수에게 파고르 파산신청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의견을 물었다. 그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말했다. 몬드라곤 협동조합 기업집단이 글로벌화 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또 국제화하는 과정에서 수직적 계열화가 이뤄지면서 지배구조에 문제가 생겼다. 협동조합이 기존 시장의 기업처럼 하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적 지배구조와 경영 자체에 협동조합 원칙이 배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파고르와 같은 실패사례를 통해 협동조합이 기존 자본 중심의 기업과 다른 새로운 시장을 추구해야 하는지, 협동조합의 취약성이 어디에 있는

지, 네트워크화와 기금, 그리고 노동금고나 보험과 같은 협동조합 금융으로도 막을 수 없는 위기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분석해야 한다.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를 쓴 신성식 경영대표처럼 협동조합 경영에 오랜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며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혜를 모아갔으면 한다. icoop

나무로서 협동조합과 숲으로서 협동조합: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에 대한 단상

장종익 (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교수)

1. 들어가며

아이쿱생협 신성식 경영대표는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에서 두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는 “우선 기존 시장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는 협동조합 운동의 방향을 새로운 시장으로 바꾸자는 것”이고, 둘째는 “이를 위해 협동조합 구성원들의 결합력을 자본 기업보다 한 단계 이상 수준으로 높이자”는 것이다. 신성식의 이러한 주장을 경영학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주장은 사업전략(business strategy)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주장은 기업조직전략(corporate strategy)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사업전략과 관련해서는 차별화 혹은 틈새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기업조직전략과 관련해서는 조합원의 책임수준 제고를 주장하였다. 반면 직원이나 농민에 대해서는 협동조합 사업에 대한 자본 제공을 통해 책임수준을 제고할 것과 파트너십의 강화 외 뚜렷한 전략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2011년에 출간한 『새로운 생협운동의 미래: iCOOP생협 정책연구』에서 펼친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이를 집약적으로 요약한 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글에서 신성식은 생협 대신에 협동조합이라는 보다 일반화된 범주의 용어를 사용하여 생협 운동의 방향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생협은 협동조합의 한 유형이라는 점에서 생협의 구체적인 목적과 사업 및 조직전략이 사업자협동조합이나 노동자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의 그것과는 다를 수 있고, 개별 협동조합이나 한 유형의 협동조합부문의 발전 전략

과 한 나라의 전체 협동조합섹터(숲으로서 협동조합)의 발전 전략이 서로 층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필자가 보기에 그의 글이 우리나라 협동조합운동의 전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인지, 생협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이쿱생협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인지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첫 번째 의도로 쓴 것이라면, 생협의 특수성에 의존하여 협동조합 운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는 생협 외 다른 유형의 협동조합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혼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생활재공동구매 소비자협동조합의 경험, 그 중에서도 친환경농식품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한국 생협의 특수한 경험에서 나온 사업전략과 기업조직전략이 다른 유형의 협동조합에도 적용 가능한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성식의 글 제목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였다면 토론의 대상과 범위가 보다 명료하겠지만 그는 분명히 이를 뛰어넘어 사고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필자의 글도 협동조합 일반을 대상으로 쓰기로 한다.

2.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가치: 협동조합은 여러 대안 중의 하나이고 유형은 다양하다!

공식 경제조직 형태의 하나이자 전체 경제의 한 섹터로서 협동조합은 시장경제체제가 발전한 자본주의체제 이후에 등장하였다. 신성식은 협동조합의 정체성이 '사람 중심의 경제'라고 하였고, 그 가치는 '함께 행복하기'라고 집약하였다. 그의 이러한 집약에 필자도 동의한다. 그런데 그는 상품경제에서 왜 자본이 중심이 되었는지 질문하면서, 상품경제에서 파생하는 위험을 자본이 감당하였기 때문에 자본 중심의 경제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그는 이미 자본이 상당히 집적되어 있는 기존 시장에서는 노동자나 소비자가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수준으로 자본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경제인 협동조합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비약이다. 왜냐하면 사람 중심의 경제를 달성하는 방법은 시대적 환경에 따라 다양하고 달성의 정도와 경로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좀 길게 이야기를 풀어보기로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세 가지 원리로 작동한다. 첫째, 경제적 부의 생산을 위한 일의 조직화는 이윤극대화가 목적인 자본 중심의 주식회사를 기본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자본은 끊임없이 높은 이윤을 찾아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도록 사회의 제도와 의식을 개조해 나간다. 둘째,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배타적 사적 소유권 및 경쟁에 기초하여 보상을 결정한다. 이윤극대화, 경쟁기제, 사적 소유권이라고 하는 원리는 분업을 촉진시키고, 끊임없이 유휴 자원의 가치를 발견하는 자연과학적·사회과학적 기술을 개발하도록 한다. 이는 상품과 시장을 확장시키는 동기를 제공하여 단기간에 상당 부분의 인류를 절대 빈곤에서 탈출시킬 만큼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모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이윤극대화, 경쟁기제, 사적 소유권이 균형 있게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통해 경쟁기제를 마비시켜 착취를 강화하기도 한다. 경쟁기제가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일반적으로 정부 및 시민사회가 적절히 개입하지 않는 한 인간 및 환경 착취, 노동의 소외, 그리고 경쟁의 과잉을 불러온다. 또한 인간의 사회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한 상품화의 과잉 등으로 인해 윤리의식과 사회적 신뢰 및 연대의식을 잠식시킨다. 사적 소유권과 경쟁기제는 개인과 경제조직이 보유한 자산과 능력, 배경의 차이를 무시하고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따라서 자본과 권력을 많이 보유한 개인과 경제조직이 거래를 통해 더 많은 보상을 획득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다. 빈부의 격차가 필연적인 이유다. 협동조합운동의 선구자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논하기 이전에 복지국가와 공공경제부문의 도입을 통한 해결 시도를 먼저 짚어보기로 한다.

OECD 국가의 정부 지출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에 46%에 달한다. 미국은 2006년에 37%였는데, 이는 1920년대에 13%에서 거의 세 배 증가한 규모이다. 복지국가 스웨덴은 2006년에 54%이며, 한국의 경우도 2010년에 31%에 달한다. 협동조합의 비중이 가장 큰 이탈리아의 협동조합 고용비중이 약 7%인 것에 비하면 매우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지출의 비중을 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소비자협동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윤리적 소비'이듯이 정부도 윤리적 소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 대표자들은 1인 1표를 통하여 민주적으로 선출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어 주식회사보다 협동조합과 같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사람 중심의 경제를 논할 때, 공공경제영역을 사람 중심 경제의 중요한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공경제 영역을 어떻게 실질적 민주주의가 발휘되는 구조로 혁신하여 '윤리적 소비' 및 '윤리적 생산' 주체로 전환시켜 '함께 행복하기'의 튼튼한 둥지로 만들 것인가가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부문의 활성화가 경제민주화 과제 실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경제부문이 정부 및 지방자치체의 사회책임조달제도의 도입과 원자력 유지정책의 폐기와 재생에너지 정책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금융자본주의단계에서 금융자본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규제와 거대한 국민연금 및 각종 정부기금의 '윤리적 투자'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공공경제와 정부의 복지정책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문제점을 정치적 차원에서 게임 규칙의 개선을 통하여 해소하려는 시도였다면, 협동조합 운동은 경제 주체들이 시장경제에서 비자본주의적 원리를 지닌 새로운 기업형태를 도입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문제점에 대응해나간 경우이다.

19세기 중후반에 발생하기 시작한 유럽의 소비자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자본가의 착취에 대응하는 것

이 주요 목적이었다. 당시에는 상품이 부족하여 공급자가 주도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생필품 시장은 생산기업과 상인의 독점적 지위가 강했고,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를 규제하는 정부의 역할은 매우 미흡했다. 공급자와 상인들은 부당한 가격부과 행위, 품질 및 중량의 속임수 행위를 통하여 소비자를 착취하였다. 유럽의 소비자협동조합들은 이러한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소비자 착취에 대응하여 설립된 것이다. 영국이나 스웨덴의 소비자협동조합의 발전과정을 보면, 이용고배당(patronage refund)이라는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소비자조합원들의 조합 사업 이용률을 높이고 도매 및 제조부문까지 진출하여 소매시장부문의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발전하였다. 당시 영국 소비자협동조합은 밀가루 공장, 설탕 공장 등 수백 개의 대규모 제조기업을 보유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영국과 스웨덴의 소비자협동조합의 사업 활동은 '새로운 시장'의 개발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기존에 유통되던 상품'의 가격과 품질을 정직하게 거래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 착취를 방어하였다. 착취를 당하는 소비자가 소매유통기업을 소유하고 더 나아가 도매기업, 제조기업을 소유하면서 투자자 소유기업의 착취 유인을 현저히 축소시킨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소비자협동조합의 설립으로 소매유통기업과 소비자와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새로운 상품을 취급하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이후 대량생산체제가 도입되고, 소비자협동조합의 활동 등으로 정부가 독과점 규제와 공정거래제도 도입 등 시장 감독자 역할을 강화하면서 유럽 소비자협동조합들은 그동안 소유하고 있던 생산공장을 대부분 매각하였다. 소매유통부문의 소비자협동조합이 생산공장을 소유함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착취에 대한 방어)이 감소되고 제조업에 특화된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 비효율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오늘날 유럽의 소비자협동조합은 자본주의적 유통기업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대규모 소비자협동조합에서 무엇을 취급하고 취급하지 않을 것인지 조합원이 최종 결정하는 소유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한 발생한

잉여는 조합원 및 지역에 머물게 만드는 기업구조라는 점에서 자본주의 유통기업과는 대조적이다. 더 나아가 스위스의 소비자협동조합들은 스위스 전체 유기농식품시장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유럽의 소비자협동조합도 우리나라 생협과 같이 유기농식품과 공정무역 상품의 취급을 확대해나가는 윤리적인 소매유통기업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19세기 말에 서구에서 발전해온 각종 농축산물 판매 및 가공 협동조합은, 농축산물 공급이 부족한 시대에 가공 및 유통업자들의 독과점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네덜란드의 각종 원예농협들은 세계적인 경매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농산물구매기업의 담합 등 독과점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였으며, 미국, 덴마크, 네덜란드 등의 낙농협동조합들은 낙농가공기업의 독과점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농민들이 도축장이나 유가공공장을 소유해서 구매자독과점에 의한 착취적 기업소유구조를 제거하였지만, 농협의 도축장이나 유가공공장의 기술적 운영방식은 다른 자본주의적 도축기업이나 유가공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것도 아니다. 다만 농민과 도축장 및 유가공공장의 거래방식 및 소유구조가 변하였고, 이를 통하여 보다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다. 농축산물의 공급이 과잉으로 전환된 오늘날에는 독과점에 대한 농협의 방어기능은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경쟁척도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서구 농협들은 대부분 농민들의 농축산물 공급체인 상황에서 전방통합의 또 다른 합리적 근거를 만들어내려고 고군분투중이다.

3. 우리나라 생협의 등장은 신협이 등장하게 된 경제 원리와 유사하다!

다음으로 독일에서 시작해 세계 여러 나라로 퍼져나간 신용협동조합은 자금이 부족한 시대에 고리대자본의 착취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정한 지역에서 고리대업자들은 담합을 통해 과점적 지위를 행사하여 지

역의 농민과 노동자를 착취하였지만, 동시에 물적 담보가 없는 차입자와 대부업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에 의존한 측면도 컸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협의 존립 근거는 우리나라 생협이 발전하게 된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유기농식품 품질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신협은 조합원들이 소유자이고 이 설립조합원들이 서로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범위로 조합을 구성함으로써, 담보가 거의 없는 저소득 조합원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데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즉 차입자에 대한 심사문제, 사후 감독문제, 미상환 가능성문제 등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고객과 은행 사이에 수신 및 여신서비스의 거래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문제로 작용하거나, 장기계약거래가 이루어질 때 고객과 기업사이의 신뢰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특히 물적 담보가 부족할 때에는 신뢰(사회적 자본)가 보완적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신뢰관계는 상호성(mutuality)에 의존하며, 이러한 상호성은 고객이 은행을 소유하고 있을 때 크게 높아진다. 소위 고객에 의한 신협의 소유권 확보와 공동유대관계의 형성을 통하여 차입자의 잠재적인 기회주의적 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었다. 신용협동조합들 대부분이 설립초기에 공동유대(common bond)를 강조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이러한 신협의 장점으로 인하여 투자자소유은행이 기피하는 영세 상공인이나 가난한 농민 및 노동자에 대한 대출시장에서 신협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신협은 기존의 금융시장에서는 빈곤계층에게 제공되지 않았던 신용이라는 상품을 공급하였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금융시장을 개척하였다고 볼 수 있고, 대부자와 차입자 간에도 물적 담보에 기초하지 않고 공동 유대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성식이 지난 십 수 년 동안 일구어온 우리나라의 생협은 어떠한 근거 하에서 발전되어 왔는가? 한 마디로 우리나라의 생협은 친환경농식품 품질 정보의 비대칭성문제를 해결하는데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친환경농식품이 지니고 있는 안전성 및 환경보호라는 차

별적 속성은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섭취를 통하여 확인하기 어려운 특징을 지니고 있다. 차입고객의 대출금 상환의지 및 노력에 대한 정보는 대출기관보다 차입고객이 더 잘 알고 있듯이, 유기농식품도 생산자나 판매자가 소비자보다 그 품질의 진위에 대한 정보를 더 잘 알고 있다. 즉, 이러한 제품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매우 높은 신뢰재(credence goods)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친환경농식품의 차별적 속성은 '생산과정'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이 속성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생산자는 잘 알고 있는 반면, 이를 구매하는 개별 소비자는 전혀 알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비인격적 거래(impersonal transaction)를 특징으로 하는 '일반' 시장에서 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한 친환경농식품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확인시킬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다. 더 나아가 투자수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주식회사 방식의 생산기업이나 유통기업은, 유기농식품의 가격이 관행농법에 의한 농식품의 가격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품질을 속여 이윤을 추구할 유인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품질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직관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윤추구 소매유통기업이 판매하는 유기농식품의 구매를 꺼리게 된다.

또한 친환경농식품의 생산은 일반 농산물의 생산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재배과정에서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노력과 투자를 통하여 생산성의 회복이나 생산의 안정을 이룰 수 있다. 특히 유기농업이나 무농약농업은 수요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농민들이 장기투자를 기피하게 만드는데, 이는 생산자와 유통기업 간의 신뢰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결국 소비자와 소매유통기업 간의 문제, 소매유통기업과 농민 및 가공업자와의 관계 문제가 친환경농산물 거래의 활성화를 저해하게 만든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 및 거래상 높은 위험성의 문제를 우리나라 생협이 자본주의적 소매유통기업보다 잘 해결하면서 친환경농식품의 거래가 크게 활성화되었다. 생협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조직화를 통하여 인격

적 거래(personal transaction)로 출발하여, 점차 소비자 조합원을 확대하고 생산자의 조직화를 촉진하면서 신뢰적 거래관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했다. 소비자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달리 소비자와 소유자가 일치하기 때문에 품질을 속이면서 투자수익을 높일 유인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이러한 품질 정보의 비대칭성문제를 투자자소유기업보다 우월하게 해결하는 사업전략을 수행해나간다면 생협 발전의 필요조건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품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는 의료, 육아, 돌봄 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이 발전하면서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장점과 역할을 발휘할 분야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은 '과잉' 진료 서비스 공급으로부터 '적정' 진료 서비스 공급으로 전환을 목적으로 하고, 육아 및 돌봄 서비스 소비자협동조합은 '동질적 수혜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의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신성식의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상품이고 '새로운'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현대 산업사회의 경쟁이 자연스럽게 독점, 과점체제를 만들면서 자유로운 시장을 사라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품질 정보의 비대칭성문제가 높은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투자자소유기업의 취급 하에서는 활성화가 덜 되는 반면, 이용자소유기업이 등장하게 되면 이용자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용자소유기업은 이러한 분야에서 서비스 공급자와 서비스 이용자와 '새로운' 관계를 내포하는 '새로운' 시장을 목적의식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높다.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영역에서 (소비자)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그의 주장에 품질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은 분야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을 추가하고 싶다.

4. 소상공인들의 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협동조합들

소비자협동조합과 더불어 식료품 시장에서 큰 규모로 발전한 협동조합은 상인들의 협동조합이다. 1950년대 셀프서비스 및 슈퍼마켓 시스템이라고 하는 미국발 새로운 유통기술이 유럽시장에 도입되었다. 기존 소규모 상인들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폐점하는 상인들의 수가 늘어났다. 점포의 주인들은 상품의 공동구매, 공동물류, 공동브랜드의 개발 등 도매기능을 수행하는 슈퍼마켓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점포 경영을 개선하고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적응능력을 높여나갔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유럽에는 대규모 슈퍼체인 중에서 주식회사 방식의 슈퍼체인 외에 소규모 상인들이 주인인 슈퍼체인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유럽 독립적인 소매상들의 협동조합연맹(UGAL, the Union of Groups of Independent Retailers of Europe)에는 325,000명의 소매상들이 조직한 31개 소매상협동조합이 가입되어 있으며, 이러한 소매상들과 소매상협동조합은 매출액 4,730억 유로를 기록하고 있고, 종업원 358만 6천 명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소매상들을 평균 10명 정도의 종업원을 보유한 소규모소매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1927년에 설립된 독일의 레베(Rewe)는 현재 유럽 내 12개 국가에서 식료품 점포를 운영하는 12,000 소매상들의 협동조합으로 유럽 내 식료품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1962년에 설립된 이탈리아의 코나드(CONAD)는 3천여 수퍼마켓 주인들의 협동조합으로 이탈리아 전체 식료품시장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소매상 협동조합의 발달로 인하여 유럽 내에는 까르푸(Carrefour), 영국의 테스코(Tesco)처럼 자본이 지배하는 주식회사형 대규모 슈퍼체인이 있는 반면에, 소규모 소매상들이 주도하는 협동조합형 대규모 슈퍼체인과 소비자가 주도하는 협동조합형 대규모 슈퍼체인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기업방식 간의 견제와 경쟁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처럼 대자본의 일방적인 '갑을관계' 관행이나 비정규직 노동

착취의 경향을 억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이 세계화 및 정보통신혁명이라고 하는 시장 및 기술환경의 급격한 변화의 희생양에서 벗어나 환경의 변화에 자조적이고 주체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 이점을 획득하는 동시에 소규모 사업체의 장점을 활용하여 사업의 발전적 유지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소비자협동조합이나 사업자협동조합, 상업적협동조합은행 등과는 다른 목적을 지니고 있다. 노동자협동조합은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질 좋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업 내 민주주의 실현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동자협동조합은 소비자협동조합, 신협, 농협 등과는 달리 일부 지역과 산업부문을 제외하고는 크게 발전하지 않았는데, 이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 못해서라기보다 작은 숲으로서 노동자협동조합부문의 공급생태계 조성이 미흡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몬드라곤이나 이탈리아의 사례 분석에서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협동조합의 유형은 19세기 중후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규율하는 제도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시대에 등장하여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함께 성장하였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사회주의체제가 몰락하고 세계화와 정보통신혁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부의 창출과 고용창출의 공간적 불일치 경향이 나타나고, 선진국에서도 전통적 산업 지역의 쇠퇴에 따른 만성 실업의 증가와 도시의 슬럼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노령화와 여성의 경제적 진출로 사회복지서비스 수요가 증가하여, 정부의 재정지출은 늘어나는데 공공부문에 의한 복지서비스 제공 방식의 비효율성이 감소하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또한 전 세계의 비인격적 거래(impersonal trade)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자본의 빈곤화 현상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자조를 기본으로 하는 전통적 협동조합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통적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편익증대를 목표로 하지만 조합원이 출자해야 하고 조직을 운영해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나 만성적 실업자, 장애인, 노

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동조합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에는 쉽지 않고, 외부의 자금지원이나 운영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공동참여를 통한 지역개발이나 돌봄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도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통적 협동조합보다 개방적인 지배구조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시대적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등장한 것이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포르투갈에서는 사회적 연대협동조합(social solidarity cooperative), 캐나다 퀘벡에서는 연대협동조합(solidarity cooperative), 프랑스에서는 공익 협동조합(collective interest cooperative) 등과 같이 유사한 이름으로 발전해 왔다. 특히 프랑스 공익협동조합이나 캐나다 퀘벡의 연대협동조합은 자연생태계의 유지와 조성, 쓰레기의 재활용 및 관리, 지역 예술의 복원과 창조, 공연·방송·공정여행 등 문화와 여가활동, 지역의 각종 장인 활동 및 도시농업 등에서 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영국에서는 코뮤니티카페, 코뮤니티펍(community pub), 코뮤니티학교 등 마을의 재생과 활력을 목적으로 하는 코뮤니티협동조합이 발전하고 있다. 또한 스위스 등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에서 자동차공유협동조합, 재생에너지협동조합 등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도 새로운 협동조합이 등장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새로운 흐름은 호혜와 협동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배려와 연대 등을 구성 원리로 하는 사회적경제와 보다 밀접하게 되고, 더 나아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생존을 위한 효율성 추구에 경사되어 온 대규모 전통적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5. 나오며: 연대와 상호보완성의 협동조합 생태계를 향하여

이상에서 필자가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의 조직에서 사회

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듯이, 한 유형의 협동조합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고, 여러 유형의 협동조합들로 구성된 숲이 '연대'의 원리를 통하여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각 유형의 협동조합들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장점이 있는 반면 다른 문제들은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닌다. 그러므로 한 나라에서 다양한 유형의 협동조합이 고루 발전하도록 만드는 전략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아래 표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이제야 비로소 협동조합을 설립할 자유가 주어지면서 다양한 부문에서 싹이 트고 있다.

<표 1> 한국 협동조합의 종류별 발전 정도

협동조합 종류	세 분류	발전 정도 평가
소비자 협동조합	생필품 공동구매	초기성장단계
	주택 공동건설·구매, 육아·의료·장례서비스공동구매, 문화·스포츠서비스공동구매	거의 전무 혹은 미미한 단계
생산자 협동조합	농업인·어업인·임업인협동조합	퇴화단계
	공인협동조합	거의 전무한 단계
	소상인협동조합	미미한 단계
	운송인협동조합/기타 사업자협동조합	거의 전무한 단계
노동자생산 협동조합	제조, 건설, 운수, 의료, 법률, 컨설팅, 디자인, 문화, 예술 등	거의 전무한 단계
금융 협동조합	경제적 약자간의 자금의 상호융통과 보험(공제)	성숙 및 퇴화단계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 및 융자	거의 전무한 단계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서비스협동조합 (노인·아동·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서비스)	맹아 단계
	취약계층 노동통합형 일자리창출 협동조합	맹아 단계
	지역 보전 및 공동개발 (문화·예술·관광·도농교류 등)	거의 전무한 단계

(출처: 필자의 분류방식 및 평가에 의함)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년 만에 '평범한' 사람들이 약 3천 개 분야에서 다양한 유형의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는데, 어떻게 신설 협동조합의 생존율을 높이고 바람직하게 발전하도록 전략을 수립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별도로 필요하지만 핵심은 연대와 상호성의 원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참여하는 사람마다 다양한 기대와 바람이 있기 때문에,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동일한 종류의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결성할 때 협동도 쉽고 가치창출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그런데 문제는 다양한 산업 및 지역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시도될 때, 이러한 시도를 지원해줄 수 있는 체제가 협동조합섹터 내부에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도움을 받은 협동조합이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을 도와줄 용의를 갖게 되는 상호성(reciprocity)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고, 이것이 거미줄처럼 확산되는 것이 '사회적 연대의식'이다. 연대는 조합 차원에서 조합원들이 배우게 되는 '협동의 의지와 노하우'와 더불어 소위 사회자본(social capital) 혹은 시민자본(civic capital)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자원의 결집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금융, 세제혜택, 교육훈련 및 컨설팅 체제 등은 이러한 상호성과 사회적 연대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성공한 사업자협동조합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잉여를 처분하지 않고 잉여의 일정부분을 지역사회에 기여하거나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의 지원을 위해 기부하는 경우, 더 높은 수준의 금융 지원이나 세제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icoop

화폐 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제도 차이를 인식하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1. 들어가며

신성식의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는 많은 고민을 담고 있다. 한 손에는 협동조합 운동의 본래 정신과 원칙을 쥐고, 또 다른 손으로는 화폐 경제가 압도적으로 우위인 현실에서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확장하는 일에 골몰하다보면 둘 사이에 긴장과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글은 원칙과 정신을 더욱 또렷하게 밝히면서도 현실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협동조합을 확장하는 길을 모색하는 내용이기에 그러한 긴장과 갈등이 행간에 듬뿍 담겨 있는 게 느껴졌다. 나는 일선에서 운동하는 활동가도 아니며 그저 정치경제학자로서 여러 경제 형태의 제도적 과정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논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이 글에서 표출된 여러 고민과 문제의식에 대해 몇 가지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할까 한다.

이 글은 먼저 화폐 경제와 사회적 경제가 조직 원리상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이론적으로 지적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시장 개척의 필요성에 대해 몇 가지 논평과 제안을 할 것이며, 그 뒤로는 '인간 중심'이라는 원칙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요컨대, 화폐 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조직 및 운영 원리상의 차이를 음미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진취적이고 자유롭게 여러 활동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첩경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2. 화폐 경제의 원리

협동조합 운동의 모태가 되는 정신이나 전통은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협동조합 운동 자체는 화폐 경제로 조직된 근대 산업 사회의 산물이다. 따라서 화폐 경제가 경제의 조직 형태로 가지고 있는 조직 및 운영 원리의 특징과 그 장단점을 깊이 음미해보는 것이, 협동조합 운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필연성과 존재 이유, 그리고 앞으로 발전 방향을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인간 사회에는 노동 분업이 존재해 왔다. 분업이 생겨나면 필연적으로 생산, 유통, 분배, 향유의 제반 과정들이 서로 분리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각각의 과정들은 각자 독특한 방식으로 사회적 제도화를 거치게 된다. 동서고금에 존재해 온 무수한 사회들마다 이 네 가지 영역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방식과 원리는 다양한 차이를 보였다. 그런데 대략 3백 년 전부터 이 네 영역 모두를 동일한 원리로 조직하여 운영함으로써 하나로 통일시켜 최초로 '경제(economy)'라는 것을 만들어 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지구적으로도 통일시켜내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오늘날 전 세계 인류의 경제 활동을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화폐 경제의 개념에 대해 무수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의 목적에서 강조해야 할 두 가지 조직 및 운영 원리가 있다. 이는 '몰인격성'과 '자본 회계의 합리성'이다.

1) 화폐 경제의 몰인격성

노동 분업을 조직하는 방식으로서 화폐 경제는 '몰인격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화폐 경제 특유의 장점 즉, 이론적으로 무한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의 경제 활동을 조직할 수 있다는 것과, 신속한 해체와 재구성을 통하여 빠른 기술 발전과 사회적 변화에 적응해 들어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의 기초가 된다. 흔히 화폐 경제 이외에 한 사회의 노동 분업을 조직하는 방법으로 이야기되는 '관습'과 '명령'을 생각해 보면 이 점은 분명히 드러난다. 일정한 숫자 이상의 사람들을 동일한 경제적 공동체

내에서 노동 분업의 관계로 조직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각 개인의 능력과 욕구를 파악하는 일도 필요하고 기술적 과정 전체를 이해하여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뿐만 아니라, 순탄한 복종과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작업 강제의 과정까지 거쳐야 한다. '관습'과 '명령'이라는 방법으로도 이를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두 방법 모두 빠른 기술 및 사회적 변화에 적응할 수 없어서 경제 활동을 정체시키며 또 노동 분업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기능부전을 일으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화폐 경제는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서로 인격적 관계에 근거하여 노동 분업을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화폐'로 표시되는 바의 가격 신호라는 몰인격적인 기호에 따라 자신의 의사와 행동을 결정한다. 유명한 격언대로, 내가 오늘 저녁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과 내가 친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나 나나 이기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일 따름이다. 아담 스미스 이후 시장 경제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반복적으로 주장하였듯이, 이렇게 가격 신호를 놓고 그것으로 계산되는 바의 자기 이익이라는 원칙으로 모든 개인들이 행동할 경우 일정한 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된다. 이는 '관습'이나 '명령'과 비교했을 때 '몰인격적'인 성격을 특징으로 갖는다. 이 화폐 경제라는 조정 양식의 몰인격성 때문에 수억 아니 수십억 명의 노동도 일사불란하게 조직하는 일이 가능하다.(지구적으로 생산된 스마트 폰을 생각해보라) 또 변화된 기술, 사회적 조건에 따라 생산 및 소비를 재조직하는 일도 이를 통해 가능하다.

2) 자본 회계의 합리성

화폐 경제의 중요한 특징 중 또 다른 하나는 스스로를 조직하는 고유의 합리성을 내재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화폐 그 자체의 증식이라는 목적에 비추었을 때 어떤 개별 사물과 사건이 어느 만큼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평가하는 합리성 즉, '자본 회계의 합리성

(Kapitalrechnungsrationalitaet)'이다. 막스 베버도 말한 바 있는 이 개념은 화폐 경제에서 모든 사건과 사물은 화폐로 표시된 가격이라는 기호로 환원된다는 것이다. 만사만물을 표현할 수 있게 된 장부는 자산 가치의 증식이라는 자체적인 목적 합리성을 가지게 되며, 이에 따라 자산의 크기가 어떻게 늘어나는가를 항상 알아볼 수 있도록 한 복식 부기 혹은 자본 회계가 근대 자본주의의 특징이 된다.

이 '자본 회계의 합리성'은 자본주의 경제에 나타나는 고도의 합목적성으로 이어진다. 자본을 내놓은 투자자는 자신의 수익 확대와 자산 가치 증식이라는 목적에 따라 자신의 소유권과 통제권이 관철될 수 있는 사건과 사물들을 모두 근본적으로 재배치한다. 오늘날은 이를 혁신(innovation)이라고 부르지만 슘페터는 이를 '창조적 파괴'라고 부른 바 있고 16세기의 중세 영어에서는 'improvement'[1]라고 부른 바 있다. 그리고 21세기의 신자유주의 세계에서는 '효율성', '경쟁력', '주주 가치' 등의 용어로 바뀌어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어버리는 원리로 활용되고 있다. 이 '자본 회계의 합리성'은 투자자 및 넓은 의미의 자본가들에게 행동과 사유의 일관성과 자신감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내는 세계에도 대단히 일관된 질서를 부여한다. 이러한 논리적 일관성과 자신감이 바로 파상적으로 우리들 생활 세계를 부수고 들어오는 자본주의 화폐 경제의 가공할만한 힘의 근원이 된다.

3. 협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 원리

우리가 근대적 협동조합 운동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로버트 오언(Robert Owen)은 사회주의 운동의 아버지이기도 하며 또 근대 노동운동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이 점은 근대적 협동조합 운동이 18세기 말 이후

1 어원적으로 보면 '이윤(prov-)이 나오게 만든다(en-)'는 중세 불어의 조어로 생겨난 말로서, 엔클로져 운동 당시의 토지 개간을 행하는 차지농업 자본가들의 행태를 묘사하는 말이었다.

인간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한 위 '화폐 경제'가 낳은 모순과 소외에 대한 길항을 그 시작점으로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1) 서로에 대한 신뢰, 서로의 욕구와 능력에 대한 관심과 존중

화폐 경제는 위에서 말한 대로 자본 회계의 합리성에 따라 몰인격성을 원리로 하여 조직된다. 이에 따라 노동 시장과 각종 소비 시장에서 소외당한 생산자와 소비자들은 자신이 인간으로 갖는 생산 능력과 소비의 욕구를 근본적으로 부정 당하는 황당한 사태에 이르게 된다. 이 상황에서 오언 등이 제창하고 이후 협동조합 운동의 밑바탕이 된 원리는 바로 사람과 사람이 서로에 대한 인간적 신뢰를 바탕으로 만나 서로에 대한 협력과 자조(自助)의 원칙으로 서로의 살림살이를 함께 풀어나간다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인간은 타인에게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타인의 도움으로 충족하고픈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실현할 때에 비로소 삶이 펼쳐지는 것이 인간이라는 생물학적 종이 갖는 특징이다. 그런데 화폐 경제는 수익 창출이라는 원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간의 생산 능력과 소비 욕구는 전혀 조직해주지 않는다. 화폐 경제에서 이러한 능력과 욕구는 그야말로 '떨거지'가 되어 체계적으로 배제되는 위험에 처한다. 초기 협동조합 운동은 이러한 화폐 경제의 몰인격성을 인간에 대한 신뢰와 서로가 가진 능력과 욕구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라는 원리로 대체함으로써 노동 분업을 조직한다는 대안의 원리를 제시한 것이다.

2) 인간 발전의 원리

인간 발전(human development) 이라는 말은 최근에서야 경제철학과 사회 윤리학 등에서 본격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그 근간을 이루는 생각과 사상은 이미 협동조합 운동의 시작부터 바탕을 이루고 있다. 생산에서 유통, 분배와 향유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과 역량을 확장한다는 것이 협동조합의 핵심 목표로 천명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화폐 경제에서 '자본 회계의 합리성'이라는 조직 및 운영의 중요한 원리를 대체한다. 그것은 바로 '인간 발전과 사회의 강화'이다. 마르크스 경제학의 도식을 따라 전자를 G—G' (혹은 M—M') 라고 쓴다면, 후자는 H—H'라고 쓸 수 있을 것이다. 전자에서는 증식하는 것이 화폐 (Geld, money)이며 인간과 자연은 그 화폐의 증식 과정에 수단이자 투입물로서 등장하게 된다. 하지만 후자에서는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human being) 그 자체의 발전이 되며, 중간에 화폐 등이 들어간다고 해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 발전의 수단으로서만 등장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화폐 경제에서 자본가 및 투자자에게 그토록 일관된 행동 원칙을 제시했던 자본 회계 대신, 인간과 자연의 풍요해짐을 계산하고 기록하는 대안적 회계 - 일종의 '사회적 회계'-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4. 협동조합 운동의 확장에 대한 몇 가지 함의

화폐 경제와 협동조합 운동이 가진 원리의 차이점을 음미해봄으로써 신성식의 글에서 제기된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 함의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화폐 경제와 공존의 문제

협동조합 운동 나아가 사회적 경제 일반은 화폐 경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경제 조직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앞에서 보았듯, 각각의 경제 조직 형태는 현대 산업 사회에서 각자의 존재 이유와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 혁명 이후 오늘날까지 기술 발전 과정을 볼 때, 대규모 노동 분업을 조직하고 장기간의 시간과 불확실성에 걸친 리스크를 감내해야 하는 산업에는 화폐 경제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어 있다. 비단 철강 등과 같은 중후장대 산업 뿐 아니라 지리적 공간이 크고 불확실한 수요의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유통업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오늘날 산

업 구조에서 화폐 경제의 우위가 확실하게 굳어 있는 영역은 대부분 화폐 경제의 존재 이유와 맞닿는 곳들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 오언주의 협동조합 운동은 사회주의 운동과 결합하여 자본주의적 화폐 경제를 대체하려는 목표를 가진 적이 있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이윤 동기에 움직여서는 안 되며 화폐 경제와 절연하고 철저하게 사람들의 자발적인 협력이라는 원리 하나만으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편향이 있었고, 협동조합이 생산 및 판매하는 것들은 이윤을 제거하여 더 싼 가격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배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모든 경제 활동에서 화폐 경제를 대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오언의 '노동 산물 교환소(Labour Exchange)'의 실패에서도 분명히 볼 수 있다.

공존이 가능하게 된 중요한 계기 하나는 오늘날 협동조합의 실질적인 원조라고 할 '로치데일 가게'였다. 이 가게는 시장 가격과 동일한 가격을 받고 동일하게 이윤을 남기는 영업 조직으로 운영한 점에서 화폐 경제와 공존을 가능하게 했고, 동시에 그렇게 발생한 이윤을 일정하게 조합원과 여타 사람들의 복리와 삶의 개선을 위해 사용한다는 원칙을 정하여 '인간 발전과 사회의 강화'라는 협동조합의 원리를 실현하였다. 화폐 경제와 협동조합은 공존한다. 물론 그 공존의 경계선은 지극히 가변적이며, 기술 및 사회의 변화에 따라 계속 달라진다.

2) 협동조합이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부분

앞에서 우리는 화폐 경제의 장점이 '몰인격성'에 있다는 것을 보았다. 이로 인해 대규모 자원 동원과 빠른 조직 변화가 가능한 것도 화폐 경제의 장점이다. 하지만 어떤 경제 활동의 경우에는 이러한 '몰인격성'이 고스란히 화폐 경제의 단점으로 전환하기도 하며, 협동조합의 조직 원리라고 할 '인격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서로의 능력과 욕구에 대한 존중과 관심'이 훨씬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도 한다. 내가 '인격적 재화/서비스

(personal goods/service)'라고 부르는 범주의 것들이다.

산업 사회의 아이러니 중 하나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자본과 발전된 기술을 동원해야 충족될 수 있는 욕구가 팽창하는 한편, 다른 부분에서는 더 원시적이고 '찌질한' 방법을 쓸수록 만족하는 욕구도 똑같이 팽창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먹을거리 문제를 생각해보라. 이불이나 속옷을 생각해보라. 육아와 교육 문제 등을 생각해보라. 옛날에는 밥상에 오른 배춧잎에서 벌레가 나왔다면 큰 사달이 났겠지만, 요즘은 농약을 치지 않은 증거라고 더 귀히 여기기까지 한다. 사람들은 삶의 기능적인(functional) 부분에서는 자본과 기술을 집약해서 체현된 재화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인격적(personal) 부분에서는 가급적 오래된 방식으로 사람의 정성이 깃든 재화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환경에서 협동조합 운동이 일정하게 호응을 얻는 부분도 바로 이 지점이다.

이 점을 생각해보면 협동조합 운동이 새롭게 개척할 '시장'의 방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저 '기능적인' 것으로 여겨 무조건 낮은 비용으로 조달하고자 하는 서비스와 재화에서는 자본 및 화폐 경제와 경쟁하기 무척 어렵고, 이 부분에서 새로운 상품이나 판로의 개척은 성공 확률이 낮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인격적' 욕구의 부문은 대자본의 리스크 감내 및 합리화 방식이 절대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오히려 협동조합의 지극히 '인격적인' 조직 및 운영 원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곳이다. 유기농을 앞세운 생협의 성공, 공립 어린이집을 넘어서는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만족도 등은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이 협동조합이 화폐 경제와 공존하는 가운데 어느 방향으로 확장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원칙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성식의 글이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시장' 개발과 확장은 피할 수 없는 당위라고 본다. 지금까지 생산자들은 화폐 경제의 일방적인 '배제'의 논리에 눌려서 능력이 쓰일 곳을 찾지 못했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지금은 신뢰와 협동이라는 인간 중심의 원리를 매개로 광범위하게 이를 조직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 따라서 지금 해나가

야 할 일은 몇 가지 한정된 종류의 경제 활동에 제한되어 있던 협동조합의 형태를 폭발적으로 다변화시키는 일일 것이다.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면서 우리는 매체와 관련된 정보의 생산과 향유에서도 협동조합이라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다. 현존하는 음악 시장에서 상품성을 가질 수 없는 포크 음악의 경우에도 포크 음악인들과 동호인들이 결합하여 일종의 생산자 및 소비자 길드를 구성하는 포크 음악 협동조합 결성의 소문도 들려온다. 널리 퍼져 있는 통념과는 달리, 도시화가 심하게 진행된 곳일수록 위에서 말한 '인격적 재화/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폭발적으로 팽창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품 및 시장의 개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와 업종의 협동조합을 고민할 때이다.

3) 복합 사회에서 '인간 중심' 원칙

'인간 중심'의 원리와 원칙은 사람들 사이에 직접적이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복잡하게 조직되어 있는 산업 사회에서 이러한 '직접적 인격적 관계'를 항상 실현해 나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일단 바빠서 회합에 나가는 자체가 어렵고, 회합이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인간관계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시간적 물적 여유를 갖는 일 자체가 쉽지 않다. 더욱이 경제 활동의 조정과 성찰에 필요한 여러 '골치 아픈' 문제들을 직접 토론하여 조직하는 문제는 더 어렵게 마련이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원칙은 사실상 공염불에 그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부지불식간에 조직 및 운영 원리에 발생한 공백에 화폐 경제의 기업 조직에서 통용되는 관행과 원리가 슬며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일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 중심'이라는 원칙을 복합 사회의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비록 모든 이들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모이지 않더라도 각자가 가진 의사를 개진하고 서로에 대

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는 것이 방법이 된다. 이는 '직접 민주주의'를 둘러싼 논쟁과 마찬가지의 문제이다. 인구의 규모와 사안의 복잡성 등을 들어 직접 민주주의를 대의제 민주주의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있지만, 꼭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모여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공동의 의제를 이해하고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개발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의 정신과 원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20년대에 영국의 '길드 사회주의'의 원칙에 영감을 얻어 칼 폴라니 등이 주장했던 것처럼, 생산자 길드와 소비자 길드를 적극 조직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된다. 생산자 길드는 생산에 들어가는 여러 유무형의 비용과 어려움 그리고 위험을 소상히 설명하고, 소비자 길드 또한 소비자들의 욕구와 기존 제품에 대한 솔직한 평가, 생산자들에 대한 요구 등을 소상히 내놓고 서로 토론을 벌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집단적 경제 활동 조직에 대한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내면 조망'을 통해서 협동조합 등이 화폐 경제에서 영리 기업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경제적 효율성과 행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폴라니의 믿음이다.

4) 협동조합의 '도덕적 경제': 인간 발전과 사회의 강화

영리 기업이 복식 부기를 통해 계산되는 자산 가치 증식을 스스로의 조직 및 운영 원리로 하듯이, 협동조합은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인간적 발전과 공동체 및 사회의 강화'를 궁극적인 조직 원리로 삼는다. 이를 실현하는 방법은 로치데일 가게의 경우에서 보듯 대단히 다양할 수 있다. 자칫 경직되게 해석할 경우 협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을 불구화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원칙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인간 발전과 사회 강화'라는 원칙이 사회 전반, 최소한 협동조합을 둘러싼 지역 및 직종에서 실현되도록 기여한다는 포괄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은 조합에 가입한 성원들만의 능력과 욕구를 실현하는 좁은 의미의 경제 조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성원들은 물론 그 주변 사회 전체 성원들의

인간적 발전과 사회 강화에 기여한다는 것을 명시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협동조합이 자본주의적 화폐 경제에 맞설 수 있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영리 조직의 활동은 일방적으로 생산과 소비의 비용을 사회에 전가시키고,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며, 인간과 자연의 역량을 파괴하는 경향을 갖는다. 이에 맞서 다시 사회적 자본과 신뢰를 강화하고 개인 및 집단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스스로에게 자임할 때에 협동조합은 사회 전체에서 경제적 의미를 넘어서는 지위와 중요성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5. 맺으며

신성식의 글은 지난 시간 동안 협동조합 운동이 일취월장 했음에도 아직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많은 이들의 열망과 관심이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여 그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의 방안은 어떤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연구자로서 이러한 현장의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지혜를 내오고자 하는 열망이 있지만 재주와 시간의 한계에 묶여 있었음을 털어놓는다.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이 고민을 풀어나가려면 화폐 경제와 협동조합 경제의 조직 및 운영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각자의 위상과 장단점 그리고 위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칙은 소중하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지만, 원칙과 원리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존재하는 것들과 관계들이 엄연히 갖게 마련인 특성과 성질들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전제로 한다면, 새로운 '시장'의 확장과, 원칙의 구현이라는 두 가지 일이 모순은커녕 서로를 강화시키는 상승 작용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icoop

협동조합운동, 천천히 톺아보면서 나아가기

김동준 (성공회대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연구교수)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그 설립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걱정되는 것 중의 하나는 협동조합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나 과도한 기대이다. 최근 협동조합운동에 대해 대중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무한경쟁과 양극화의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대한 문제의식, 이에 따른 피로감과 새로운 공동체적 질서에 대한 욕구, (칼 폴라니의 문제제기를 새삼 주목하면서 비롯된) 시장과 사회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재고 등이 있다. 그러나 과연 협동조합운동이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협동조합이 지향하는 대안적 구조를 '인간중심의 경제'라고 칭하기로 하자. 물론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해서 다양한 차이가 있겠지만 궁극적인 지향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겠다. 19세기 사상가들 중에도 초기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경험하면서 협동조합이 "자본과 노동 사이의 현존하는 불화를 치유하고,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로 인한 계급투쟁과 갈등으로부터 인간의 삶을 변혁시켜, 모두를 위한 공공선의 추구에서 선의의 경쟁을 추구하도록 하며, 노동의 존엄성을 고양시키고, 노동계급의 안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새로운 사고와 인간의 일상적 노동을 사회적 공감대와 실천적 지성의 학습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구조라 믿고 주장한 분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협동조합이 가지는 잠재적 가능성이며, 그것을 현실화하기에는 추구하는 가치와 현실의 간극이 매우 크게 존재한다고 비판하는 세력(대표적으로 맑시스트들)도 있었다.

기존의 질서 안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체제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

고 중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긍정적, 부정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혼재된 상태에서 전개된다. 자본의 확대재생산 구조가 가져다주는 물질소비의 확대, 시장경쟁 메커니즘을 통한 효율성의 극대화 등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대중들이 그 근본 모순과 부정적인 요소들을 인내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했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도 역시 자본주의 시장경쟁체제 내에서 기능한다. 효율성과 생산성의 극대화를 지상과제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 속에서 협동조합은 과연 지속가능할 수 있는가? 과연 그 정체성과 기본원리를 유지해나갈 수 있는가?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은 양립할 수 있는 것인가? 협동조합이 지향하는 가치와 원리들은 이론적이고 규범적인 당위성을 가진 것인 반면에, 시장경쟁에서 생존해야 한다는 경제적 목적은 현실적이고 절대적인 명령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론적이고 당위적인 접근을 하는 담론이 넘쳐난다. 현실에서부터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과 제도가 만들어 지지 못해 나타나는 다소 왜곡된 현상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 시민사회가 현실에서 지금까지 축적해왔던 협동조합 운동의 역사적 경험이 존재한다. 신협, 농협도 다시 돌아보고, 무엇보다도 생협의 역사적 경험을 평가하고 분석함으로써 향후 협동조합운동의 기반으로 삼아야 하겠다.

1. 새로운 패러다임의 공동체적 체험을 통한 공감대의 확산

생협은 짧은 역사 속에서 많은 성취를 이뤘지만 생협의 구성원은 그 가치와 원리를 얼마나 공유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중층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생협운동을 이끌어온 소수 핵심 구성원들부터, 생협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효용의 잣대로 평가하며 이용하는 다수 조합원에 이르기까지, 그 의식과 참여도에 따른 조합원의 분포는 최상부의 꼭짓점부터 하단의 넓은 토대까지 삼각형처럼 계층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 각각의 계층에게 사람중심 경제의 원리와 조직 운영방식은 다른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다르게 작동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때로는 시행착오가 일어나기도 하고 모순된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생협운동은 이 삼각형처럼 이루어진 전체 구조가 조금씩 앞으로 전진해가는 것이다.

우리는 가끔 인간중심의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협운동 전체 구조 속에서 공유되고 시도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패러다임 전환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생협운동을 통한 시도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가는 작은 시도들의 집합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인간중심의 경제가 가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혁명처럼 실현되는 것이 아니며, 거대 담론과 추상적인 가치관에 집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언어와 담론은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구체화, 생활화, 규범화 되었을 때 가능할 것이다. 새로운 변화는 새로운 시도와 실험들이 일부의 공동체적 체험을 통해 입증되고, 이것이 전이되고 확산되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가치관이 방법론을 통해 구체화되고 체험될 때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실천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부 생협들은 새로운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론을 꾸준히 제시해왔다. 이러한 노력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현실적이고 작은 혁신들을 공동체가 같이 체험하고 이를 통해 대중의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자본, 노동, 가격, 거래, 배당, 성과평가, 보수 등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용어, 새로운 접근방식과 평가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새로운 용어와 개념은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며, 새로운 평가와 보상의 방식은 그것을 체험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노동, 인권, 환경, 사회적 가치들이 가격에 쉽게 반영될 수 없었다면,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와 또 다른 보상의 방식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2. 새로운 경제시스템, 지역적 모델 만들기

협동조합 운동은 일자리의 창출과 재분배를 실천하는데 그치지 않고, 명백히 시장의 영역을 넘어서거나 시장 밖의 영역에서 인간중심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들을 창출해내야만 한다. 이때에 비로소 인간중심 경제의 실천원리들이 제대로 작동될 것이다. 그러나 '시장의 영역 너머'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순히 시장의 지배나 논리에서 벗어난 일시적인 피난처를 의미하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시장 경제의 순환을 넘어서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가?

협동조합이 가져다주는 사회적 이점들은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대안적인 형태의 생활재를 공급함으로써 협동조합 구성원들의 일상을 더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구성원들의 구체적 생활세계의 요구나, 사회 전반의 욕구를 집중적이고 세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크고 작은 혁신에 의해 새로운 니치(niche)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새로운 프로세스, 새로운 원리의 적용, 자원이나 요소의 새로운 결합방식,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 방식, 새로운 용도의 개발, 새로운 네트워크, 새로운 분배의 방식 등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다. 세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참여와 공동체적 기여라는 동기부여에 의해, 크라우드 소싱과 집단지성의 원리에 의해 협동조합은 이러한 크고 작은 혁신들을 더 활발히 만들어낼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탈중심화, 욕구의 다양화,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는 문화적, 사회적 가치 추구의 사회적인 흐름은 이러한 가능성을 더 높여주고 있다. 대안적인 식품생산에서부터 금융, 유통, 무역에 이르기까지 시장 영역을 넘어서는, 또는 그 시장영역 밖의 수요를 우선시하는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는 대안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생협들은 아직 불완전한 수준일지라도 하나의 새로운 경제적 시스템을 구성하여, 이 안에서 단지 사회적인 욕구라고 지칭되는 것 보다는 더 구체적이며, 도덕적인 차원으로 지칭되는, 보다 더 깊이 있는 욕구

를 충족시켜 왔다. 생협들은 비록 불완전한 방법이지만, 소비자들의 특정한 일상 세계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시도들을 한 차원 높은 새로운 생활 경제시스템으로 발전시키고, 이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틀을 정교하게 만들어나감으로써, 우리는 '자유 시장'의 법칙이나 생산성 지상주의에서 해방될 수 있는 무한도전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실천전략이 제시될 수 있다. 이제는 한 지역 차원, 또는 한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기획하고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로마냐 모델이 주는 시사점이 있다. 지역 내의 작은 협동조합 간 협력 시스템을 통한 지역경제 시스템이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이러한 지역모델의 실제 사례가 창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사회적 경제활동 조직 간의 협의회나 전시용 네트워크가 아니라 실제 지역민들의 생활세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경제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 외연을 확대하고 지역화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새로운 가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생협이 그 중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생협운동을 통해 축적해 온 공동체 사업의 역사적 경험과 성취, 자신감, 노하우, 지역의 네트워크, 신뢰와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여 지역 내 다른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만들어내는 산실이자 지원기관,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

새로운 경제 시스템과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본을 형성해야 한다.(앞서 말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해서 말한다면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에서 일컬어지던 '자본'과는 다른 개념일 것이다. 새로운 용어가 필요하겠다) 이윤의 극대화와 자본의 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기업과 달리, 사회적 경제 조직은 노동자, 소비자, 투자자, 지역민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집단적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에 의한 조직의 통제권을 우리는 사회적 소유라 부르며,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참여주의는 이를 통해서 실천된다. 이들이 기반하고 있는 사회적 목적과 그것에 동의하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는 폭넓은 대중적 자본을 형성하게 되며,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정당성과 존재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이다. 사회적 소유의 실현은 사회적 서비스의 공동생산자로서 시민사회의 권한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개인적인 시장 경로가 아닌 집단적인 사회 참여 과정 통해 서비스의 개선과 지속적인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을 합법화할 것이다. 그러할 때, 사회적 경제는 시장이나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대안적인 자원배분을 통해 분배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생협운동을 통해 다수 대중들의 소규모 협력과 참여가 오랜 기간 축적되면서 큰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제는 한 차원 더 나아가 또 다른 분야에서, 하나의 지역 차원에서 대안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협력과 참여(자본)를 조성해내야 한다. 문제는 보다 많은 대중들이 이 새로운 시스템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대안적 가치선택에 기초한 적극적인 참여자는 (삼각형의 꼭대기 층에 가까운) 소수일 수밖에 없다. 많은 대중들이 적극적 가치의 선택이라는 커다란 인지적 부담이나 경제적 리스크 없이 새로운 시스템의 확대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이윤이나 배당,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의 물질적 효용 이외에도 크고 작은 의미부여를 통해 참여자에게 보상감을 느끼도록 할 때 보다 많은 대중의 참여를 촉진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선택 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조합원들이 일상적인 사업이용을 통해 시스템의 토대(자본)를 확대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일본의 생협에서 수입된 조합원 이용에 연계된 자동출자제도가 한 예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다양한 아이디어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대중의 물질적 참여가 경제적 효용 이외에도 다양한 문화적, 공동체적 보상으로 참여자에게 피드백될 수 있는 아이디어의 개발이 필요하다.

시스템의 확대는 또한 리스크의 상승을 초래한다. 규모화는 경제성과 효율성, 상대적인 경쟁력의 향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조직경영 외부의 환경이 급변하고 그 변화에 대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규모화는 시스템 전체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 오랜 세월동안 엄청난 규모로 성장해

왔던 협동조합이 갑자기 파산하거나 영리기업에 매각되는 경우, 우리나라 어느 재벌 기업집단이 일순간에 위기에 처하는 경우, 철옹성으로 여겨지던 초국적 대기업이 청산되거나 합병되는 경우, 나아가서 소수 대자본의 시행착오가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 전체를 위기에 빠지게 하는 경우 등에서 규모화에 따르는 위험성을 목격해왔다. 따라서 대안적 시스템의 확대는 규모화, 집중화의 논리를 지양하고 철저한 네트워크화, 분권화된 구조를 지향해야 한다. 이것이 전체 시스템 관점에서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며, 대규모 시스템이 제공할 수 없는 아기자기한 문화적, 공동체적 보상을 통한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쉽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제는 "협동조합이 신뢰의 구조로 인하여 경제위기에 더 강했다"식의 논리(물론 이것도 매우 중요한 점이지만)를 뛰어넘어야 한다. 몬드라곤이나 에밀리아 로마냐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전체 시스템의 네트워크적 구조가 어떻게 참여와 혁신을 촉진시키고 리스크를 완충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3. 대안적 조직구조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협동조합이 많이 설립되지만 협동조합의 원리를 철저히 실현해서 그것을 조직의 강점과 경쟁력으로 만들어내는 조직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연대와 협동의 원리는 인간사회의 매우 중요한 지향점이며 긍정적인 메커니즘이다. 그러나 협동조합이 그 잠재적 가능성을 실제 대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현장에서 다양한 사례가 만들어져야 한다. 혁신적 조직구조, 독특한 제도, 돌연변이와 같은 운영방식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미 주류 영리조직들에서도 노동양식이 변화되고 있다. 노동력 제공방식의 다양화, 조직구조의 유연화와 탈중심화, 계층구조의 파괴와 의사결정의 민주화 등이 그것이다. 협동조합은 이러한 노동양식의 변화에 대응하기에 적합한 조직구조이다. 이러한 흐름에 상응하는 노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평가 및 보상제도의 개발, 의사결정 시스템의 개선, 가격설정방식,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의 변화가 모색되고 시도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을 설명할 때 흔히 1인 1표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가장 큰 특성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민주적 의사결정이라는 협동조합의 원리는 그것이 가져다주는 비효율성의 문제를 수반한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실제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민주성은 상호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곤 한다. 학자들은 민주적 조직운영에 들어가는 조직운영비용의 증가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협동조합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관건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즉, 조직의 통제와 관리에 대한 비용, 부문 간 이해관계자 간 조정과 통합 비용, 집단적 의사결정 비용, 소유자 간의 의견취합과 조율 비용, 잘못된 의사결정과 관리자의 기회주의적 판단에 따른 비용 등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협동조합이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장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시도한 경영전문화가 참여와 민주성의 원칙을 퇴색시키고 조직의 핵심 가치와 원칙을 상실하게 하기도 한다. 또한 협동조합의 발전으로 인한 조직의 대규모화는 불가피하게 조직의 관료화와 경직성을 초래하여 협동조합이 조직원리 상 가진 장점들을 실현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실제로 거대화된 국내외의 협동조합들이 신자유주의적 경영방식을 여과 없이 실행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일반 영리기업으로 전환하는 현상도 발생한다. 조직 내 민주주의는 비용을 수반한다. 그러나 그 비용이 창출해내는 효과를 계량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쟁과 생존이라는 지상과제 하에서 그 가치가 존중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비용을 이유로 가장 궁극적인 가치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독재를 미화하는 것처럼 어리석으며, 동시에 쉽게 보이지 않는 민주주의의 긍정적 기능을 망각하는 것이다. 민주적 메커니즘이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여 민주적 조직운영에 수반

되는 비용을 상쇄하고 남을 만큼의 조직적 강점으로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 민주주의와 커뮤니케이션은 신뢰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 유리하고,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해 줌으로써 거래비용과 감시비용을 낮추어 줄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민주적 의사결정의 비용을 낮추어 주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해왔다.

인간중심의 경제는 인간중심의 경영을 실현해야 한다. 먼저 자본의 효율성이 아닌 인간을 중심으로 한 경영이 규범적인 당위가 아니라 현실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 답해야 한다. 주류 경영학에서도 자본이나 기술에 기초한 경쟁력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제공해 줄 수 없으며, 오히려 인적 자원에 기초한 기업의 핵심역량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 인적 자원을 통한 경쟁력이란 단순히 인적 자원의 질적인 우수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보유한 자원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조직적 차원의 유무형의 자원을 총합한 개념이다. 조직구성원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형성되고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협동조합의 경영은 다음과 같은 측면들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첫째, 인적 자원에 우선 가치를 두는 조직운영을 실현해야 한다. 조직의 경쟁력이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한다는 비전과 그에 상응하는 조직운영기조, 경영철학, 조직 관리의 원칙 등을 확고히 천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이 실제 경영자의 리더십에서 뿐 아니라 각종 조직운영기법을 통해 일관되게 나타나야 한다. 조직 구성원들에게 명확히 인식되고 조직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비로소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쟁력은 우수한 경영기법의 도입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조직이 특수한 형태로 창출해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적 자원의 가치를 신뢰하고 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에서 고유의 조직문화와 경영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용안정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인적 자본에 기초한 조직경쟁력 확보에 고용의 안정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한 조직의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는 역사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며, 따라서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인적 자본의 역량이 조직의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활용이나 구조조정 등 고용의 유연성 확보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일치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고용의 불안정성은 종업원들의 안정감, 신뢰, 자신감(self efficacy), 조직문화,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후원의식(POS), 조직시민행동(OCB)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종업원간 팀워크 및 네트워크 파괴, 조직 내 축적된 기술적 노하우 및 숙련성 상실 등으로 나타나, 장기적으로 볼 때 조직이 경쟁력에 해로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영리 기업들에게 고용유연성을 통한 조직의 경제성과 효율성 제고는 광범위하게 일반화된 믿음이자 논리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존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전반에서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을 하고자 하는 주체들이 과연 실제 조직운영에서 자본의 가치보다는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고용의 안정성은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우선적인 지표라고 생각한다.

셋째, 조직구성원들이 협동조합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인적 자원의 활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조직구성원과 조직 간의 비전 일치 및 가치의 일치는 조직심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조직이나 직무에 대한 몰입의 정도를 강화시켜주며,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높여주고, 구성원들이 조직에 더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조직과 조직구성원 간의 비전과 가치의 일치는 조직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역할 외 행동들을 촉진시켜 조직경쟁력을 높여준다. 일반적으로 협동조합들이 조직구성원과 가치나 비전 일치를 높은 수준으로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효과를 충분히 활용하

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넷째, 협동조합 내의 동기부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흔히 협동조합의 경영자(리더)들은 조직구성원들의 행동 유인을 공익, 또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 보상의 원리를 통해 해석하며, 반면에 낮은 조직효율성이나 높은 이직율의 원인을 불충분한 물질적 보상에서 찾는다. 때로는 섣불리 영리조직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반면 협동조합 특유의 성격에 맞는 비금전적 보상을 통한 내재적 동기부여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으로 접근하지 못한다. 직무 자체의 흥미와 즐거움과 의미부여를 통해, 노동과 참여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중요성을 인지함을 통해, 비물질적인 문화적 보상을 통해, 공동체적 인정과 피드백에 의해 조직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 할 수 있는 협동조합 고유의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신뢰와 사회적 자본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영을 해야 한다. 협동조합은 영리 기업에 비해 확고한 사회적 미션과 가치지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소유 및 운영구조에서 비롯된 투명성과 도덕성, 그리고 공정성과 신뢰 등을 조직구성원 및 조직 외 대중들과 공유함으로써 우월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장점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성을 낮추고, 거래에서 권력의 부조화를 지양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협동조합에 대한 소비자의 충성도와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다.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이해관계자들 간에 상호 이익이 되는 호혜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이해관계자들 간의 호혜적 관계의 유지는 거래비용을 줄여주며, 조직과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이 지향하는 사회적 목적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한다. 아울러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호혜성에 기초하여 사회적 자원(비시장적 자원)의 동원을 원활하게 해준다. 호혜주의의 원칙은 다양한 사회적 필요와 문제를 집합적으로 해결하고, 집단과 개인 간에 특정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유하면서 지역공동체들 간의 특정한 사

회적 관계망을 만들어준다. 협동조합의 경영은 이러한 메커니즘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신뢰에 입각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 전략과 기법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협동조합운동을 통해 만들어나갈 대안을 담론(패러다임), 경제시스템, 조직구조와 운영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협동조합운동은 이 모순으로 가득한 시장경제시스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잠재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난하다.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가치와 조직 원리의 우월함을 설득하는 것을 넘어 이를 체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의 개발이다. 목적지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타고 가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한다. 천천히, 조금씩, 하지만 혁신적인 크고 작은 방법론들을 무수히 개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혁명적 변화의 오류에 대한 점진적이며, 경험적인, 따라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coop

토론에 대한 발제자 의견

신성식 (아이쿱생산법인 경영대표)

필자가 제기한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에 대해 애정 어린 평가를 해주신 토론자들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건강한 토론이 축적되어 협동조합 운동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우선 장종익 교수는 생협이라는 특수성을 협동조합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일반화의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주제는 생협 뿐 아니라 협동조합 일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아이쿱의 현실 때문이기도 하다. 아이쿱은 소비자생협만이 아니라 농민, 노동자 협동조합과 이용자소유기업이 작동되는 협동조합 복합체로서 형식과 내용을 채워가고 있다. 또한 식품만이 아니라 급식, 금융, 건축, 성수동 제화, 공정여행 같은 다양한 영역의 사업을 진행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영역과 주체들이 모여 신생협동조합에 대한 지원활동 사업도 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종류의 협동조합에게 공통적인 부분이 바로 시장이다. 시장이 어떠하냐에 따라 모두 연결되고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상품과 더 높은 동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특수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내용 면에서 새로운 시장에 관한 주장을 모든 협동조합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발제한 글에서 모든 시대, 모든 협동조합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이는 3장 ‘새로운 시장은 꼭 필요한가?’에서 다루고 있다. 이 글의 주제는 “협동조합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이다. 선택을 할 때에 참조해야 하는 것은 시장의 상황, 정치적 상황, 협동조합의 역량을 분석하자는 의견이다. ① 어떤 시대인가? 즉 공급과 수요의 역학관계가 어떠한가? 시장은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위축되고 있는가? 시장의 경쟁상황은 어떠한가? ② 자본과 정치체제는 어떠한가? 자본의 힘은 사회정치적으로 제어되고 있는가? ③ 협동조합의 역량은 어떠한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가?

이러한 판단을 기준으로 볼 때 협동조합은 크게 3가지 시장 상황에서 다르게 성장해왔다고 생각한다. ① 시장이 성장하고 공급이 항상 부족했던 시기 ②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공급이 과잉되기 시작한 시기 ③ 시장이 일부 정체되거나 위축되고 공급이 과잉이지만 독과점을 통해 조절하는 시기

1844년의 로치데일은 ①번의 시대였고 파고르는 ②번에서 ③번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었다고 본다. 이러한 시기 구분이 중요한 것은 그 시기마다 협동조합의 선택이 달랐어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공급과잉의 시기에 공급량을 늘리려는 협동조합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핸드폰의 시대에 삐삐를 아무리 싸게 공급한다고 해도 사업은 파산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①번 시대에는 당연히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지 않지만 ③번 시대에는 필요하다. 협동조합의 사업과 활동은 당연히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낸다. 이런 시대 배경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협동조합의 내적 역량에 관한 것이다. 자신의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면전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21세기 시장에서 자본의 힘은 역사상 규모가 가장 커지고 강력해졌다. 약하고 여린 협동조합이 강력한 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레드 오션에 뛰어들기에는 손실과 위험이 크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원칙과 사업전략들이 어떤 시대와 시장 상황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런 시장의 변화라는 개념을 무시하고 정보비대칭으로만 시장을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조금 비켜서 있는 곳이 있다. 바로 공공경제이다.

OECD 국가의 정부 지출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에 46%에 달한다. …(중략)…사람 중심의 경제를 논할 때, 공공경제영역을 사람 중심의 경제의 중요한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략)… 사회적

경제부문이 정부 및 지방자치체의 사회책임조달제도의 도입과 원자력 유지 정책의 폐기와 재생에너지 정책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금융자본주의단계에서 금융자본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규제와 거대한 국민연금 및 각종 정부기금의 '윤리적 투자'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1]

장종익의 지적은 의미가 있으며 공감한다. 그런데 공공경제가 시장경제와 다른 것은 무엇일까? 공공경제는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만 흘러갈까? 시장경제와 다르게 공공경제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적 동기로 작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작동한다. 그래서 사람중심의 경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공공경제는 정치체제, 경제체제, 시민 정치력의 역학관계에 따라 그 길이 결정된다. 우리는 지난 대선의 화두였던 경제민주화가 1년도 지나지 않아 껍데기만 남거나 역진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된 길로 돌아 올 수 있겠지만 꼭 그렇게 될 것이라는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공경제의 영역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는 사회적 역학 관계의 결과이다.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시장경제 속에 있는 협동조합의 분발이 중요하다.

장종익의 의견과 다른 것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 질 가능성이 높은 것도 품질 정보 비대칭의 문제로 해석하고 있다.

품질 정보의 비대칭성문제가 높은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투자자소유기업의 취급 하에서는 활성화가 덜 되는 반면, 이용자소유기업이 등장하게 되면 이용자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용자소유기업은 이러한 분야에서 서비스 공급자와 서비스 이용자와 '새로운' 관계를 내포하는 '새로운' 시장을 목적의식적으로 만들 수

1 장종익, "나무로서 협동조합과 숲으로서 협동조합".

있는 여지가 높다.[2]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모든 자본기업은 품질정보의 비대칭성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을까? 자본기업은 협동조합처럼 정보공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1982년도에 발생한 존슨앤존슨의 타이레놀 리콜사건[3]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 자본기업이면서도 정보공개에 충실한 기업이 적지 않다. 보다 본질적인 것은 독과점체제가 작동하는 시장에서는 정보비대칭을 이용해서 사업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정보비대칭을 통한 사업은 한마디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정보를 부족하게 주거나 왜곡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공급자가 절대 우위인 상태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다. 독과점 체제의 본질적 문제는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한다는 점이다. 현대의 독과점 시장은 형식은 자유로운 시장이지만 내용적으로 독과점이 작동하면서 정보가 아니라 가격, 물량, 품질을 조절하거나 조직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을 방해하고 시장의 규칙을 만들어낸다.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는 적절한 물량을 공급할 수 없어도 사업이 잘된다.

인류문명 초기의 시장부터 산업혁명 전까지는 전형적인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었다. 2차례에 걸친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처음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적은 소비자 우위가 형성되면서 이른바 '소비자가 왕'인 시대가 시작되었다. 공급과 소비의 역학관계가 비슷해지면서 정보비대칭이 사업에서 중요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시장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 시장은 이전에 겪지 못했던 경쟁과 저성장이라는 증상을 겪고 있다. 또한 자본기업은 소비자 우위의 시장이 지속되면 이익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높아진 생산성과 자본 간 경쟁을 되돌

2 장종익. 같은 글

3 1982년 미국에서 몇 사람이 타이레놀을 복용하고 사망한 일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어떤 정신질환자가 '일부' 타이레놀에 청산가리를 넣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존슨앤존슨사는 정신질환자 한 명이 청산가리를 넣은 몇 병을 막기 위해 3천만 병이나 되는 제품을 수거하였다. 결국 현재 타이레놀은 미국에서 동종 의약품 중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연간 15억 달러 매출을 올리는 효자상품이 되었다.

릴 수도 없다. 자본기업이 선택한 것은 과점기업 간의 연합체제 즉, 독과점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품목에 따라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금융은 전형적인 독과점시장이다. 금융시장이 커지기 전에는 정보비대칭의 문제(본질적으로는 공급자의 절대적 우위관계)로 해석할 수 있지만 현대 시장은 그렇지 않다. 금융정보가 그리 복잡하지도 않고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은행보다 협동조합인 신협이 정보비대칭 문제에서 질적으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근거를 보지 못했다. 또한 정보비대칭만으로는 협동조합의 성장과 위축을 설명하지 못한다.

> *미국, 덴마크, 네덜란드 등의 낙농협동조합들은 낙농가공기업의 독과점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설립 …(중략)… 거래방식 및 소유구조가 변하였고, …(중략)…보다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농축산물의 공급이 과잉으로 전환된 오늘날에는 독과점에 대한 농협의 방어기능은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후략)…*[4]

낙농협동조합들의 독과점 방어기능이 왜 줄어들었을까? 정보공개가 축소된 것은 아닐 것이다. 하나 살펴볼 점은 현재의 시장 체제에서 지금부터 10년~20년 사이에 설립한 새로운(비교적) 협동조합이 오래전 설립된 협동조합과 같은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을까? 협동조합과 달리 10년~20년 사이에 설립된 새로운 기업들이 시장의 중심이 되는 사례는 많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오래된 협동조합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2차 세계 대전 이전에 설립된 협동조합은 대체로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시대를 배경으로 활동하였다. 조합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지만, 자본기업에 제공하는 상품에 대해 적정가격, 정품, 정량이라는 정상적인 사업행위만으로 충분히 성장할

4 장종익, "나무로서 협동조합과 숲으로서 협동조합".

수 있었다. 이를 정보비대칭과 인격적 거래로 설명하기 어렵다. 전통적인 협동조합은 여전히 정보공개와 인격적인 거래를 계속하고 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더 이상 장점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대가 변했다는 말에서 중요한 부분은 시장이 변했다는 것이다. 공급이 부족하던 시대에서 공급이 남는 시대로 바뀌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협동조합은 파산하거나 위축되거나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시대변화에 협동조합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다. 그 중 하나는 협동조합의 가치를 자신의 조직에만 적용하고 외부에서는 자본기업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하거나, 다른 하나는 시장만이 아니라 사회체제를 변화시켜 자본기업의 공격에 대해 방어를 잘하는 것이다. 문제는 전자가 다수이고 후자는 소수라는 점이다. 협동조합은 아직 독과점 시대를 어떻게 헤쳐 갈지에 대한 대응방향과 전력을 마련했다고 보기 어렵다.

> *대표적으로 1927년에 설립된 독일의 협동조합 레베(Rewe)는 유럽 내에서 식료품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중략)…1962년에 설립된 이탈리아의 코나드(CONAD)는 3천여 수퍼마켓 주인들의 협동조합으로 이탈리아 전체 식료품시장의 12%를 차지하고 있다.…(중략)… 이러한 소매상들의 협동조합의 발달로 인하여 대자본의 일방적인 '갑을관계' 관행이나 비정규직 노동착취의 경향을 억제시키고 있는 것이다.*[5]

이러한 사례는 협동조합이 기존 시장에 일정한 영역을 확보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치와 의미이다. 특히 유럽사회에서 협동조합이 사회발전에 긍정적이고 상당한 역할을 하였고 현재도 그러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동조합들이 서서히 약화되는 현상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140년 된 영국 협동조합 은행이 미국의 헤지펀드에게 넘어가고 몬드라곤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노동자 협동조합

5 장종익. 같은 글

인 파고르가 파산하는 사태에 대해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파고르 파산에 대해 이현숙소장도 거론하고 있다.

> *스테파노 자마니 교수에게 파고르 파산신청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의견을 물었다. 그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말했다. 몬드라곤 협동조합 기업집단이 글로벌화 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또 국제화하는 과정에서 수직적 계열화가 이뤄지면서 지배구조에 문제가 생겼다. 협동조합이 기존 시장의 기업처럼 하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적 지배구조와 경영 자체에 협동조합 원칙이 배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6]

실제로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파고르가 파산할 것일까? 그렇다면 어떤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까?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원칙을 언제부터 왜 지키지 않게 된 것일까? 그리고 왜 지금 파산할 것일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가정하자. 그 사람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술 담배는 물론 불규칙적이면서 육식위주의 식사, 운동을 멀리하는 생활 습관 등을 가졌다. 홍길동이 주치의에게 암에 걸린 이유를 물었을 때 건강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답을 듣는다면 어떤 기분일까?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돌팔이 의사일 수밖에 없다. 홍길동은 원전에서 나온 폐기물을 처리하는 일을 주로 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방사능 피폭으로 암에 걸린 것이다. 그런데 의사의 진단과정에서 홍길동의 직업 파악이 부실했다. 홍길동은 파견업무를 하는 비정규 일용직이었다. 10년 동안 방사능 폐기작업에 투입되어 일을 했지만 최근 3년 동안은 건설 공사장에서 많이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파고르가 협동조합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이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6 이현숙,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에서 길을 찾자".

근거는 없다. 다만 가능성이 높을 뿐이다. 필자 생각에 파고르 파산의 1차 원인은 유럽의 시장변화와 백색가전이라는 상품 시장의 변화가 핵심이라고 본다. 백색가의 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치열한 경쟁에 노출 되었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영적 판단 실수가 겹쳐지면서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고 본다. 파산 원인에 대해서는 지면상의 한계와 자료의 부족으로 길게 거론할 수 없지만 이를 협동조합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단순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협동조합이 기존 시장의 기업처럼 하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규정하는 일이다. 이는 과도한 주장이다. 현존하는 협동조합 중에서 기존 시장의 기업처럼 하지 않는 협동조합은 어디인가? 사람과 침팬지의 유전자 유사성이 95% 정도인 것처럼 자본 기업과 협동조합의 DNA는 상당히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종으로 살아간다. 각각의 조직구조가 다르겠지만 사업과정의 상당부분은 유사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팔리지 않으면 안 되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파산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같다. 단순히 '기업처럼 하면 실패한다'라고 규정하면 이 또한 지나친 단순화이다. 기업의 흥망성쇠 원인과 협동조합의 흥망성쇠 원인의 유사성은 90%가 넘는다.

또한 이현숙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기존 시장과 협동조합 시장은 과연 구분되는 것인가?"인데, 협동조합은 기존 시장경제와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완의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스테파노 자마니 교수가 "협동조합이 자본주의에 대항한다거나 대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기업의 대안(alternatives)이다. 시장경제 안에는 자본주의적 경제, 공공경제와 함께 협동조합경제가 공존할 수 있다"[7]라는 주장을 인용하고 있다.

필자는 협동조합의 시장 또는 새로운 시장이란 개념 모두 자본주의와 대립개념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엄밀하게 보자

7 이현숙. 같은 글

면 '새로운 시장'이라는 개념은 넓은 의미에서는 기존 시장이 확대된 것이므로 전혀 다른 시장 즉, 새로운 시장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기존 시장에 없는 상품이 새로운 생산-유통-소비 질서를 구축하는 교환과 거래의 공간, 질서라면 좁은 의미에서는 새로운 시장이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정의한 것이다.[8] 요점은 시대변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협동조합 경제 영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자마니 교수처럼 협동조합이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정도로 개념화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시대마다 시장 경제의 형태와 흐름이 달라지는데 어떤 때는 보완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격렬하게 대립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도하고 때로는 중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주장은 지금 시기의 협동조합은 시장경제에서 멀리 떨어져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협동조합에서 출자금을 통해 조합원의 결합력을 높이는 것만이 능사일까?"이다. 이에 대한 결론으로 "협동조합의 힘은 자본조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많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는 조합원들과의 관계의 힘에서 온다"[9]라고 정리하고 있다. 이 부분은 필자의 글을 약간 오독 한 것 같다.

필자의 주장은 새로운 상품을 통해서 조합원 이익과 만족을 높이고 그와 비례해서 출자금과 조합원 관계를 높여가야 한다는 것이다. 출자금과 조합원의 결합력이라는 두 가지 개념은 모두 결과물이다. 출자금이 높아져서 결합력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결합력이 높아지면 출자금이 높아질 수 있지만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결합력이 높아진다. 조합원의 가입목적은 곧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이 된다. 이는 상품과 서비스, 일자리와 같은 구체적인 것들이다. 이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이 조합원 관계의 본질이

8 신성식. "협동조합 다시 보기".

9 이현숙. 같은 글

다. 그냥 좋은 일이고 가치가 있어서 좋은 관계가 맺어지는 일은 매우 소수이다. 좋은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힘은 얼마 되지 못한다. 결국 조합원의 관계는 협동조합 사업으로 결정된다. 농민 협동조합은 안정적인 판로와 좋은 가격, 농자재의 공동구입이 잘되고, 노동자 협동조합은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생산물이 잘 판매되고 수익이 발생해야 하고, 소비자 협동조합은 가격이 적절해야 하고 믿을 수 있고 품질이 좋아야 한다. 이렇게 사업을 통해 조합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커져야만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출자금도 높아진다. 사업이 잘되지 않는 협동조합에서는 좋지 않은 관계가 형성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이 이용을 중단하거나 탈퇴한다. 이런 상태에서 출자금이 모이는 것을 기대하지 못한다.

이현숙의 바람처럼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에서 길을 찾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미 수많은 선배들이 실천한 방법과 경험들이 쌓여있으므로 걱정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협동조합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원칙은 계속 변화해왔다. 현재 협동조합의 원칙은 포괄적이며 보편적이다. 원칙은 나침반과 지도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데 급변하는 시장에서는 새로운 지도가 필요하다. 한번쯤 내 손의 지도가 부족하거나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금기일까?

협동조합이 가야할 미래에 대해 장종익은 협동조합의 숲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협동조합 생태계와 동일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은: 필자 주) 협동조합의 새로운 흐름은 호혜와 협동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배려와 연대 등을 구성 원리로 하는 사회적경제와 보다 밀접하게 되고, 더 나아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생존을 위한 효율성 추구에 경사되어 온 대규모 전통적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략)… 한 유형의 협동조합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고, 여러 유형의 협동조합들로 구

성된 숲이 '연대'의 원리를 통하여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각 유형의 협동조합들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장점이 있는 반면 다른 문제들은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닌다. 그러므로 한 나라에서 다양한 유형의 협동조합이 고루 발전하도록 만드는 전략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10]

취지와 방향은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방법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전통적 협동조합이 사업에 치우쳐서(?) 약자에 대한 배려와 연대가 약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는 평가는 보완되어야 한다. 전통적 협동조합이 더 분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의 원리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협동조합은 그야말로 개인과 개인의 결사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립한다. 그러므로 자기책임과 자조가 중요한 가치가 된다. 그런데 사회적 협동조합의 일부는 조합원 스스로가 자기책임과 자조를 할 수 없는 관계이다. 이 관계는 일방적이다. 이러한 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공공경제의 복지활동이다. 복지활동을 협동조합형식으로 담는다고 해서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직원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복지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노동자협동조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때도 조합원의 자기책임과 자조에 따라서 노동자협동조합이 되거나 복지기관이 될 것이다.

숲을 이루기 위한 연대는 필요하지만 아직 그 구체적인 그림이 완성된 사례가 많지 않은 것 같다. 담론으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일정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한 유형의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협동조합 간 협동이라는 원칙과 연대의 담론만으로 숲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한국사회에서 생협 간 연대에 대해서는 많이 제안하지만 농협과 생협의 연대에 대한 제안은 매우 적다. 하지만 공

10 장종익. 같은 글

원의 조경이 아니라 제대로 된 숲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협과 생협의 연대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 나라에서 다양한 유형의 협동조합이 고루 발전하도록 만드는 전략'의 출발은 시장에 관한 문제가 아닐까? icoop

활동가 입장에서 바라 본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

때/곳: 2013년 11월 22일(금)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회의실
참석: 김순희 (김포아이쿱생협 이사장)
정현화 (강서아이쿱생협 이사장)
정설경 (서울아이쿱생협 이사장)
사회/정리: 손범규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원)

사회자: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아이쿱생협 활동가의 관점으로 바라본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입니다. 각자의 현장 경험들을 바탕으로 소신껏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얘기를 끌어내기 위해 큰 질문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중심의 경제'란 무엇인가요? 또한 사람중심의 경제가 이상적이라 하는데 왜 현실에서는 큰 규모를 차지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현화 (강서아이쿱생협 이사장, 이하 정현화): 저는 자본의 이익을 위한 경제가 아니라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경제가 사람중심의 경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중심의 경제가 주류가 되지 못한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자본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위한 노력이 꾸준히 있어도 이를 실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또 누군가 본격적으로 나서서 논의하지도 않았고요. 이번 발제문처럼 한국 사회에서 사람중심 경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화두를 던지고 토론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쿱생협에서는 지금까지 사람중심의 경제를 꾸준히 실현해왔어요.

정설경 (서울아이쿱생협 이사장, 이하 정설경): 사람중심의 경제에 대한 생각은 동의해요. 그동안 협동조합이 그나마 사람중심의 경제를 구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부분적으로 해왔지만, 문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조직의 규모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 다시 사그라드는 역사의 반복 속에서 협동조합이 계속 부흥할 수 있는 과제를 파악하고 실천하는 것이 사람중심 경제의 궁극적인 해법인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선 협동조합 안에서 책임과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해요. 이번 논의도 그동안 여러 혁신의 실험들을 바탕으로 '이제 이 정도는 시도해 볼 수 있겠다'는 어떤 검증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해요.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단순히 이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참여하도록 이끌어야 하는데, 주변 활동가들과 얘기해 보면 대체로 이용만 하고 싶지 참여, 특히 돈의 참여 부분에는 거부감들을 많이 드러내요. 하지만 우리 활동가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자본을 모으는 것을 넘어 자본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 그 자체이고, 이것이 사람중심 경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김순희 (김포아이쿱생협 이사장, 이하 김순희): 현재 자본 중심의 시장질서 내에서는 자본을 가진 사람이 상품을 만들어내고 소비자는 단순히 상품을 이용하는 주체로 대상화 되어 있어요. 소비자는 이용 대상일 뿐 상품을 바꿔 내거나 상품에 대해 가진 생각을 표현하고 참여하는 게 차단이 되어 있죠. 하지만 소비자 협동조합의 조합원은우리가 함께 상품의 내용을 만들어가고,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물품 구매 행위 자체를 협동조합 활동의 참여로 인식할 수 있어요. 즉, 대상화되지 않고 스스로 '뭔가 이 안에 발을 딛고 가고 있다'는 의식이 생기지요. 그런데 실제 참여 의

김순희 (김포아이쿱생협 이사장)

지는 조합원들 간에 격차가 있어요. 매장이 빠르게 늘면서 최근 가입한 조합원들은 단순히 생협 매장이용을 좋은 상품을 선택하는 취향의 문제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이런 현상이 확대되면 주인의식이 약해지고 조합원이라는 정체성보다 상품을 사는 일반 소비자로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협동조합의 원칙은 없어져버리고 자본주의의 한 부분인 마트 개념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큰 문제인 거죠.

같은 맥락에서 최근 우리가 표상처럼 생각하는 스페인 몬드라곤의 '파고르'나, 영국 '협동조합 은행'의 경영위기 사례를 보면 심각한 위기감이 느껴져요. 지금까지 협동조합의 어떤 유토피아적 상을 가지고 왔는데 과연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만약 우리 조합원들의 현재 의식수준에서 어떤 큰 사건이 터져버린다면 지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기 속에서 협동조합을 지키는 힘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 협동조합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자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회: 세 분 모두 협동조합을 통한 사람중심의 경제가 더 커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사업의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자본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발제문에 동의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협동조합이 사람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작동케 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장과는 다른 새로운 시장을 구축해야 성공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쿱생협의 사례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김순희: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독자상품과 관련해 생각해보면 조합원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상품과 브랜드에 대해 자부심이 있어요. 다른 곳에서도 살 수 있지만 왠지 자연드림이 좋아서 온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쿱생협은 ○○이다'하고 생각나는 부분이 있고, 아이쿱생협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상징으로 떠올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꾸준히 축적되면서 우리만의 상징성을 가지고 오히려 시장으로 밀고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정설경: 우리만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생존전략이 필요한데, 생협 진영 안에서는 이것이 다소 위험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해요. 예컨대 '아이쿱생협은 갈수록 자신들만의 리그를 만드는구나', '결국 다른 생협들을 어떤 식으로든 평정하려는 의도가 있구나'라고 잘못 해석 할 수도 있어요. 아이쿱생협만의 새로운 시장을 밖에서 어떻게 볼지에 대해 입장과 원칙이 필요하고, 이것이 조합원들과 잘 공유되어야 해요. 개인적으로는 생협 진영에서 좀 더 나눠도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요. 아이쿱생협이 생협 진영에 같이 판을 키워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시장'이라는 개념이 기존시장 대비 새로운 시장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사실 생협 진영이 갖는 시장 개념이라는 것도 따로 있거든요. 이런 새로운 시장 개념에 대해 잘 구분해서 정리해야, 새로운 시장에 대해 자칫 다른 생협은 없고 아이쿱생협만 있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더 구체적인 상들이 필요해요.

김순희: 유통과 상품의 문제를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아이쿱생협이 유독 상품에 집중하는가 생각해봤을 때, 협동조합도 엄연히 사업체이고 사업 속에서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워요. '공공성 강화운동'처럼 운동 차원에서 진행하는 부분과 달리, 사업 구조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독자적인 상품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상품을 통해 우선 인프라와 모범적인 틀을 만들면서 이를 활용해 협동조합 생태계를 지원해야 해요. 단순히 상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유통에 대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설경 (서울아이쿱생협 이사장)

정현화: 저도 아이쿱생협의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해요. 독자상품, 독자유통에 대해 어떤 분들은 아이쿱은 자본 기업과 경쟁을 회피하는 게 아니냐, 규모를 너무 많이 키우는 거 아니냐 물어요. 특히 저희 조합이 3번째 매장을 준비할 때 조합원들이 그런 우려들을 했어요. 저는 지금의 확장이 규모를 불린다기보다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강서구 인구가 60만이 넘는데 우리 조합원은 1,700명이 채 안돼요. 이 정도로는 지역의 현황을 변화시키기 힘들어요. 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독자상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조합원들이 A마크를 보면서 "A가 세 개네? 그럼 이거는 믿어도 되겠네" 이런 말을 해요. 아이쿱의 오가닉 라면에 붙은 A마크 3개를 보고 안심하고 아이도 먹일 수 있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쿱생협의 상품이 기존 시장 상품과 똑같다면 조합원들은 싼 곳으로 갈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통도 독자유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회: 만약 아이쿱생협이 기존시장에 있는 상품을 싸게 파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자본조달이 쉬운 자본기업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하죠. 어쨌든 세 분 모두 '새로운 시장이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사회적 경제 안에서 협동의 의미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핵심 요인으로 '기존시장에서 충족되지 못한 조합원들의 새로운 요구'를 어떻게 사업목적에 담아 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자본기업의 소비자 요구조사와는 어떻게 다르며, 이 때 지역생협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정현화 (강서아이쿱생협 이사장)

정현화: 지역생협은 조합원들의 요구를 다각적으로 수렴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품위원회나 마을모임에서 상품에 대한 민원을 받고 있어요. 어떤 상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으면 아이쿱생협에서는 그 요구에 맞게 만들어 내요. 이렇듯 지역생협의 역할은 조합원들과 '소통'이예요. 마을모임, 동아리 등 여러 채널을 통해서 조합원들과 소통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합원들에게 정보를 잘 전달해야 합니다.

정설경: 기존 시장의 소비자는 파편화되어 있고, 소비자의 요구라는 것도 시장에서 재화로 얻어질 수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일 뿐이죠. 반면 우리는 조직화된 소비자예요. 조합원들의 요구에서 나온 상품의 속성과 시중의 상품은 속성이 상당히 달라요. 예컨대 시중의 커피에서 카제인 나트륨이라는 첨가물을 뺐다고 광고하지만 나머지 성분들은 그대로 있고 이를 말하지 않죠. 우리는 기존의 안전성 개념에서 더 나아가 최대한 물성을 해치치 않는 범위에서 뺄 수 있는 건 다 빼고 있어요. 또한 조합원의 요구가 단순히 소비자 민원 형식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토론 등 의견수렴의 과정, 즉 민주주의라는 훈련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중요해요. 그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생협은 더 작게 나눠져서 의사수렴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고, 리더십이 잘 발현될 수 있는 구조로 가야한다는 것이 아이쿱생협의 전략으로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봐요.

김순희: 비슷한 입장이에요. 자본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대상화 시키는 과정들이 있는 반면, 어쨌든 우리는 끊임없이 조합원들의 요구를 들으려고 하잖아요. 생수 사업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환경운동의 측면에서 일정 반대 요인도 많았지만, 사실 조합원 다수가 원했던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여러 난제를 극복하고 결국 만들어 내니까 굉장히 잘 팔리는 거예요. 그 결과로 얻은 이익금을 다시 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금으로 돌리는 것을 보면, 단순히 이윤만 추구했다면 명분과 정당성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결론은 조합원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모아나가는 지역생협의 역할이 아이쿱생협이 가진 대단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결국 협동조합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면 조합원들이 기존시장에서 충족하지 못한 새로운 요구를 사업목적으로 담아내는 것이 핵심이고, 아이쿱생협에서는 그 역할을 지역생협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군요.
다시 자본의 문제로 돌아가서 발제문에 따르면 조합원의 책임은 소비의 이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자본 조달을 책임지는 것이고, 그 책임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한 '책임출자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정현화: 조합원의 자본조달 책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방법 면에서 볼 때 만약 출자금이 처음부터 지나치게 높으면 진입장벽이 생겨요. 처음 가입하는 조합원들에게 많은 출자금을 유도하기란 쉽지 않아요. 저는 일단 선배 조합원부터 자본조달 책임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책임 출자를 단계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본에 대한 책임만이 무임승차를 방지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육이나 캠페인 등의 병행을 통해 조합원들의 책임의식을 높여야 해요. 처음부터 돈을 많이 냈다고 책임감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정설경: 조합원카드 돌려쓰기 같은 무임승차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그것을 줄이기 위해 책임출자금 제도를 만들고, 이용출자금도 높여서 자본조달을 하려고 하면 '뭐야 돈을 또 내라는 거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수매선수금이 처음 나왔을 때 거부감을 보이던 것과 똑같아요. 끊임없이 소통하다 보면 필요의식을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기여자 우선의 원칙은 협동조합의 큰 특성이에요. 짐을 많이 지운 사람에게 혜택으로 주는 것, 기여자를 먼저 배려하는 것이 필요해요. 1인 1표의 원칙에 따라 100만 원 낸 사람과 10만 원 낸 사람을 돈으로 차별하진 않지만, 더 많이 참여

한 사람, 위험을 진 사람을 우대해 줘야 해요. 출자는 내가 협동조합에 대해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봐요. 물론 돈이라고 하면 일단 위화감이 작용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낼 수가 없는데,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중심 조합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냐'고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협동조합의 근본정신은 1인 1표이지만, 동시에 경제적인 참여의 원칙도 있어요. 이에 대해 공감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김순희: 저는 이 부분은 협동경제라는 측면에서 봐야한다고 생각해요. 협동조합의 자본은 누가 돈을 많이 출자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만들어 나가야 하는 부분인 것이죠. 어쨌든 전체 조합원이 공동으로 책임져야하는 것인데 거기까지는 의식이 못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협동경제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만든 조직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 하면서,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거나 같이 끌어안고 가야돼요. 그 속에서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 나가야 합니다. 자본이 안정적이지 않은 구조는 위기가 왔을 때 지켜낼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사회: 그렇다면 아이쿱생협에서 자본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설경: 우리 조합원의 차입 훈련은 사실 지금 많이 정착이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자라는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하지만 차입보다는 출자가 많아져야 하고, 출자를 해야 차입의 기회를 주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손범규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원)

지금까지 차입은 단순히 이익을 얻고 생협에 대한 신뢰도 조금 얻는 경험의 과정이었다면, 생협의 성장과 결과물을 함께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참여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 하는 것도 있지만 경제적인 참여 훈련도 필요한 것이죠. 또한 기여자에게 혜택을 주는 장치가 있을 때 사람들이 더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수매선수금도 처음에는 혜택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참여 하라고 하니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하지만 일정한 혜택을 주기 시작하니까 참여율이 높아졌거든요. 사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참여를 유도하는 장치들이 필요해요.

김순희: 얼마 전 워크숍에서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어쨌든 자본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요. 사실 기본출자금만 내고 오는 사람과 책임출자금을 낸 사람이 똑같다면 일반 조합원들이 출자에 참여할 요인이 없어요. 출자를 더 많이 한 사람에게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야 일반조합원들도 참여할 거라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다양하고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해요.

정현화: 조합에서 매장을 내면 혹시 차입금은 안 받느냐는 전화가 와요. '은행보다 이율이 높고 안전하다', '망할 조직은 아니다'는 소문이 나니까 너도나도 하는 거예요. 저희 조합에서는 이제부터 차입을 하려면 최소한 90~100만 원 정도 출자를 해야 나머지 차입을 받겠다고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에게 100만 원 정도의 책임출자금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물론 차입에 대해 장기간 높은 이율을 가져가면 안돼요. 우리가 책임출자금을 하려는 이유도 차입금을 줄이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단계적으로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사회: 조합원의 주인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출자라는 경제적인 측면 외에 협동조합의 결사체로서 성격은 어떻게 조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현화: 결국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출자만으로는 주인의식 강화가 쉽진 않아요.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내요. 100만 원 정도 없어도 된다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100만 원을 엄청 크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따라서 아이쿱생협의 자본을 조합원들이 책임져야 할 필요성과 이유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해요.

김순희: 그건 협동조합의 7원칙에 잘 나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아이쿱생협은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의제사업들, 약자와의 연대, 밀양 송전탑 문제나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 때문에 일단 조합원들이 자본기업과 다르게 바라봐요. 대기업은 절대로 그런 문제에 참여하지 않거든요. 또 아이쿱생협만큼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데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소비조직이라고 하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회적인 활동을 적극 실천가고 있어요. 지역사회 기여에도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회: 그런 사회적 활동들이 경제적인 참여와 함께 버무려졌을 때 상호 시너지효과가 난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순희: 그렇죠. 이런 부분이 조합원들이 대기업과 아이쿱생협을 다르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이지요. 적어도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남을 속이거나 남을 짓밟진 않잖아요. 그 말은 곧 '이 조직은 조합원을 대상화시켜서 이윤만을 추구하는 건 아니겠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정설경: 결국 7원칙에 의한 활동의 조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특히 지속적인 정보의 공유, 조합원한테 조달받은 자본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상호교감이 가능해야 해요. 돈만 출자하고 다른 건 하지 않는 조합원에게도 대의원으로서 총회에 참석하여 일 년에 한번이라도 정보가 공유될 수 있게 해야 해요. 주인의식이란 것이 돈을 많이 내서 생기기도 하는

데, 주인의식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돈을 찾아 가거든요. 예전에 ○○공장 건립에 상당한 금액을 출자한 분이 있는데 처음 출자 때는 엄청 적극적이었어요. 그런데 출자 이후 조합 활동이 시들해지니까 그 돈부터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일 년에 한 번씩은 그 공장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선물로 주면서 '당신은 ○○공장의 출자자입니다'라고 확인시켜주는 일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별거 아닌 거 같지만 그분은 그런데서 오는 시들함을 느꼈던 것이죠. 결국 경제적인 참여와 함께 활동의 가치가 조화롭게 가지 않으면 주인의식은 늘 변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아이쿱생협의 사례를 통해 기존 협동조합 운동에 대한 재성찰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각을 여러 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 좌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coop

생활현장

이슈 ▪ 현대판 봉이 김선달은 과연 누구인가?
-상수도 민영화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22조 원 퍼부은 4대강사업의 실체

현대판 봉이 김선달은 과연 누구인가?
-상수도 민영화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한국의 상수도 현황: 상수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150만 명

한국의 상수도는 전국 162개 지자체가 나누어 소유·운영하고 있다. 전기요금이 전국 단일요금인 것과 달리 물은 162개 지자체마다 요금이 다르다. 수원이 넉넉한 지자체가 있는 반면 물 부족에 시달려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사와야 하는 지자체도 많다. 7개 특별·광역시 등은 지자체 재정이 넉넉하여 상수도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고 자체 취·정수 시설을 갖추어 깨끗하고 값싼 물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소도시와 군·면 단위로 갈수록 시설이 노후되었다. 공급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비싸고 보급률도 낮다. 전국 평균 상수도 보급률은 97.9%이다. 그러나 면 지역의 경우 86.7%에 불과하다. 수도꼭지가 있다고 모두 상수도가 아니다.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우물 등에 의존하는 인구 즉, 상수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대략 150만 명에 이른다는 사실은 대다수 국민들이 모르는 엄연한 현실이다.

<표 1> 지역별 상수도 보급률

구분	총인구 (천명)	급수인구 (천명)	급수보급률 (%)	직접급수량 (천㎥/일)	1인1일당 급수량 (L)
전국	51,717	50,638 (48,938)	97.9 (94.6)	16,398	335
특별·광역시	23,658	23,639 (23,558)	99.9 (99.6)	7,253	308
시지역	18,833	18,657 (18,608)	99.1 (98.8)	7,879	423

읍지역	4,210	3,994(3,825)	94.9(90.9)	1,265	187
면지역	5,016	4,348(2,947)	86.7(58.8)		

수도요금의 편차도 크다. 전라남도가 786.5원으로 가장 높고, 전라북도가 773.0원, 울산광역시가 763.6원 순으로 높다. 생산원가는 강원도가 1,385.9원으로 가장 높은데, 요금은 734.2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53%에 불과하다. 요금이 가장 낮은 지역은 520.1원인 서울시이다. 생산원가도 621.4원으로 제일 낮고 현실화율은 83.7%로 높다. 서울시민이 가장 저렴하고 질 높은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자체 간 취수원 존재와 개발 여력, 수돗물 생산 시설의 규모, 정수처리에 따른 비용, 취수원과 공급지역간 거리 및 지형, 광역상수도에서 물을 구입하는 비중, 유수율 현황 등이 생산원가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이다.

<표 2> 시·도별 수도요금 비교

구분	연간 총 급수량 (천㎥)	연간부과량 (천㎥)	부과액 (백만원)	요금 (원/㎥)	생산원가 (원/㎥)	현실화율 (%)
전국	6,020,698	5,025,096	3,112,121	619.3	813.4	76.1
서울특별시	1,187,287	1,113,675	579,276	520.1	621.4	83.7
부산광역시	374,007	340,698	216,809	636.4	833.6	76.3
대구광역시	286,197	256,473	137,772	537.2	583.5	92.1
인천광역시	353,152	304,439	196,358	645.0	696.3	92.6
광주광역시	173,423	145,802	76,416	524.1	626.7	83.6
대전광역시	187,533	167,803	81,310	484.6	541.5	89.5
울산광역시	115,884	102,674	78,402	763.6	920.5	83.0
경기도	1,378,025	1,205,638	745,738	618.5	734.5	84.2
강원도	229,076	146,686	107,695	734.2	1,385.9	53.0

충청북도	199,037	163,677	111,825	683.2	850.6	80.3
충청남도	221,276	166,539	120,937	726.2	1,049.6	69.2
전라북도	277,478	196,174	151,646	773.0	1,029.0	75.1
전라남도	195,021	133,030	104,623	786.5	1,164.1	67.6
경상북도	384,477	257,994	167,668	649.9	1,077.8	60.3
경상남도	382,761	265,451	199,118	750.1	1,004.9	74.6
제주도	76,067	58,344	36,531	626.1	985.0	63.6

전국에서 수도요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 정선군이다. ㎥당 1,382.2원인데, 생산원가는 2,528.0원으로 현실화율은 54.7%에 불과하다. 수도요금이 높은 지역은 대체로 강원도 지역이다. 수도요금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 군위군으로 ㎥당 평균 379.8원이다. 그런데 생산원가는 1,187원으로 높아 요금 현실화율은 32%에 불과하다. 전라남도 무주군은 요금 평균이 453.2원인데 생산원가는 2,891원으로 현실화율이 15.7%에 불과하다. 요금이 낮으면서도 현실화율이 93.1%인 곳이 경상남도 진주시이다. 남강 수원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지자체 수도 요금은 자체 수원지가 있고 광역상수도에 대한 의존도가 낮을수록 즉, 물을 사다 쓰지 않아도 되는 지역일 경우 낮게 나타난다. 또한 공급비가 높다 할지라도 수도요금이 공공재라는 인식 때문에 쉽게 올릴 수 없는 것이 현실 조건이기도 하다.

<표 3> 수도요금 고・저 지역 현황

높은 지역					낮은지역				
수도 사업자	요금 (원/㎥)	생산원가 (원/㎥)	요금 현실화율 (%)	가정용 요금 (원/㎥)	수도 사업자	요금 (원/㎥)	생산원가 (원/㎥)	요금 현실화율 (%)	가정용 요금 (원/㎥)
강원 정선군	1,382.2	2,528.0	54.7	707.6	경북 군위군	379.8	1,187.0	32.0	285.3

강원 평창군	1,210.7	3,407.0	35.5	656.6	경북 청송군	418.8	1,030.0	40.7	335.1
강원 영월군	1,074.7	3,146.0	34.2	931.6	전북 진안군	428.3	2,724.0	15.7	344.2
경남 통영시	1,066.7	1,203.9	88.6	715.1	전남 곡성군	437.5	771.2	56.7	336.7
경기 가평군	1,056.4	1,971.0	53.6	718.9	경기 성남시	444.9	497.0	89.5	291.9
강원 태백시	1,048.9	2,345.9	44.7	812.6	전북 무주군	453.2	2,891.0	15.7	403.7
강원 인제군	995.8	1,765.0	56.4	397.0	강원 춘천시	469.6	722.0	65.0	311.5
전남 여수시	981.7	1,284.3	76.4	695.7	경북 봉화군	481.4	626.0	76.9	405.3
강원 홍천군	954.3	1,496.4	63.8	479.4	경남 진주시	485.1	521.0	93.1	348.1
강원 양양군	932.8	2,044.0	45.6	497.9	경기 하남시	490.0	605.2	81.0	340.6

수도요금이 지역마다 다르고 보급률의 편차가 크며 수도시설의 현대화 수준도 제각각이라는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왜일까? 언제나 수도꼭지를 틀면 나오는 것이 수돗물이고, 낮은 가격으로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게 물이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물이 공공재라는 인식이 강해 국가와 지자체가 깨끗한 물을 언제나 공급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그 소중한 존재의 실상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이제 깨질 때가 되었고 배반당할 시점이 되었다. 상수도 민영화 정책이 지금과 같이 추진된다면 물은 이제 공공재가 아닌 시장재, 곧 상품으로 언제라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잊혀진 흐린 기억 속의 민영화

공기업이었던 한국통신이 민영화된 지 10년이 훌쩍 넘었다. 무료이던 114가 어느 순간 유료가 된 사실을 국민들은 쉽게 잊었다. 통신 3사의 과점 상태 속에서 가구 당 통신 요금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도 통신이 공공재였다는 사실은 향수조차 남아있지 않다. 통신 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30억짜리 사장임용, 이윤에 고배당 행진으로 재투자를 회피하고 있는 통신산업의 현실은 통신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사회적 통제망은 전혀 없다. 국민의 혈세로 일군 산업이 일순간 민영화되어 이윤은 사적으로 귀속되고 공공의 성격은 날아가버린 상황에 대해 통탄하는 사람조차 없다. 이것이 민영화의 결과이다. 현재의 SK가 오래전 민영화된 유공의 전신이며, 대한항공이 민영화된 기업이라는 사실도 기억 저 멀리에 있다. 포스코가 공기업 포항제철이었던 시절은 한국통신 민영화와 같은 시기인 불과 10여 년 전이었다. 이렇듯 국민의 혈세로 만든 기업을 국민들에게 묻지도 따져보게 하지도 않은 채, 마구잡이로 민영화하여 재벌에게 넘겼다. 재벌은 수익성에 혈안이 된 사기업일 뿐, 국민이 혈세로 만들었던 과거는 철저히 지워버리고 말았다.

전력과 가스의 민영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철도 민영화가 문제라는 말은 들려온다. 그러나 상수도가 민영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일 것이다. 아직까지는 수자원공사라는 '공사에 의한 위탁'이기 때문에 정부와 수공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한다. 국민들 역시 수도꼭지에서 물이 잘 나오고, 물값이 그 어떤 재화보다 싸기 때문에 큰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의 위탁 정책은 민영화를 배제한 적이 없었다. 현재의 위탁 정책은 수자원공사를 민영화하거나 혹은 상수도 사업을 민간에게 개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민영화 정책의 한 과정에 불과하다. 더욱이 수자원공사가 '공사'라는 이름으로 과연 공사에 걸맞게 위탁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현재 진행되는 위탁 방식의 상수도

민영화 프로세스는 통합 및 광역화라는 이름으로 언제 어느 때라도 금세 민영화라는 폭주열차로 갈아탈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상수도 위탁 및 통합 정책

2001년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상수도사업에 대한 위탁 정책이 본격화되었다. 그 동안 지자체가 전담했던 수도 사업을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민간기업이 진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허'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재의 국토부와 환경부는 경쟁적으로 물기업 육성, 물시장 개방정책을 추진해왔다. 수자원공사를 필두로 전국의 상수도를 통폐합하여 2개의 물기업을 육성하여 세계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원대한 포부였다. 전국의 상수도를 통폐합하여 위탁한 후 유수의 물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그 유수의 물기업은 현재의 수자원공사이거나 민영화된 수자원공사이거나 혹은 민간기업이었다. 2000년대 중후반까지 추진되던 물기업 육성정책, 물시장 개방정책은 4대강 정책으로 인해 잠시 주춤하였다. 물 산업에 진출할 요량이었던 물기업들이 4대강이라는 또 다른 물-건설 산업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다시 상수도 위탁 정책은 활기를 띠게 되었다. 무엇보다 향후 유수의 물기업이 되어야만 할 수자원공사부터 수익처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환경부가 주도하여 현재의 162개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사업을 2020년까지 39개로 선(先) 통합하고 2030년까지는 5개 내외로 대형화하겠다는 과감한 프로젝트 즉, 민영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환경부는 2010년 7월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환경부는 우선 해마다 2~4개 권역 통합을 추진하고 소유와 경영분리를 통한 경영 전문화를 유도하겠다고 한다. 환경부 추산 2014년 이전에 통합을 희망하는 시군 44개를 중심으로 먼저 통합을 하고 시범권역에 대한 관망(管網)최

적화 사업이 종료되는 2014년 말 유수율 제고 등 통합운영 성과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이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말이 자율통합이지, 지방교부금으로 협박하고 지자체를 압박하는 식의 강압적 통합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4> 환경부 통합 추진계획 내용

○ 통합규모: 소규모 행정구역 중심에서 대규모 유역 중심으로 관리 구역 개편
- 중권역 3~7개 시・군 단위로 통합한 후 유연단위로 대형화
- 관리권역 164(2009)→ 39개(2020) → 5개 내외(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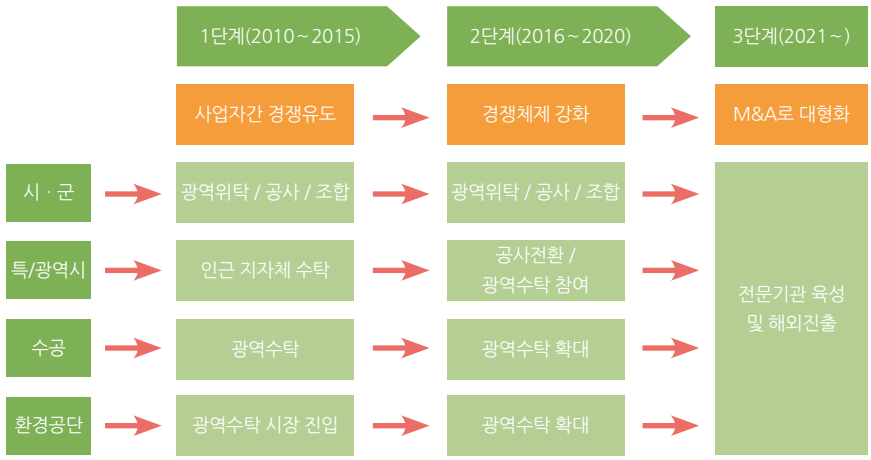
○ 운영방식: 직영에서 대규모 수도사업자 및 공기업 위탁 체제로 개편하여 수도사업 전문 경영능력 확보
- 통합권역 급수체계조정 및 유수율 제고로 시너지 효과 제고
- 유수율 63%(2008) → 80%(2020) → 85%(2030)(대상 일반 시・군)

○ 추진방법: 중앙-지자체간 역할분담을 통한 자율적・점진적 통합
- 지자체는 통합의 주체로서 운영방식결정 등 주도적 역할 수행, 중앙정부는 통합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주력

현재의 통합정책은 광역단위로 위탁 혹은 공사화를 추진하고 특별・광역시는 인근 지자체를 흡수하여 대형 공사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미 위탁 정책을 선도하는 수자원공사, 신규 진입자인 환경공단이 경쟁하여 광역수탁 시장에 개입하여 완전 경쟁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형화된 공사,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 간 경쟁이 다시 M&A를 통해 전문기업으로 발전하여 해외시장까지 진출한다는 것이다. 물론 환경부 통합 추진방향에 민간기업의 이름은 빠져있다. 그러나 '대형수도사업자'에 민간 기업이 나설 수 없는 법적・제도적 제약은 전혀 없다. 대형수도사업자는 기존 공사 및 공단 즉,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이 될 수 있다. 이후

공사가 될 특별·광역시도 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경쟁력과 자금력이 있는 민간 기업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 오히려 민간 기업은 어느 정도 통합이 진행된 이후, 손 안대고 코 푸는 격으로 수도사업에 진출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통합 후 날름 주워 먹어 보겠다는 것이 민간기업의 노림수이자, 역대 민영화 정책이 한 번도 피한 적 없었던 역사의 행보였다.

<그림 1> 수도사업 통합 중장기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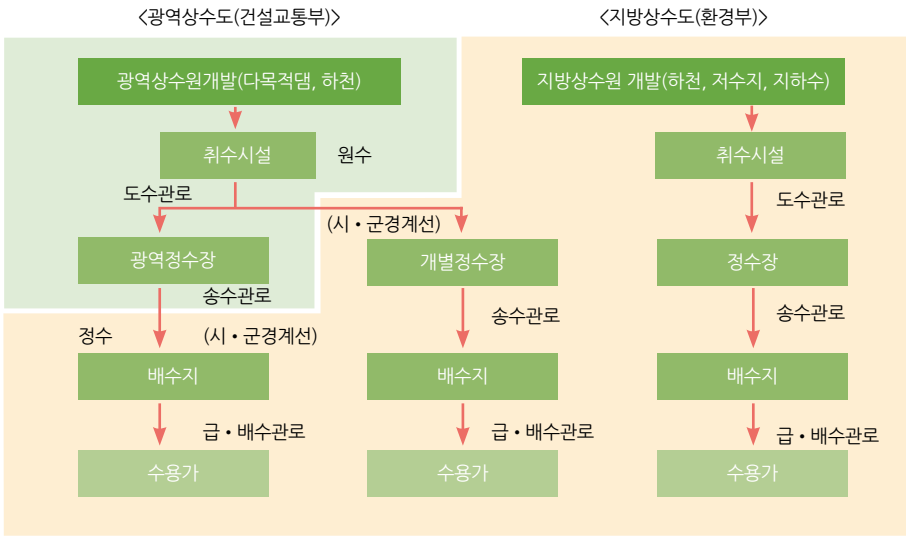


누가 누구의 물을 팔 권리를 주었던가?

수자원공사는 현재 21개 지자체의 상수도 사업을 위탁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상수도사업을 위탁하기까지는 참으로 기막힌 과정을 밟았다. 원래 수자원공사는 치수라는 이름으로 댐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기관이었다. 한국의 댐이란 것이 본래 치수의 기능보다 건설자본의 이해관계에 지배되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바이다. 전쟁 이데올로기까지 동원하여 코 묻은 돈에, 돼지 저금통을 털었던 것이 바로 평화의 댐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댐 하나에만도 수조 원이 들던 그 막중한 건설 사업이 이제 과잉된 댐으로 가로막히게 되자, 수자원공사는 댐 안에 갇힌 물을 관리하는 기능

에 머물게 되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물이 부족한 지자체가 생겨난 것이다. 무지막지한 국토의 개발, 환경파괴로 인해 취수지를 잃거나 취수원을 개발할 재정여력이 없는 지자체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의 물, 원수를 사서 쓰기 시작한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원수를 팔기 시작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수장을 건설하여 정수를 팔기 시작했다. 이른바 물장사를 시작한 것이다. 판매에서 시작한 물장사가 운영권을 획득하기 위해 나서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장의 논리다. 한국의 상수도가 광역상수도인 수자원공사, 지방상수도인 전국 162개 지자체로 이원화된 역사가 바로 이렇게 시작되어온 것이다.

<그림 2> 상수도 이원화 공급 흐름도



2013년부터 8년 만에 수자원공사의 원수・정수비가 올랐다. 현재 수자원공사가 판매하는 원수는 톤당 223원, 정수는 톤당 413원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울시의 상수도 생산원가가 621원이라는 점에 비추어보아 결코 싸지 않은 가격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가격 여부를 떠나 수자원공사가 건설했고 관리하고 있는 댐의 건설비는 국민의 혈세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 안에 갇힌 물은 명백히 국민의 것이다. 그 누가 수자원공사에게 그 물을

팔 권리를 주었단 말인가. 왜 국민들은 그 물을 사서 써야할 처지로 전락한 것인가.

<표 5> 광역상수도 단가

구분	종전단가(2012.12.31까지)			현행단가(2013.1.1부터)		
	계	기본요금	사용요금	사용요금	기본요금	사용요금
원수	213	64	149	223	67	156
정수	394	118	276	413	124	289
침전수	298.3	89.3	209	313	94	219

희대의 사기계약인 상수도 위탁

수자원공사에 의한 위탁 초기 지역인 논산과 사천시는 참으로 최악의 계약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당 주민들이 거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이들 지자체와 수자원공사는 30년 기간으로 상수도 위탁 계약을 했다. 위탁 계약서는 해마다 지자체가 수자원공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불변가격으로 책정해 명시하고 있다. 불변가격은 위탁 초기에는 원래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비용보다 낮게 책정되었다. 이 때문에 수자원공사는 선투자라는 이름으로 지자체 담당자들을 매혹시켜 쉽사리 위탁 계약을 성사시켰다. 그런데 이 불변가격인 위탁 대가는 운영대가와 시설개량대가가 포함된 내용으로 책정된다. 무려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불변가격이라는 것이 가능한가? 수자원공사가 아무리 공사라도 선투자라는 호조건으로 지자체에 봉사해줄 리가 있을 것인가? 이 모든 의문은 '불변가격'이라는 마법과 같은 숫자놀음 속에 숨겨져 있었다.

물가도 해마다 상승하고 물 사용량도 해마다 변할 것이고, 인구도 달라질 것이 분명한데도, 해마다 지자체가 수자원공사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은 불변가격이라는 이름으로 고정불변의 금액이 계약서상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그 가격은 위탁 초기에는 낮게 책정되어 있다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계약서를 꼼꼼히 뜯어본 결과 '불변가격'은 해마다 물가인상률을 곱할 수 있도록 탄생한 개념이었다. 30년 위탁 기간 동안 불변할 듯한 가격은 위탁 다음 해부터 해마다 소비자물가인상률이 복수로 곱해져 최종 위탁 시기인 30년 후에는 무려 29번이 곱해지는 마법을 발휘하도록 계약서에 '명명백백히' 명시되어 있었다. 더구나 논산과 사천시의 경우 운영대가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원수·정수비가 불변가격 안에 포함되어 있다. 수자원공사가 가둬놓은 물이, 누구의 소유도 아닌 국민들 모두의 소유인 그 물이, 30년 위탁 기간 동안 29번 물가인상률이 곱해지는 엄청난 기본비용으로 늘어나는 마법이 발휘되는 것이다. 사천시의 경우 30년 위탁 기간 불변가격으로 총 3,000억 원 정도의 위탁대가로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물가인상률을 29번 곱해보니 사실상 위탁 대가는 5,000억 원대를 훌쩍 넘는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변했다. 이러한 희대의 사기계약은 정부의 눈가림 아래 여전히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은 아직까지도 이러한 계약 조건으로 계속 위탁 계약을 체결하려 시도하고 있다. 해당 주민들은 여전히 영문도 모른 채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 물은 흔하고 남용할 수 있는 대상이다. 많은 사람들이 물을 펑펑 써도 될 것이라 여긴다. 그러나 살 떨리고 값비싼 것이 물인 나라가 있다. 2006년 경 에너지와 물 민영화에 대항하는 남반구 여성들의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 필리핀 마닐라의 빈곤층 여성들의 증언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프랑스 물기업이 잠식한 마닐라의 여성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지치고 지친 몸으로 밤에 가사노동을 해야 했다. 비싼 물 값 때문에 계량기가 감지하지 않을 물을 밤새 졸졸 받아서 그 물로 밥을 짓고 빨래를 해야 한다

고 했다. 시골의 아이들과 여성들은 물 한 동이를 긷기 위해 하루 종일 물동이를 이고 다니는 노동에 시달리고 아이들은 물을 위해 학교를 포기한다고 하였다. 남미에 진출한 초국적 물 기업들은 빗물도 받지 못하게 했다고 하였다. 극단적인 사례로 보이지만 허구가 아닌 사실이다. 다행히도 제3세계 국가들에서 초국적 물기업은 쫓겨났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물의 재공영화, 국유화를 위해 국민투표도 하고 싸움도 하고 있다. 식당에 가서 맨 처음 나누는 대화가, "너 물 마실래? 아님 딴 거 마실래?, 뭐 시킬래?"가 아닌, 물을 통으로 마구 퍼주는 그런 나라는 아마 한국이 유일할 것이다. 우리가 누리는 어쩌면 큰 행복이다. 그 마땅한 권리를 여전히 누릴 것인지 아닐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물은 유한하다. 환경의 파괴가 물을 유한하게 만들고 있다. 아껴 쓰고 절약하는 것을 넘어 공공의 의무로 잘 관리하는 것이 개인의 몫이자 지역 공동체가 할 일이다. 물과 전기와 가스는 대체재가 없다. 삼양라면이 비싸면 농심라면을 먹고, 나이키가 싫으면 프로스펙스를 선택하면 되는 소비재와 근원적 차이가 있는 것이 물이고 에너지이다. 물의 시장화와 민영화를 막고, 나아가 물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한 걸음을 디디는 것이 우리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이다. 함께 고민해 나갔으면 한다. icoop

22조 원 퍼부은 4대강사업의 실체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감사원, 4대강사업은 총체적 부실 사업으로 결론

지난 10월 14일부터 박근혜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번 국감에서 최대 쟁점 중 하나는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였다고 할 수 있고 각 상임위마다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 4대강사업의 민낯을 앞에 두고 어설픈 분칠을 하기도 하고 가면도 씌워봤지만 4대강의 본 모습은 오히려 더 명확하게 보였다. 그럼에도 끝까지 물타기하며 블랙 코미디 수준의 황당한 논리를 펴는 4대강사업 추진 세력들의 뻔뻔함에 말문을 잃었다.

지난해에 이어 낙동강에 대규모 녹조가 창궐한 원인을 두고 올해 국감장에서 어느 대학 교수는 '녹조발생과 물의 흐름(유속)과는 상관없다'는 증언을 하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녹조가 생긴 것은 수질이 나아졌다는 뜻'이라는 궤변을 펼쳤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4대강사업은 총체적 부실 사업이며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4대강사업에 대한 각종 문제점들이 불거지자 4대강사업 추진측은 "200년 앞을 내다보고 정책적 차원에서 결정했고 장래 대운하에 대비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사업 완료 후의 휘황찬란한 조감도를 손에 들고 4대강사업으로 우리나라 물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몰아붙이던 호기는 온데간데 없다. 물론 200년이란 말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4대강사업의 긍정적인 모습은 200년 후에나 나타나기 때문에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를 지금은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4대강 현장에는 초등학생도 인식할 수 있는 수질악화가 진행되고 있고, 물속에 잠겨있는 보는 이미 붕괴하기 시작하였다.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홍수예방

4대강사업으로 물확보(가뭄해결), 수질개선 및 홍수예방과 같은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MB 정부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물 부족 지역은 산간농촌지역과 도서해안지역이므로, 수요처와 공급처가 너무 멀기 때문에 4대강사업으로 확보한 물을 이용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 당연히 확보한 물은 사용처가 없고 향후 사용계획 조차 없다.

지난해 금강과 낙동강에 대규모 물고기 폐사사건이 발생했고 4대강사업을 한 구간에는 대규모 녹조가 발생했다. 올해도 11월초까지 낙동강에서는 녹조가 창궐하였다. 급격한 수질악화에 의한 녹조발생은 현실화되었고 식수 대란이 발생할 조건은 무르익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것은 하천에 설치한 보(weir)다. 보는 물을 고이게 하고 고인 물은 썩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시켜 주었다.

물 확보와 수질개선의 허구성이 밝혀지자 4대강사업 찬성측은 궁여지책으로 4대강사업은 홍수예방 효과가 있었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2008년 국토부가 발간한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간 홍수예방투자 1.1조 원, 홍수피해액 연간 2.7조 원, 복구비 4.2조 원에 이른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간은 20세기 들어 태풍에 의한 홍수피해가 극심한 기간에 해당한다. 2002년 태풍 루사,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등으로 우리나라는 쑥대밭이 되었지만 피해지역 대부분은 복구 되었다. 연간 복구비가 4.2조 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태서 홍수 위험을 완전 해소하자는게 MB 정부의 논리였다. 통계자료를 악용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부풀렸다.

홍수예방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4대강사업 전에 홍수위험지역이 사업 후 어느 정도 해소되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국가하천 정비율은 2008년 기준으로 국가하천은 97%, 지방하천은 84%가 완료되었다. 국가하천의 길이는 약 3천km이고 홍수예방을 위한 4대강사업의 준설구간은 686km에 지나지 않는데, 21세기 들어 준설구간은 홍수로 인한 범람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 10여 년 간 국가하천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액은 전체

의 3.6%이고 4대강사업 구간에서는 전체의 0.2% 정도(대부분 침수피해)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는 4대강사업 구간이 하천에서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난 40～50년간 정부가 꾸준히 홍수예방사업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홍수 위험지역은 지천이라는 의미이고, 불행히도 4대강사업으로 오히려 홍수 위험을 증가시켰다. 4대강에 조성한 자전거길과 공원 등은 홍수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고, 역행침식으로 많은 지천의 제방이 유실되었으며 교량들은 주저앉았다.

이와 같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4대강사업의 목적은 허구였고 이는 4대강사업이 물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운하사업의 1단계였다는 점을 방증한다. 독일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운하를 만들면 홍수 위험은 증가하고 수질은 악화되며 확보한 물은 배 띄우는데만 사용하기 때문이다. 22조 원의 예산으로 홍수예방 사업을 했다는 찬성 측의 주장은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꼴'이라 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보 건설과 준설사업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기본취지는 국가경제 차원에서 당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 간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MB 정부는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이 구체적으로 검토되던 중인 2009년 3월 25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을 개정하여 '재해예방'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대상사업으로 추가시켜,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했다. 이러한 정부의 사업추진에 대해 낙동강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① 개정된 시행령 제13조의 '재해예방' 부분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재해예방이라는 이유를 들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모법인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

로 반하고 국가재정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② 설령 그 효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보의 설치는 재해예방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③ 보의 설치, 준설 등의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MB 정부가 보의 설치, 준설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MB 정부는 임기 내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시간표에 맞추다 보니 각종 절차를 위반하였다. 4대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법, 문화재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낙동강재판부와 감사원에 의하여 이미 밝혀졌고,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위반하였거나 무시한 사실도 곧 공식적으로 밝혀질 것이다. 이와 같이 4대강사업은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도 무시한 위법한 사업이었다.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추진한 보건설과 준설사업은 4대강사업의 핵심 분야이기 때문에 4대강사업의 위법성에 대한 상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보의 안전성

4대강의 보 16개는 3년 만에 설계하여 공사를 완료했다. 보통 댐 건설이 설계기간 포함 10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말 그대로 속도전이다. 함안보의 사례를 살펴보자. 2011년 7월 공사를 마치고 2012년 6월 30일 준공처리하였다. 1년여 동안 보수·보강공사를 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수자원공사 자료에 따르면 함안보 '흠결사항(균열, 누수 등)에 대한 보수·보강'을 완료한 시점은 2012년 8월이었다. 보수·보강 공사를 하고 있는 시점에 준공처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준공 직전에 감사원이 수중 촬영한 영상을 살펴보면 함안보 본체의 많은 지점에 콘크리트가

깨졌고 표면에는 콘크리트가 떨어지는 박리현상이 발생하였으며 대규모 수평 및 수직 균열이 발생하였다. 또한 수직 이음부에 구멍이 나서 물이 분출되고 있었고, 보 하류부에서는 적어도 6개 지점 이상에서 파이핑 현상으로 물이 바닥에서 솟구치고 있었다. 이런 현상은 물속에 잠겨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준공처리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함안보 시공사는 공사 도중 발주처 지시로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들어간 147억 원을 포함한 추가공사비 226억 원을 지불하라고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수자원공사는 함안보는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A등급)라고 우기고 있다. 그러나 함안보는 주요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한 불량(E등급)에 해당한다. 물론 이런 상태에 있는 함안보가 당장 무너지지는 않을 테지만, 내구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이미 발생한 것이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조만간 보가 주저앉을 수도 있다. 4대강의 나머지 보 역시 함안보와 비슷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우려스럽다.

인도의 간디는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의미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운하를 염두에 둔 4대강사업은 한술 더 떠서 잘못된 방향으로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였다. 그리고 속도와 안전은 같이 갈 수 없다. 모래위에 설치된 보는 안전성 문제에서도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될 것이다.

공무원과 전문가들의 책임

감사원은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공무원들이 4대강사업에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고, 입찰 정보를 사전 누출했으며 입찰담합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법 등 많은 법령들을 위반하거나 무시하면서 대국민 사기극을 이끌었다. 곳간을 훔친 도둑(건설회사)도 나쁘지만, 곳간을 열어

젖혀 놓고 뒤에서 도둑질하라고 부추긴 머슴(공무원)들이 더 나쁜 법이다. 그럼에도 사기극으로 밝혀진 4대강사업에 대해 책임지는 공무원은 없고, 오히려 더 높은 자리, 더 힘 있는 자리로 영전했다. 주인을 농락한 머슴들 대신 머슴의 하수인(건설회사)들만 책임을 지는 꼴이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찬 공기가 느껴지는 가을(11월 초)에도 녹조는 사그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폭염 때문에 4대강에 녹조가 발생했다던 공무원들은 입을 다물고 있다. 고인 물은 썩는 법이다. 녹조 때문에 시궁창 냄새가 나는 물을 낙동강변에 살고 있는 국민들 1,500만 명이 먹고 있다. 그럼에도 국토부와 일부 지자체장들은 녹조와 4대강 사업은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고, 한술 더 떠서 독성물질이 있더라도 먹는 물 수질 기준 이하여서 문제가 없다고 우기고 있다. 이러한 대국민 사기극에 교과서에도 없는 논리를 제공했던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 대가로 훈장 등 포상을 받았는데, 그 수가 무려 1,157명에 이른다.

사르트르는 그의 저서 '지식인을 위한 변명'에서 지식인의 가장 직접적인 적은 '사이비 지식인'인데, 이들은 지배계급의 사주를 받아 과학적 연구방법의 산물인 것처럼 제시되는 논리를 통해 특수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옹호한다고 지적하면서 그들을 '집지키는 개'에 비유하고 있다. 지식인들이 한번쯤 곱씹어 볼만한 가르침이다. 대국민 사기극에 일조한 전문가들이 그 대가로 받은 훈·포장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국무총리실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한계

지난 8월 국무조정실에서 중립 인사들로만 조사·평가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시민사회단체에 4대강사업을 찬성한 토목학회 등에서 추천받은 인사들이 '중립'인지 평가해달라고 요청했다. 4대강사업에 찬성했던 많은 전문가들이 스스로 중립이라고 주장하면서 학회를 통해 위원회 참여에 지원했다. 국무조정실이 제시한 중립의 기준은 4대강 사업에 대

해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인사라고 한다. 모양새는 그럴듯하지만 위원회는 색깔만 조금 덜한 4대강 사업 찬성 쪽 인사들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 사업이었고,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이름만 바꾼 것이었다. 청와대는 "만약 그렇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이 22조 원의 예산으로 진행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4대강 사업에 대해 한마디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던 전문가들이 스스로 중립이라고 주장하면서 위원회에 들어갔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사회적 전환기에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조사권한도 극히 제한적이고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만들어주는 자료를 책상 위에 놓고 갑론을박 하다가 국토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체면치레용 평가결과를 내놓을 것이다. 결국 4대강 사업 추진세력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국가를 위한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면 다소 잘못은 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사업이었고 조금만 손을 보면 문제점들을 해결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런 비판을 의식했는지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는 4대강 현장조사를 수행할 조사 작업단을 신설법인 형태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중립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사로 법인을 설립할 예정인데, 현시점에서 그러한 인사는 찾기 어렵고 또 다른 꼼수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감사원이 4대강사업이 위장된 대운하사업이었음을 밝힌 이상 대운하에 대해 분명히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박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람들로 대통령 직속 4대강사업 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위에게 전권을 줘야 한다. 대신 공청회 등을 통해 4대강사업을 추진한 측에 반론권을 충분히 주면 된다. 현 정부가 이렇게 미적거려봤자 스스로 발목을 잡

는 것이고 결국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게 된다. 현 정부가 그대로 안고 가기에는 4대강사업은 너무 뜨거운 감자다.

재(再)자연화를 통해 4대강에 다시 생명을

강은 흘러야 한다. 물이 흐르기 때문에 강에 여울과 소(웅덩이)가 형성되고 물고기의 산란처와 피난처를 제공한다. 그리고 강에는 많은 모래톱이 조성되어 물을 정화하기도 하고 서식처를 제공하기도 하며 우리나라 강만이 갖는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기도 한다. 그러한 강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시인묵객들이 강을 화폭에 담고 노래했다. 이것이 본래 강의 모습이다. 강을 살리겠다면서 물의 흐름을 차단하는 대규모 보를 설치하고 모래를 준설하는 4대강사업을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면서 속도전으로 진행했다.

유럽에서도 한 때 운하를 만들기 위하여 보 건설을 했다. 라인강에 보를 설치하여 물의 흐름을 막아 홍수 위험을 증가시켰고 보 하류부에서는 모래가 유실되자 인공적으로 모래를 공급하여 생태계를 유지시킨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EU는 하천에 댐건설과 준설과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로 하천 생태계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2000년에 물관리 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4대강사업과 같은 사업은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미국 역시 깨끗한 물법(Clean Water Act)를 만들어 하천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는 생태계 복원을 위한 활발한 하천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하천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많은 보와 댐들을 해체하고 있다.

이제 황폐해진 4대강에 대한 재자연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물이 흘러야 한다는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4대강에는 16개 대규모 보가 설치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예산으로 설치한 보를 철거하는데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보가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 보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 대안으로 ① 보를 유지하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② 보의 구조변경을 하는 방안 ③ 보를 철거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각 방안에 대한 공학적 평가, 환경성 평가, 경제성 평가, 사회적 수용가능성 평가 등을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4대강의 실체적 진실은 4년 후?

MB 정부는 22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국민세금을 전문가들의 곡학아세와 권력의 힘으로 4대강사업이란 이름의 운하사업에 퍼부었다.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것이다. 이것이 4대강사업에 대한 필자의 평가이다. 그런데 4대강에 녹조가 발생한 것을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인식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다. 4대강사업은 진실과 거짓의 문제이다. 올해 들어 감사원의 2차례 감사발표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수많은 진실들은 그동안 4대강사업에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던 측의 주장이 옳았다는 것을 충분히 밝혀주었다. 그럼에도 진실을 뭉개려는 시도는 여전히 감지된다. 물타기로 국민들을 양비론에 휩싸이게 하고 4대강사업 반대 측이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어리석은 시도가 통했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한다. 4대강사업의 진실은 일시적으로 물속에 잠겨 있을지 몰라도 엄연히 숨 쉬고 있다. 22조원의 수업료를 지불하고 우리 국민들은 '오래된 상식'을 확인했다. 그러나 상식을 무시했던 과정을 밝히는데 4년이란 세월을 더 기다려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의 불행이다. 4대강사업은 이미 '4대강 게이트'로 이행되었기 때문이다. 깊어가는 가을밤 진실은 과연 무엇이며, 거짓이 진실이 될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상념에 잠긴다. icoop

아이쿱 생협만평

이동수

30년 후 기초연금, 현행법상 기초노령연금의 절반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 공약 후퇴, 쟁점과 대안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기초연금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정부가 그것을 크게 후퇴시켰기 때문인데요. 먼저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원안이 무엇인지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원안은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매달 A값(최근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의 10%를 기초연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누리당과 언론에서는 그것이 월 20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이들이 20만 원이라는 수치를 자주 언급한 것은 2014년 A값이 200만 원 정도일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박대통령이 공약한 기초연금(원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어떤 차이점이 있었나요?

⇨ 차이는 크게 여섯 가지였습니다. 첫째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은 전액 정부재원(지자체 재원 포함)으로 조달됩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급여를 받는 노인들의 급여를 줄여서 재원의 일부로 활용한다는 구상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기금과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기금을 헐어서 그것을 재원의 일부로 활용한다는 구상을 전제로 했습니다. 셋째, 기초노령연금은 독신가구와 부부가구의 수혜액 비율이 1대 1.6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그 비율이 1대 2입니다. 넷째, 현행 기초

노령연금은 중하위 70%를 수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전 계층을 수혜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섯째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소득과 연계해서 차등지원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소득 중하위 70% 계층의 99%는 9만 7,100원(독신가구)을 받고, 1%는 5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계층별 차등지원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올해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지자체 예산을 포함하여 4조 3,000억 원 규모입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소요예산은 2014년 이후 4년간 연평균 17조 5,0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박 대통령은 기초연금을 2014년부터 지급할 것이라 공약했습니다)

17조 5000억 원이라는 추정치가 나온 근거는 무엇인가요?

⇨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과 2017년 사이 4년 평균 노인 인구는 675만 명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A값이 2014년 200만 원에서 매년 5%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4년 평균 A값은 215만 5천 원이 되고, 기초연금 월액은 A값의 10%인 21만 5,500원이 됩니다. 또 4년 평균 기초연금 연간 지급액은 21만 5,500원에 12개월을 곱한 258만 6천 원이 되고, 4년 평균 기초연금 총지급액은 258만 6천 원에 675만 명을 곱한 17조 4,555억 원이 됩니다.

* 4년 평균 노인 인구 : 675만 명
* 4년 평균 A값 : 215만 5천 원
* 4년 평균 기초연금 월액 : 21만 5500원(A값의 10%)
* 4년 평균 기초연금 연간 지급액 : 258만 6천 원(12개월)
* 4년 평균 기초연금 총지급액 : 17조 4,555억 원(=258만 6천 원 x 675만 명)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은 인수위 시절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당시에는 주로 어떤 것이 쟁점이 되었나요?

⇨ 1월 초 박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이 기초연금 재원 중 30%를 국민연금 기금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언론에 흘렸는데요. 이것이 여론을 크게 악화시켰습니다. 결국 박 대통령이 여러 차례 나서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다짐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박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또 노인들의 국민연금 급여를 줄여서 기초연금의 재원의 일부로 활용하는 방안도 언론에 흘리지 않았나요?

⇨ 맞습니다. 박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이 그와 같은 방안을 언론에 흘려서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중 신규 가입자가 크게 줄고 탈퇴자가 늘었습니다.

<표 1>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연도별 동향(단위: 명)

연도	신규가입자	탈퇴자	순증
2009	20,670	11,918	8,752
2010	72,303	18,447	53,856
2011	119,552	38,640	80,912
2012	106,697	69,941	36,756
2013 (10월 10일까지)	44,463	67,361	-22,898

(주) 국민연금공단이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가공
(원자료 출처 : 신의진 의원실 보도자료 (2013.10.15))

박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이 취임 전부터 이와 같은 방안들-기초연금 재원 중 30%를 국민연금 기금에서 조달하는 방안과 노인들의 국민연금 급여를 줄여서 기초연금의 재원의 일부로 활용하는 방안-을 언론에 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 대선 전부터 이들은 그와 같은 기초연금 재원 조달방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의 기초연금 재원 조달방안의 허술함은 대선 직전 새누리당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약별 재정 소요액 자료'에서도 잘 드러나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4년간 기초연금 재정소요액은 14조 6,672억 원(연평균 3조 6,668억 원)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들은 연평균 3조 6,668억 원 이외의 비용은 국민연금 기금을 헐거나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줄여서 조달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연평균 3조 6,668억 원 이외의 비용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 앞에서 올해 기초노령연금 재정 소요액이 4조 3천억 원 규모라 했습니다. 또 4년 평균 기초연금 총지급액은 17조 5천억 원 규모라 했습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자신의 기초연금 공약을 원안 그대로 실천하려면 향후 4년간 연평균 13조 2천억 원의 추가 재정을 기초연금에 투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선 전에 박 대통령 측근들이 연평균 3조 6,668억 원의 재정만 기초연금에 투입하려 했으니, 나머지 9조 5,332억 원은 국민연금 기금을 헐거나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줄여서 조달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최근 정부는 기초연금 공약 원안을 크게 수정한 기초연금법안(이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공약 원안과 어떻게 다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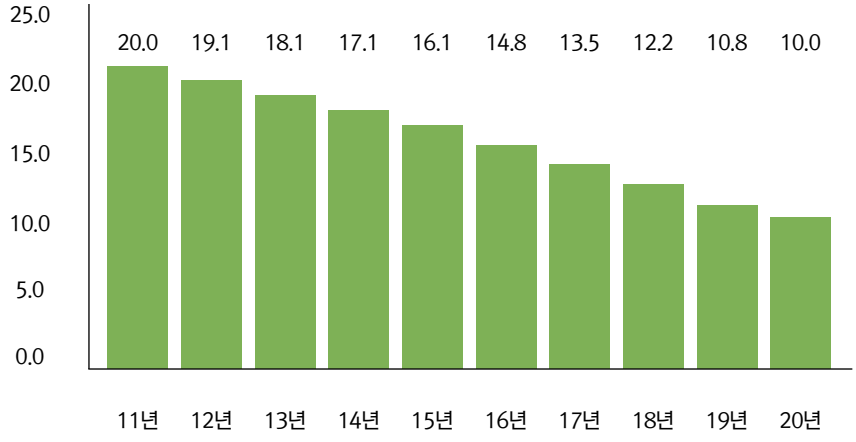
⇨ 차이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원안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하 노인으로 지칭함) 전체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했으나, 수정안에서는 지급 대상이 소득 중하위 70% 계층에 국한되었습니다. 둘째, 원안에서는 A값의 10%(2014년 20만 원)를 지급한다고 했으나, 수정안에서는 기준연금액(2014년 20만 원)을 소비자 물가변동률에 연동시키되, 부수적으

로 A값 상승률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원안에서는 국민연금 장기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A값의 10%를 지급한다고 했으나, 수정안에서는 장기가입자에 대해 기초연금을 기준연금액의 1/2까지 삭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 원안에서는 노인 개개인에게 A값의 10%를 지급한다고 했으나, 수정안에서는 노인 부부 모두 수급자일 경우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정부 수정안이 장기가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입니다. 수정안은 장기가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 정부 수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사람은 20만원(2014년의 경우)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가입기간이 12년 이상, 20년 이하인 사람은 기초연금을 1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적게 받게 되고, 20년 이상인 사람은 일률적으로 기초연금을 10만 원씩만 받게 됩니다.

<그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액(단위: 만원)



(자료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도입계획] 관련 보도자료 (2013.09.25))

정부 수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들이 기초연금을 최대 10만 원까지 적게 받게 되는데요. 기초연금 삭감액은 개인별 소득이나 수급액에 따라 차이가 있나요?

⇨ 정부 수정안에 따르면 장기가입자에 대한 기초연금 삭감액은 수급자들의 소득이나 수급액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은 사람이건 적은 사람이건 오직 유일하게 '가입기간'이라는 한 가지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률적으로 삭감됩니다.

정부는 박 대통령 기초연금 공약을 수정하기로 한 것이 막대한 재정 부담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박 대통령 공약과 정부 수정안을 비교해 보면 재정 부담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 보건복지부가 최근 몇 개월간 발표했거나 언론에 제공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박 대통령 공약을 원안 그대로 실천하려면 2020년에 GDP의 1.25%에 해당하는 예산이 필요하고 2040년에는 GDP의 3%에 해당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 수정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2020년에 GDP의 0.8%에 해당하는 예산이 필요하고 2040년에는 GDP의 1.9%에 해당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또 최근 보도자료에서 중하위 70% 노인 계층에 20만 원씩 지급하는 안의 재정 소요액도 발표하지 않았나요?

⇨ 정부는 9월 2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중하위 70% 노인 계층에 20만 원씩 지급하는 안의 재정 소요액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중하위 70% 노인 계층에 20만 원씩 지급하려면 2020년에 GDP의 0.9%에 해당하는 예산이 필요하고 2040년에는 GDP의 2.1%에 해당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정부 수정안과 큰 차이 없습니다. 즉 정부 수정안대로 기초연금을 추

진하면 2020년에 GDP의 0.8%에 해당하는 재원이 필요하고 중하위 70% 노인 계층에 20만 원씩 지급하면 같은 해에 GDP의 0.9%에 해당하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양자 간에 GDP의 0.1%에 해당하는 재정 부담 차이가 나는데요. 큰 차이는 아닙니다. 지금부터 27년 후인 2040년의 재정 부담 차이를 비교해 보아도 양자 간 차이는 GDP의 0.2%에 불과합니다. 역시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의 기초연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야당에서는 정부 수정안이 현행 기초노령연금에 비해서도 더 후퇴한 안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 단기적으로는 정부 수정안에 따른 기초연금이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많을 겁니다. 2014년의 경우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A값의 5%지만, 기초연금은 A값의 10%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년 후부터는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더 적어집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발표한 미래 경제전망 지표를 토대로 양자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 현행 제도 하에서 10년 후가 되면 노인들은 27만 2천 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 수정안에 따르면 노인들은 25만 7천 원(최대)의 기초연금만 받게 됩니다. [수정안에서는 기준연금액(2014년 20만 원)을 소비자 물가변동률에 연동시키되, 부수적으로 A값 상승률을 고려하기로 했음. 그러나 A값 상승률을 고려하기로 한다는 규정 자체가 지나치게 자의적이어서 이 글에서는 이 부분을 무시하고 시뮬레이션을 시행함]

20년 후, 30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 20년 후에는 정부 수정안에 따른 기초연금이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훨씬 더 적어집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 20년 후가 되면 노인들은 49만 5천 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 수정안에 따르면 31만 3천

원(최대)의 기초연금만 받게 됩니다. 또 30년 후가 되면 현행 제도 하에서 노인들은 73만 3천 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 수정안에 따르면 36만 4천 원(최대)의 기초연금만 받게 됩니다. 30년 후가 되면 기초연금이 현행 제도에 비해 반토막이 납니다.

<표 2> 현행법과 정부 수정안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액 차이(단위 : 만원)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소득(A값)	현행법, 인상되는 A값 대비 비율	현행법에 따라 인상되는 기초노령연금	정부 수정안 기초연금 (물가상승률에 연동)	정부 수정안 기초연금 (A값의 .....%)
2014	**200**	**5.0%**	**10.0**	**20.0**	**10.0%**
2015	209	5.4%	11.2	20.5	9.8%
2016	219	5.7%	12.5	21.1	9.6%
2017	229	6.1%	13.9	21.6	9.4%
2018	240	6.4%	15.4	22.2	9.3%
2019	251	6.8%	17.0	22.8	9.1%
2020	263	7.1%	18.8	23.4	8.9%
2021	276	7.5%	20.7	23.9	8.7%
2022	289	7.9%	22.7	24.5	8.5%
2023	303	8.2%	24.9	25.1	8.3%
2024	**317**	**8.6%**	**27.2**	**25.7**	**8.1%**
2025	333	8.9%	29.7	26.3	7.9%
2026	348	9.3%	32.3	26.9	7.7%
2027	364	9.6%	35.1	27.5	7.5%
2028	381	10.0%	38.1	28.0	7.4%
2029	399	10.0%	39.9	28.6	7.2%
2030	418	10.0%	41.8	29.2	7.0%
2031	436	10.0%	43.6	29.7	6.8%

2032	455	10.0%	45.5	30.3	6.7%
2033	475	10.0%	47.5	30.8	6.5%
2034	**495**	**10.0%**	**49.5**	**31.3**	**6.3%**
2035	517	10.0%	51.7	31.9	6.2%
2036	538	10.0%	53.8	32.4	6.0%
2037	560	10.0%	56.0	32.9	5.9%
2038	582	10.0%	58.2	33.4	5.7%
2039	606	10.0%	60.6	33.9	5.6%
2040	630	10.0%	63.0	34.5	5.5%
2041	654	10.0%	65.4	34.9	5.3%
2042	680	10.0%	68.0	35.4	5.2%
2043	706	10.0%	70.6	35.9	5.1%
2044	**733**	**10.0%**	**73.3**	**36.4**	**5.0%**

1 A값 : 국회예산정책처(2012)의 명목임금 상승률 지표 차용
2 2008년 제2차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전망한 명목임금 상승률은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여기에서는 차용하지 않음.
3 2013년 제3차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지난 3월에 국민연금 장기전망 결과만 발표했을 뿐, 그것의 근거가 되는 보고서를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음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가 2012년 발표한 보고서,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에 담긴 명목임금 상승률과 물가상승률 지표를 활용하여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작성)

정부는 자신들의 수정안이 현행 제도보다 훨씬 더 진전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기초연금이 현행 제도보다 훨씬 더 적다면 큰 문제인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제4조의 2 제2항)을 보면 기초노령연금을 2028년까지 A값의 10%까지 인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

가 국회에 제출한 기초연금법안을 보면 기초연금을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상의 차이 때문에 정부 수정안에 따른 미래 기초연금이 현행 제도에 따른 미래 기초노령연금보다 훨씬 더 적게 된 겁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년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소득 200만 원의 5%인 10만 원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그 비율을 점차 높여 2028년 10%에 도달하게 한다는 것인데요. 박 대통령 공약은 그 시기를 내년으로 14년 앞당기는 것 아니었나요?

⇨ 박 대통령의 원래 대선 공약은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약을 원안 그대로 실천하려면 해마다 'A값의 10%'라는 비율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율을 유지하려면 기초연금 상승률을 소득상승률과 연동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 기초연금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기초연금 상승률을 소득상승률이 아니라 물가상승률과 연동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의 기초연금 수급액이 현행 제도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액보다 훨씬 더 적어진 겁니다.

박 대통령 대선 공약 원안과 정부 수정안을 비교해 보면 기초연금 지급액에서 어떤 차이가 납니까?

⇨ 박 대통령 대선 공약 원안은 기초연금을 '소득 상승률'에 연동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수정안에서 기초연금을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상의 차이는 미래의 기초연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앞에서 소개한 추정방식대로 양자 간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10년 후에 대통령 공약에 따른 기초연금은 31만 7천 원이 되지만 정부 수정안에 따르면 25만 7천 원에 그치게 됩니다.

<표 3> 박 대통령 대선 공약 원안과 정부 수정안 차이(단위: 만원)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소득(A값)	박 대통령 대선 공약 (A값의 10%)	정부 수정안 (물가상승률에 연동)	정부 수정안 (A값의 .....%)
2014	**200**	**20.0**	**20.0**	**10.0%**
2015	209	20.9	20.5	9.8%
2016	219	21.9	21.1	9.6%
2017	229	22.9	21.6	9.4%
2018	240	24.0	22.2	9.3%
2019	251	25.1	22.8	9.1%
2020	263	26.3	23.4	8.9%
2021	276	27.6	23.9	8.7%
2022	289	28.9	24.5	8.5%
2023	303	30.3	25.1	8.3%
2024	**317**	**31.7**	**25.7**	**8.1%**
2025	333	33.3	26.3	7.9%
2026	348	34.8	26.9	7.7%
2027	364	36.4	27.5	7.5%
2028	381	38.1	28.0	7.4%
2029	399	39.9	28.6	7.2%
2030	418	41.8	29.2	7.0%
2031	436	43.6	29.7	6.8%
2032	455	45.5	30.3	6.7%
2033	475	47.5	30.8	6.5%
2034	**495**	**49.5**	**31.3**	**6.3%**
2035	517	51.7	31.9	6.2%
2036	538	53.8	32.4	6.0%

2037	560	56.0	32.9	5.9%
2038	582	58.2	33.4	5.7%
2039	606	60.6	33.9	5.6%
2040	630	63.0	34.5	5.5%
2041	654	65.4	34.9	5.3%
2042	680	68.0	35.4	5.2%
2043	706	70.6	35.9	5.1%
2044	**733**	**73.3**	**36.4**	**5.0%**

(주와 출처 위 표와 동일)

20년, 30년 후가 되면 그 차이는 더 벌어질 것 같은데요?

⇨ 20년 후에 대통령 공약에 따른 기초연금은 49만 5천 원이 되지만 정부의 수정안에 따르면 31만 3천 원에 그치게 됩니다. 또 30년 후에는 대통령 공약에 따른 기초연금은 73만 3천 원이 되지만 정부의 수정안에 따르면 36만 4천 원에 그치게 됩니다. 결국 30년이 지나면 수정안에 따른 기초연금이 대통령 공약에 비해 반토막이 됩니다.

정부가 기초연금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저는 올해 상반기에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내놓은 기초연금법안이 현재 가장 좋은 대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의원 법안은 소득 중하위 70% 계층에 대해서는 A값의 10%를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고, 그 위 70~80% 계층에 대해서는 A값의 5%를 지급한다는 것인데요. 이 법안은 만만치 않은 재정소요액과 노인 빈부격차를 충분히 고려한 절충안입니다.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들도 소득 중하위 80% 계층에 A값의 10%를 지급하는 절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김용익 의원의 기초연금법안이 가장 좋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 빈곤층(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미달하는 계층) 비율은 49%에 달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들 중 70%는 빈곤층이나 신빈곤층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기관에 따르면 소득 70~80% 계층에 해당하는 60대 이상 노인들의 소득은 중하위 70% 계층 소득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고, 60대 소득 상위 20% 계층 소득은 50대 상위 20% 계층의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김용익 의원의 절충안이 만만치 않은 재정소요액과 노인 빈부격차를 고려할 때 가장 이상적이며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표 4> 2012년 연령별 소득 5분위 배율 (단위: 만원, 배)

	30세 미만	30~39	40~49	50~59	60세 이상
전체	1,835	3,052	3,601	2,940	1,496
소득 1분위	673	931	884	757	447
소득 2분위	1,409	1,675	1,572	1,376	974
소득 3분위	1,610	2,490	2,159	1,804	1,440
소득 4분위	1,898	3,003	3,200	2,624	1,932
소득 5분위	2,316	4,560	5,963	5,286	4,674
소득5분위 배율(배)	**3.4**	**4.9**	**6.7**	**7.0**	**10.5**

(주) 5분위 배율 = 소득 하위 20% 계층 소득 대비 소득 상위 20% 계층 소득 비율

(출처 :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2012) 자료를 시민경제사회연구소에서 재구성) icoop

이 학교 매점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김은남 (<시사IN> 선임기자)

"복정고 좀 가 주세요."

"어디요? 그런 이름은 첨 들었는데…. 길 건너로 가 보세요."

경기도 성남 복정고등학교를 찾아가던 날 지하철 분당선 복정역에서 택시를 잡으려다 두 차례나 퇴짜를 맞았다. 간신히 세 번째 택시를 잡아타고 학교 인근에 이르니 택시기사들이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알 것 같았다. 큰길에서 벗어나 비포장도로로 300m쯤을 달려야 나오는 그린벨트 속 외딴학교가 바로 복정고였기 때문이다.

개교한 지 4년밖에 안된 이 학교가 요즘 전국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전국 최초로 학교 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영 중인 학교로 소문이 나면서다. 협동조합 정식 명칭은 '복정고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복정고 협동조합) 여기 조합원으로 가입한 학생은 전교생 710여 명의 절반 가량인 350명 안팎이다. 그밖에 교사와 학부모 조합원이 50명 남짓 된다. 대학 생협이야 어느 정도 일반화되어 있다지만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조합원에 가입한 학교 협동조합은 복정고가 유일하다.

'학교 매점은 왜 싸구려 간식만 팔까' 문제의식에서 출발

복정고 협동조합은 지난 10월 24일 친환경 매점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협동조합 이름으로 벌이는 첫 사업이다. 왜 매점부터 시작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글머리에 밝힌 대로 이 학교는 도심에서 꽤 떨어진 곳에 있다. 학교 주변을 둘러봐도 문방구나 다른 편의시설을 찾기 어렵다. 주전부리 할 데는 더더욱 없다. 분식집은커녕 그 흔한 구멍가게조차 없다. 한창 왕성

한 식욕을 자랑할 아이들한테 고문이 따로 없다.

궁여지책으로 아이들이 찾아낸 것이 인근 공사장에 놓여 있던 자판기. 쉬는 시간에 몰래 교문을 빠져나간 아이들은 여기서 500원, 1000원짜리 과자며 햄버거를 사 먹곤 했다. 거개가 이름 없는 브랜드에 제조날짜도 불분명한 조잡한 간식거리들이었다. 그러다보니 언젠가부터 학생·학부모·교사 가릴 것 없이 안전하고 믿을 만한 먹을거리를 취급하는 매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고 이 학교 강연수 교사는 말했다. 다만 매점을 만들자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엄두가 안나 망설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주변을 둘러보면 매점이 있는 학교는 학교대로 문제가 많았다. 이제까지 학교 매점은 외부인에게 임차하는 것이 관례였다. 특히 계약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매점은 해마다 공개 입찰을 해야 하고, 최고가를 써낸 업자에게 임대하도록 되어 있다. 경기도의 경우 학교 매점의 연간 평균 사용료는 3,405만 원. 개중에는 연간 1억 3,500만 원 가량의 사용료를 내고 있는 매점도 있다. 이런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인해 상당수 학교 매점이 학생 복지보다는 영리 추구를 우선시해 왔다고 김명신 교육위원은 지적한다. 이들 매점이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마진이 높되 열량은 높고 영양가는 낮은 싸구려 간식을 판매해 오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들은 이런 실태에 눈을 감았다. 일부 학교의 경우 매점 임대 사업비가 학교 운영비의 10~15%에 달하기도 하는 만큼 해묵은 문제에 손을 대기 어려운 구조였던 것이다.

이런 식의 매점 운영은 곤란하다는 것이 복정고의 판단이었다. 그러다 눈에 띈 것이 서울 구로구 영림중 모델이었다. 영림중은 매점 운영 방식에 문제의식을 느낀 학부모들이 직접 나서 학교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친환경 매점을 오픈한 케이스다. 이 학교의 경우 2011년 학부모들이 학교 모니터링 작업에 참가한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모니터링단의 일원이었던 학부모 김윤희씨(현 영림중협동조합 이사장)는 매점 개선방안을 찾아볼 겸 다른 학교 매점들을 돌아다니다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름도 처음 들어본 제품이 대다수인데다 성분표를 들여다보면 식품첨가물과 화학조미료 투

성이였다. 소스는 또 왜 그렇게 강한 걸 쓰는지. 이런 걸 애들한테 계속 먹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떠올린 것이 학부모·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직접 매점을 운영해 보자는 구상이었다.

그렇게 일년 여를 준비한 학부모와 교사들은 2012년 10월 마침내 학교 한 귀퉁이에 '여물점(여유있고 물좋은 매점)'이라는 친환경 매점을 오픈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한다'는 애초의 비전을 마침내 관철시킨 것이다.

지자체·교육청의 지원, 그리고 '협동조합 간의 협동'

복정고는 영림중의 이런 경험을 벤치마킹하고자 했다. 마침 운도 따랐다. 성남시가 지난 2월 학교 협동조합을 설립할 시범학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낸 것이다. "새 학기를 앞둔 분주한 시기라 학교 구성원 모두가 정신이 없었지만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심정으로 신청서를 냈다"고 강연수 교사는 말했다. 여기에 경기교육청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도 일을 거들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복정고 외 6개 학교를 학교 협동조합 시범학교로 선정해 학교 간 연계를 지원하기로 했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협동조합 인·허가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 결과 복정고는 체계적인 지원 속에서 협동조합 설립 작업을 벌일 수 있었다. 학기가 시작되면서부터 학내 조합원을 모집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고 등록하는 절차를 차근차근 밟았다. 덕분에 법적 절차에 가로막혀 1년 가까이 임의단체 형태로 매점을 운영해야 했던 영림중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사회적 협동조합 등록증도 받을 수 있었다.(영림중도 복정고와 비슷한 시기에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를 받았다)

두 학교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매점은 비슷한 구석이 많다. 우선 복정고나 영림중이나 매점 판매대에 놓여 있는 와플, 고구마 스틱, 웨하스 같은

간식거리들은 한살림·자연드림·두레생협 등 동네 생협에서 판매하는 것과 같은 종류다. 단팥빵, 크림빵, 크로와상 등도 마찬가지다. 우리밀로 만든 것은 기본이고 대부분 무첨가물·무색소 표시가 되어 있다. "매점을 처음 만들 때는 기존의 싸구려 간식 대신 대기업 제품들을 납품받아 팔 것인지, 친환경 생협 제품을 팔 것인지 고민이 많았다"라고 영림중 협동조합 측은 밝혔다. 건강을 생각하면 후자 쪽이 낫겠지만, 문제는 생협 제품이 아이들이 사 먹기에는 아무래도 비싸다는 것이었다. 영세한 소규모 매점에 생협이 물품을 납품해 줄지도 고민이었다.

그러나 가격과 관련된 고민은 두 학교 모두 쉽게 풀렸다. 비싸도 생협 제품을 쓰자는 조합원들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가격이 좀 부담이 될지라도 친환경 먹을거리가 좋겠다는 데 학생·학부모·교사 조합원의 의견이 거의 일치했다"라고 복정고 학부모이자 협동조합 이사장인 황성경씨는 말했다. 실제로 복정고 매점에서 만난 한 학부모는 "무슨 옥수수 스낵이 1300원이나 하느냐?"고 놀랐다가 "수입 GMO(유전자 변형) 옥수수가 아닌 국산 옥수수로 만들어 그렇다"는 말에 금세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납품 문제는 지역사회 생협들의 협조로 해결됐다. 학교 협동조합의 취지에 공감한 지역 생협들이 거래 규모가 작아도 이들 학교에 친환경 물품을 납품하기로 결정하면서 '협동조합 간 협동'이 실현된 것이다.

교사와 학생 간에 동등한 '1인 1표'가 가능할까

학교 협동조합을 통해 새로운 학교 자치를 실험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두 학교는 비슷한 궤적을 밟고 있다. 협동조합은 익히 알려진대로 '1주 1표' 대신 '1인 1표'라는 의사결정 방식을 따른다. 가진 주식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업과 달리 모든 조합원이 동등하게 의사 결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과연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가 대등하게 1표를 행사할 수 있을까? 학교를 둘러싼 우스개 중 하나로 "교실에서의 진정한 자치는 일 년에 딱 하루 실현된다"는 말이 있다. 반 티셔츠를 정하는 날이 그것이다. 그 날 하루만은 아이들의 뜻이 받아들여지되 나머지 다른 날은 교사와 교장, 교육청 등이 학교 운영을 좌지우지한다는 얘기다.

복정고 3학년 서우남군은 "기존에는 학급회의나 학생회에서 이런저런 논의를 거쳐 우리 의견을 전달해도 교사·교감·교장선생님으로 이어지는 결재라인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구조였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협동조합은 달랐다. 일단은 학부모·교사·학생 대표가 나란히 협동조합 이사진으로 참여해 대등한 발언권을 행사했다. 서우남군은 학생 대표 이사로 이사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선생님이나 다른 부모님들이 나를 '서우남 이사'라고 부르며 동등하게 대우해 주는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이들 학생 조합원은 매점을 오픈하기까지 역할을 주도했다. 복정고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치른 지난 6월 이후 이들은 벤치마킹팀·교육팀·공간기획팀 등으로 팀을 나눠 분과 활동을 벌였다. 매점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건지, 더 나은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어디를 견학하고 조합원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학생 조합원 스스로 고민에 나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사·학부모 등 어른 조합원들과 의견이 부딪칠 때도 있었다. 이를테면 매점 운영을 개방식으로 하느냐, 폐쇄식으로 하느냐 같은 논쟁이 대표적이다. 당시 어른들은 학생들이 직접 매장 내에 들어와 물건을 고를 수 있는 개방식을 지지했다. 신뢰를 중시하는 협동조합 정신에 비추어도 개방식이 맞다는 게 중론이었다. 반면 학생들은 혼잡이 심해질 우려가 있다며 폐쇄식을 지지했다. 이로 인해 도난 사건이라도 발생하면 신뢰가 오히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나아가 주변 학교 실태도 조사하고 나섰다. 그 결과 개방식을 채택한 학교 매점들의 경우 쉬는 시간이면 100명이 넘는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 줄을 서는 바람에 학생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팩트를 기반삼아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열의로 학생들은 어른 조합원들을 설득했다. 매점 이름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기왕이면 순우리말 상호가 좋지 않겠냐는 게 어른 조합원들의 의견이었지만 학생들은 다섯 차례에 걸친 조합원 투표 끝에 '복스쿱스(Bok's coop)'를 매점 이름으로 결정했다. 부르기 친근하면서도 세련돼야 협동조합에 대한 애정도 더 깊어진다는 게 이들이 내세운 논리였다.

복정고 학생 조합원들이 협동조합 홍보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이고 있다

"보통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자'고 하면 아이들이 대충 따라오지 않나. 그런데 아이들이 사사건건 교사들의 의견을 뒤집었으니 이전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셈이다"라고 한 교사는 웃으며 말했다. 어찌 보면 하극상.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발성이 살아나고 아이들이 생기를 찾더라는 것이 교사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수업 시간에 꾸벅꾸벅 졸던 녀석들도 매점 문제로 회의하고 투표할 때는 눈빛이 반짝반짝하더라"는 것이다.

협동조합 매점 덕분에 '빵 셔틀'이 사라졌다고?

영림중 또한 학부모가 참여한 학교 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는 중이다. 통상 학교 입장에서 학부모는 껄끄러운 존재다. 최근에는 학교폭력 문제 등으로 시비 붙는 일이 잦아지면서 더 그렇다. 학부모 또한 학교에 피해의식이 있다. 봉사활동 등으로 학교의 필요에 의해 동원되곤 했던 기억 때문이다. 이에 반해 영림중은 협동조합 설립 이후 학교와 학부모간에 자연스러운 협업 모델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학부모 조합원들이 학교에 상주하면서 학교폭력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이 영림중의 자체 평가다. "예전 같으면 매점 인근 사각지대에서 '빵 셔틀'이 벌어지곤 했다고 한다. 그러나 엄마들이 늘 매점을 지키면서 그런 일은 상상할 수 없게 됐다"라고 조합원 김현아씨는 말했다. 그뿐 아니다. 학부모 조합원들은 일에 치인 교사들을 대신해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도 하고 있다. 김현아씨는 "매점에서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다 보면 소위 문제아라는 아이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 아이들한테는 일부러 따뜻한 말 한 마디라도 더 건네려고 노력한다. 담배 냄새가 나도 뭐라 꾸짖기보다 '냄새 좀 신경 써야겠는데?'라고 돌려 말한다. 이렇게 관심을 보이면 아이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임대료 부담, 조합원 자격 등 걸림돌 산재

영림중·복정고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 협동조합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가 활발하다. 경기도에서는 복정고 외에 시범학교로 지정된 5개 학교가 이미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 중이다. 성남시와 경기교육청은 복정고 시범사업을 토대로 학교 협동조합 표준 모델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또한 '학교 협동조합 추진단'을 발족시켜 학교 협동조합 설립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향후 학교 협동조합

이 자리를 잡게 되면 매점 사업 외에 교복 공동구매나 수학여행·공정여행 프로그램 등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구상이다. 모두가 학생·학부모·교사 조합원에게 이득이 될 사업들이다.

문제는 학교 협동조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여럿이라는 사실이다. 매점을 만들 경우 일단 임대료부터가 부담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아무리 학생들이 주인이 된 협동조합형 매점이라도 학교 등 공유재산을 이용할 시에는 임대료를 내야 한다. "남는 수익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목표였는데 임대료를 물고 나면 인건비조차 건지기 어려울 듯하다"라고 복정고 강연수 교사는 말했다. 이를 개선해 달라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국·공립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협동조합 시행령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 예고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 9월 국무회의가 이를 부결시키면서 학교 협동조합의 미래가 다시 안개 속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학부모 조합원들이 지금도 사실상 절반은 무급 자원봉사로 매점을 지키고 있다. 조합원들의 희생을 기반삼아 매점이 운영되는 이런 구조가 과연 지속 가능하겠나"라고 김윤희 영림중 협동조합 이사장은 반문했다.

학부모 조합원들이 복정고 협동조합 매점을 돌아보고 있다

학생이 조합 활동을 하기도 쉽지 않은 구조다. 복정고의 경우 조합원으로 가입한 학생 3백여 명이 복잡한 등기 절차를 밟느라 진을 빼야 했다. 이사로 선출된 학생들에게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훨씬 더 복잡한 공증 절차가 필요했다. 이래서는 청소년들이 협동조합 조합원으로서 다양한 체험을 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학교 협동조합이 중요한 이유

그런데도 왜 학교 협동조합이냐고? 복정고 협동조합을 만드는 데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 박주희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조사연구부 팀장은 "학교야말로 협동조합이 잘될 수 있는 토양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흔히 1인 1표제는 협동조합의 강점이자 약점으로 지적된다. 의사 결정에 이르는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디게 합의의 과정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런 협동조합의 특성이 학교라는 공간에서는 오히려 교육의 기회로 승화할 수 있다는 것이 박 팀장의 말이다. 정치학과를 지망할 생각이라는 복정고 서우남군은 "협동조합을 하면서 진짜 민주주의를 처음으로 경험해 본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협동조합 입장에서도 학교는 매력적인 공간이다. "당장에는 어렵겠지만 학교 협동조합이 확산돼 일정한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 입장에서도 중요한 거래선이 생기는 셈이다. 공동물류체계를 통해 물류·유통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라고 복정고 매점 매니저인 송미경씨는 기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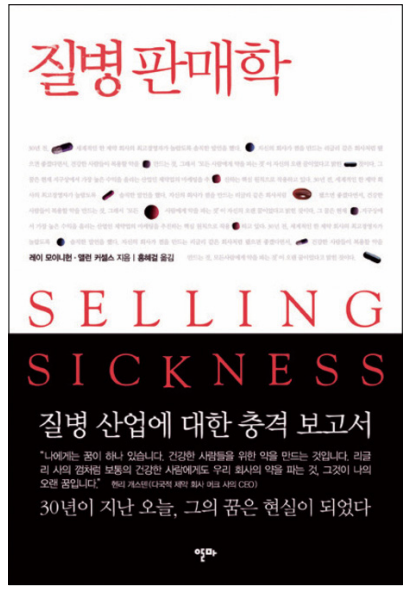
미래를 이끌 아이들이 일찍부터 협동조합에 익숙해지고 사회적 경제에 눈 뜨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도 학교 협동조합은 유용하다. 지난 10월 23일 영림중에서 공개수업이 열렸다. 이 날 강사는 학부모 조합원인 홍은숙씨. 매점에서 자주 보던 '친구 엄마'가 선생님으로 강단에 서자 신기한 듯 킥킥거리던 아이들은 "우리 학교 매점이 뭐가 좋은 것 같아요?"라고

홍씨가 묻자 막힘없이 답변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몸에 좋은 과자를 파니까 좋아요", "믿을 수 있어요", "남는 이익을 매점 주인이 갖지 않고 학생들을 위해 써요" 등등.

아이들은 경험을 통해 이미 협동의 경제 원리를 체득하고 있었던 것이다. icoop

현명한 소비자로는 부족하다
『질병판매학』을 읽고

민앵 (살림의료생협 이사장)



'질병 판매학'이라니

이 책은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다양한 마케팅 속에 숨어 있는 최신 기법을 폭로하기 위해 쓴 책이다. 나아가 질병의 정의를 '건강한 사람 모두에게 약을 팔고 싶은' 제약회사의 후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공이익을 위해 질병의 정의와 분류가 논의되고 소비자들은 '건전한 의심과 회의'를 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의약품비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전 세계적 현상이다. 그 시장은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로 손꼽히는 몇 개가 주도하고 있다. 미국식품의약국 같은 곳은 제약회사의 후원으로 의약품 안정성을 실험한다. 시장 개척을 위하여 제약회사는 먼저 새로운 질병명을 만든다. 가벼운 증상이나 노화와 같이 일상적인 불편함이 질병이 된다. 즉 부끄러움을 잘 타는 것은 사회불안장애로 규정되고, 발기부전, 성인주의력결핍장애, 월경전불쾌장애 등의 새로운 질병명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전에는 환자가 아니었던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질환자 그룹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질환자가 될까봐 두려워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군이 생긴다.

질병을 만드는데 쓰는 흔한 수법 중 하나는 질병의 원인을 좁게 만드는 것이다. 심장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 중 콜레스테롤이 주범인 것처럼 몰아간다. 그러면 마치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을 사용하면 심장병이 예방될 것처럼 보인다. 콜레스테롤이나 고혈압 같은 증상의 정상범주를 점점 좁혀나감으로써 약이 필요한 대상을 넓힌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권위 있는 개입과 의사들의 협조가 필요하게 된다. 제약회사는 여기에 엄청난 물적 인적 자원을 투입한다.

'더 많은' 약을 팔기 위한 수법들

이 책은 '질병 마케팅을 위한 의약계의 검은 커넥션, 그 10가지 전략'을 자세하게 폭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콜레스테롤을 보자. 심장병은 콜레스테롤만 낮추면 예방되는가?

심장병환자가 아닌 건강한 대다수의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타딘계 약물을 사용하기보다 더 효과적이면서도 비용이 적게 들고 보다 안전한 방법을 써야 한다. 식습관을 개선하고 운동량을 늘리고 금연하는 것인데 이는 가장 확실한 그리고 가장 잘 알려진 방법들이다. (이 책 26쪽)

다른 많은 의학적 질환과 마찬가지로 고콜레스테롤에 대한 정의는 정기적으로 개정되고 있고, 다른 질환들처럼 점점 더 많은 건강한 사람들을 아프다고 하는 재정의하는 쪽으로 확장되어왔다. (이 책 27쪽)

질병에 대한 정의가 확장되면 의사를 통하여 퍼진다. 제약회사는 병원 레지던트와 인턴들에게 공짜 간식을 제공하는 일부터, 면허 취득 후 재교육을 지속한다. 교육 후에는 과학적 연구가 뒤따른다. 거의 모든 임상시험이 공동 또는 비영리적 출처보다는 그 약의 제조사에게 자금지원을 받는다. 먹이사슬의 꼭대기에는 오피니언 리더급 미국 내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이 있다.

효능을 과장하기 위한 통계 수치 조작도 흔히 쓰는 수법이다. 같은 고혈압약이라도 값비싼 신약보다 특허 기간이 만료된 오래되고 단순한 약이 값도 싸고 효능이 좋은 경우가 많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는다. 엉덩이 골절은 세계적으로 큰 문제인데 그 원인은 추락이나 낙상이지 골다공증 때문이 아니다.

현명한 소비자만으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전혀 약을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 책이 지나치게 과장되고 편향적인가? 우리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우리가 대단히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 새로운 약이 만들어지고 판매될 때마다 내 현재 몸 상태를 질병으로 인식해야 하는가, 어떤 약이 적합하며 예상되는 부작용은 무엇이며, 이 약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줄 것인가, 통계학적 트릭은 없는가 등을 일일이 따져야 하는가? 물론 그런 태도도 필요하지만 모든 국민이 언제나 그럴 수는 없지 않은가?

..... 의사들에게 중요한 것은 환자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며 그녀의 관점에서 보면 많은 사람이 자신의 불만을 의사들이 계속 세로토닌의 농도 문제로만 단순화시키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녀는 매일 그녀의 환자들을 통해 심한 괴로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 직장을 잃을 위기감, 폭력적인 배우자, 축축하고 비좁고 쾌적하지 않은 집 안 환경 등 많은 고통의 원인들을 본다. (이 책 134)

귀 기울여 듣는 의사는 환자와 대화하고 상담하며 생활 처방을 할 것이다. 물론 필요한 약은 처방하지만 절제한다. 약은 무조건 나쁘고 검사도 무조건 안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같은 골밀도 검사라 할지라도 두려움을 증폭시켜 약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지표로 삼아 이웃과 더불어 운동하고, 생활습관을 개선하며,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줄여나가도록 권유한다면 유용한 것이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의료인이 필요하다.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함께 만드는 건강마을공동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 책을 읽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쉽게 투약 권고에 휘둘리고 있는지 절감하게 된다. 어쩌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예방보다 치료중심이라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약물에 쉽게 의존하는 치료에 국한된 문제'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소속 회원 생협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을 꿈꾸고 실천해왔다. 너무 높은 의료보험료 때문에 농민이 자살하고 소를 끌고 투쟁하던 시절 안성의료생협이 출범했고 어언 20년의 역사가 흘렀다. 의료생협은 믿을 수 있는 진료, 생활처방, 예방하는 진료를 실천해왔고 환자권리장전을 만들어 지켜왔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도록, 자기가 사는 마을에서 좋은 이웃들과 더불어 같이 운동하고 같

이 식사습관을 개선하고, 각종 소모임 등을 통해 재미있는 삶을 함께 하는 것이 건강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주민들과 의료인이 신뢰를 바탕으로 일구어 온 것이다. 이런 지향을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 의료생협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 있다. 주민 스스로가 자율과 자치로 공공의료를 마을에서 실현해 나갈 때야말로 우리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의약업계, 나아가 자본의 횡포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질병판매학』은 이처럼 약물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현실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과 대안을 고민하도록 강렬하게 문제제기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책은 생각보다 술술 읽힌다. 더 많이 화가 나야 하는데 끄덕끄덕하면서 읽게 된 것은 이미 제약업계의 판매 관행이 낯설지 않아서인 것 같아 씁쓸하다. icoop

전세계 협동조합들은 무엇을 고민하는가?

김영미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대외협력팀)

앞장서 성평등을 실현하고 있는 공제보험 부문

ICMIF(국제협동조합보험연합)이 성평등 실천을 주도하고 있다. ICMIF는 협동조합 공제 부문이 지도자의 자리에 여성들을 더 많이 임명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회원조직들의 여성 CEO에게 이들의 역할을 묻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여성들이 협동조합 공제 사업 부문에서 높은 지위를 획득할 가능성을 실제로 얼마나 인식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또한 젊은 여성 경영진의 성장을 돕는 여성 선배들의 역할 탐구도 조사 목적에 포함했으며, CEO와 같은 지도자들이 갖춰야 할 덕목은 무엇인지, 여성 CEO가 같은 위치의 남성들과 다른 업무접근방식을 취하는가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2012년에 실시한 이 조사를 통해 타 보험업계보다 협동조합 공제 부문 여성들이 고위관리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벨기에 P&V 그룹의 CEO 힐데 버나일렌(Hilde Vernaillen)은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내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조직의 모든 단계에서 인재 구성은 반드시 남녀 에너지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위직의 남녀 성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확고한 열정과 헌신이 필요하다. ICMIF의 회원조직 중 29개 조직이 CEO, 회장직에 여성을 임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 공제 및 협동조합모델이 기존의 주식회사보다 더욱 진화한 모델이라 단언할 수 있다.”

여성 CEO와 상위 지도자들의 존재는 특히 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한 협동조합 공제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ICMIF에 따르면 북미에서

는 18개 기업 중 7개 기업(약 39%)이 여성을 지도자직에 임명하였으며, 라틴아메리카와 캐리비안 지역에는 47개 회원 조직 중 7개 조직(약 15%)의 CEO와 이사장이 여성이다. 2012년 회원조직 거버넌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ICMIF 회원조직의 25% 기업에서 3명 또는 그 이상의 여성이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반면, 일반 보험회사 기업은 16.7%만이 여성을 이사로 임명하고 있다.

ICMIF는 공제 및 보험협동조합 부문에서 최근 여성들을 고위직으로 임명하는 사례가 확연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에 참여한 여성들은 CEO, 회장 등과 같은 중요한 지도자들은 열정, 헌신, 정직, 투명성과 전략적인 사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등을 갖춰야 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일부는 협동조합의 거버넌스 구조가 지도자 자격을 지닌 남녀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노력

이탈리아 협동조합이 정부와 함께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년 전 레가코프(Legacoop)와 연계한 협동조합의 청년 네트워크인 제네라지오니(Generazioni)가 경제발전부의 대표자들과 면담하면서 협력체제를 시작하였다. 제네라지오니는 청년들이 협동조합기업을 설립할 때 직면하는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대화를 지속해왔다. 이 논의에서 제네라지오니 조합원들이 제안한 권고사항들 일부가 경제개발부의 정책에 채택되었다.

제네라지오니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청년들이나 정리해고를 당한 사람들이 지금보다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탈리아의 마르코라 법(Marcora Law)은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이 실업수당을 적립하여 협동조합을 인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협동조합 인수를 통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할 때 실업수당 외에 개인의 모든 저축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장벽이 높다. 제네라지오니는 인수 절

차 또한 간소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업특별수당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이들의 주장이 실현될 수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실업특별수당은 장기노동계약을 맺었으나 기업의 폐쇄나 매출감소에 의하여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만 수령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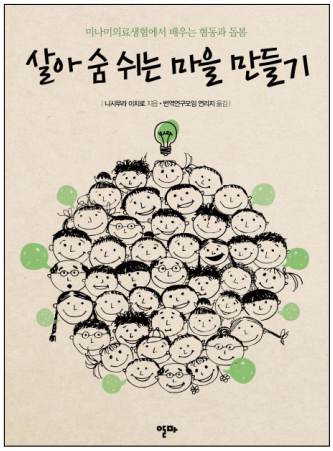
회의에서 논의한 또 다른 쟁점은 조합원 10명까지로 구성된 소규모 협동조합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협동조합의 수익을 연구와 훈련 및 개발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세금을 감면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협동조합모델을 알리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네라지오니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와 협력하여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을 소개하는 사업전략게임에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사피엔짜(Sapienza) 사업게임이라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레가코프 라찌오(Legacoop Lazio), 제네라지오니 라찌오(Generazioni Lazio) 그리고 Sapienza in Movimento나 AIESEC과 같은 학생연합이 함께 펼치고 있다.

협동조합연합인 레가코프는 에밀리아-로마냐 지역에 새로운 포털사이트를 개설하여 청년들이 협동조합기업 설립 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Farecooperativa라는 플랫폼은 협동조합설립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성공적인 협동조합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학생과 교사, 학자 및 협동조합인과의 연계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레가코프는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청년들의 협동조합 참여를 촉진하고 있는데, 특히 제네라지오니는 레가코프 내에서 청년들의 참여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모든 거버넌스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탈리아 협동조합은 경제 위기의 시대에 훌륭한 회복력을 보이며 최근 몇 년 동안 고용증가를 8% 이루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이들의 기업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탈리아에는 청년 협동조합이 13,000개가 있으며 노동인구의 7.4%가 협동조합에 속해 있다. icoop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의 책



니시무라 이치로 저, 번역연구모임 연리지 옮김(2013)
알마 | 224쪽 | 규격 외 판형 | 13,500원

살아 숨 쉬는 마을 만들기 – 미나미의료생협에서 배우는 협동과 돌봄

협동조합 시대, 미나미의료생협의 놀라운 이야기!

미나미의료생협에서 배우는 협동과 돌봄 『살아 숨 쉬는 마을 만들기』. 이 책은 협동조합의 시대에 좋은 사례로 미나미의료생협이 50년 동안 얻은 성과를 소개한다. 의료, 돌봄과 복지, 건강한 몸 만들기, 지역 만들기와 생협 만들기 같은 주제로 시골의 낡고 작은 진료소였던 곳에서 지역사회를 살리는 종합병원이 되기까지 미나미의료생협의 발전 과정을 되짚어 보고 한국의 의료생협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생각해 본다.

미나미의료생협은 시골의 작은 진료소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조합원 6만여 명, 900개의 반 모임 80여 개 지부, 10개 이상의 블록을 형성하고 있으며 1일 방문 환자 수는 약 1,300여명 가량이다. 미나미의료생협의 시설, 의료진 등의 관계자들은 내원자나 이용자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으며 의료 복지뿐 아니라 문화까지도 서로 협력의 힘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미나미의료생협의 사례를 통해 한국 의료생협의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며 협동조합의 시대에 한국의 협동조합론, 생협론이 성장하고 현실화 되는데 좋은 역할 모델이 되어 줄 것이다.

조지 제이콥 홀리요크 저, 정광민 옮김(2013)
그물코 | 400쪽 | 150 x 200 | 16,000원

[협동조합 고전 총서 1] 로치데일공정선구자협동조합–역사와 사람들

(원제)Self-help by the people : The history of the Rochdale Pioneers

협동조합운동의 세계적 고전, 협동조합 사람들의 필독서
〈로치데일공정선구자협동조합-역사와 사람들〉 첫 완역판

로치데일공정선구자협동조합.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이름일 것이다. 영국 랭커셔 주의 작은 마을 로치데일에서 노동자 28명이 28파운드를 가지고 만든 세계 최초의 소비자협동조합이며, 국제협동운동의 기본원칙으로 지금도 계승되고 있는 '로치데일 원칙'을 확립한 로치데일공정선구자협동조합의 기록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다.

이 책의 제1부는 1857년에 간행되었고, 제2부를 더한 증보판은 1893년에 간행되었다. 제1부가 나온 뒤 150여 년 동안 이 책은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헝가리, 일본 등 협동조합 선진국을 비롯하여 수많은 나라에서 번역, 출판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완역판이 나온 것인데,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의 '협동조합고전총서'의 첫 번째 책이기도 하다.

생협평론 2010 겨울 (창간호)

발간사
협동조합에 대한 건강한 담론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 정병호 (iCOOP협동조합연구소장)

축사
인간의 본성, 그리고 생협 — 정태인 (경제평론가)
열린 생협 운동의 비전제시를 기대하며 — 이정주 (iCOOP생협연합회 회장)

길잡이
iCOOP생협, 세상에 말 걸다 — 염찬희 (편집위원장)

창간특집 윤리적 소비, 신자유주의 질서를 거스르다!

소비가 이념적이고 윤리적이기까지 한 까닭은? —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교수, 사회학)
윤리적 소비의 경제학적인 이해와 생협의 선택 — 김형미 (메이지대학원 정치경제학 박사후기과정)
iCOOP생협과 윤리적 소비 — 정원각 (iCOOP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유럽의 윤리적 소비 — 이의남 (iCOOP고양생협 이사)

창간특집 좌담
윤리적 소비는 생산, 소비, 노동 모두를 고려한다 — 김아영, 김미영, 송정임, 우분주

이슈

웅포금강에서 사라진 이름들 — 송기역 (르뽀작가)
투기자본이 판치는 세상, 공정무역은 위태롭다! —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아이쿱 생협 만평 — 이동수 (만화가)

지구촌 협동조합 소식
한국의 공정무역 현황 — 김태연 (iCOOP생협개발부 무역팀장)
유럽 협동조합의 사례 : 경제 대안 운동 — 정원각 (iCOOP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지금 해외에서는 — 이주희 (iCOOP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

돌발논문
우리는 속고 있다, 속는 줄도 모르고 — 노종면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장, 천안함언론검증위원)

서평
『생명을 살리는 윤리적 소비』 — 이선옥 (구로생협 문화위원, 르뽀작가)

생협평론 2011 봄 (2호)

길잡이
먹을거리만 다루라고요? — 염찬희 (편집위원장)

특집 경쟁의 생산에서 협동의 생산으로

WTO-FTA 시대 한국의 농축업정책,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 권영근 (생명창고·지역순환형 사회형성 추진운동협의회 상임대표)

한국 농업의 위기와 협동조합의 과제 — 정은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협동과 상생의 대안 만들기 -배추파동을 통해 생각해 보는 생협운동의 비전 — 허헌중 (지역재단 기획이사)

아이쿱은 왜 생산의 문제를 고민하는가? — 신성식 (아이쿱생협 생산법인 경영대표)

좌담회
생산자들에게 듣는다 : 한국농업현실과 아이쿱 생산정책 — 김진원, 박석원, 오미예, 유재흠, 주정산

이슈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 서분숙 (르뽀작가)

복지논쟁의 주요 쟁점들을 해부한다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조합원 활동가들의 활동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 정원각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아이쿱생협 만평 — 이동수 (만화가)

돌발논문
SSM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 친서민 대 친대기업으로 양분되는 보도 — 김서중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서평
『식품주식회사』 — 엄은희 (부산대학교 HK교수)

협동조합소식
지금 해외에서는 — 이주희 (아이쿱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

생협평론 2011 여름 (3호)

길잡이
협동조합 공부 제대로 한 번 해 봅시다 — 염찬희 (편집위원장)

특집 협동조합 제대로 이해하기

협동조합이란? : 경제학적으로 이해하기 —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신뢰의 생산이 협동조합의 본성 — 정찬율 (친환경유기식품유통인증협회 사무국장)

왜 협동조합은 규모 확대 문제에 더 민감한가 — 장종익 (연세대 경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일본생협이 직면한 과제와 조합원 참여시스템 — 번역: 김연숙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日本の生協が直面する課題と組合員の参加システム — 丸山茂樹 (JC総合研究所、客員研究員)

좌담회
생협, 규모가 커지면 협동조합 정신이 훼손될까? — 김영숙, 이금자, 이필구, 김아영

이슈

3.11 농협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 이호중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

건강보험 하나로운동, 참여할까, 말까? —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저자)

아이쿱생협 만평 — 이동수 (만화가)

돌발논문
에너지 위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할까? — 이유진 (녹색연합 녹색에너지디자인팀장)

서평
『건강한 경제모델 프라우트가 온다』 — 오귀복 (아산YMCA생협 이사)

협동조합소식
지금 해외에서는 — 이주희 (아이쿱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

생협평론 2011 가을 (4호)

길잡이
모두에게 좋은 세상을 위해 — 염찬희 (편집위원장)

특집 복지사회, 협동과 참여

복지국가운동과 협동조합운동 —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복지사회의 이행전략으로써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에 관한 탐색 — 장원봉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연구교수)

협동조합운동과 복지 — 김형미 (메이지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선수금 운동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협동조합 경제 — 오항식 (아이쿱생협연합회 사무처장)

좌담회
협동과 참여, 그리고 복지 — 권순실,김민경,이미연,장남희,김아영

이슈

협동의 정신과 평창 동계올림픽 — 우석훈 (2.1 연구소 소장)

생협법 개정, 기회를 놓치면 위기가 된다 — 김기태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와 한국협동조합의 나아갈 길 — 홍광석 (국제협동조합연맹 분과기구담당)

아이쿱생협 만평 — 이동수 (만화가)

르뽀
제2,제3의 용산, 명동3구역을 말한다 — 유채림 (소설가/ 홍대철거현장 '두리반' 주인)

서평
『복지국가 스웨덴-국민의 집으로 가는 길』 — 허인영 (아이쿱구로생협 조합원)

협동조합소식
지금 해외에서는 — 김영미 (아이쿱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

2011 윤리적소비 공모전 수기부문 당선작

우리는 사회공헌반이다!!! — 류지형 (교사)

위대한 생산 — 김시은 (주부)

내가 공부하는 이유 — 유형석 (용인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생협평론 2011 겨울 (5호)

길잡이
협동조합님,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어 주세요 — 염찬희 (편집위원장)

특집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협동조합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협동조합 — 김찬호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두레생협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과 의미 — 권순실 (생협전국연합회 전 회장)

지역사회에서, 생활인이, 만들어가는 소박한 복지 -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협동복지사업 — 박제선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기획부)

나눔과 협동이 건강을 만든다 - 의료생협 — 조병민 (대전민들레의료생협 전무이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와 한살림의 '지역살림운동' — 정규호 (모심과 살림연구소 연구실장)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아이쿱생협 — 김대훈 (아이쿱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장)

일본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 — 번역: 김연숙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協同組合と地域社会への貢献 — **北川太一** (福井県立大学経済学部 教授)

좌담회
지역 활동가들이 보는 협동조합의 나눔 활동 — 김이창, 이진홍, 이혜정, 정경섭, 김아영

이슈

종편 방송을 어찌 할꼬? —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사람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 '반값 등록금'과 교육복지 실현!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아이쿱생협 만평 — 이동수 (만화가)

르뽀
강은 가르지 않고 막지 않는다 — 서분숙 (르뽀작가)

돌발논문
지속 가능한 사회는 행복한 노동에서 — 하종강 (성공회대학교 노동대학장)

서평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 — 차형석 (시사인 기자)

협동조합소식
지금 해외에서는 — 김영미 (아이쿱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

생협평론 2012 봄 (6호)

길잡이
지금, 시민이 주인인 세상을 말해야 한다 — 염찬희 (편집위원장)

특집 민주주의와 협동조합

민주주의 발전에서 협동조합의 역할 —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민주주의를 훈련시켜온 유럽의 협동조합들 — 정원각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유럽의 협동조합기업: 경제민주화 구현 현장 — 김현대 (한겨레 선임기자)

일본의 협동조합 민주주의- 그 성과와 과제 — 번역: 김연숙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日本における協同組合民主主義
ー その成果と課題 — **杉本貴志** (関西大学商学部教授)

1970년대 한국 협동조합의 민주주의 지향성 — 신철영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친환경유기식품클러스터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좌담회
협동조합이 민주주의를 말하다 — 신종철, 안상연, 오귀복, 이화수, 홍준호, 김아영

이슈

협동조합기본법의 내용과 의미 — 박범용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협동조합형기업지원팀장)

철도민영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몇 가지 것들 — 박흥수 (공공운수정책연구소 연구원)

아이쿱생협 만평 — 이동수 (만화가)

르뽀
세 가지 물음 - 정리해고 철회투쟁 1000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 이야기 — 연정 (르뽀작가)

돌발논문
소셜미디어로 그리는 소셜디자인 — 고재열 (시사IN 문화팀장)

서평
『민주주의 색깔을 묻는다』 — 조영훈 (청년유니온 조합원)

협동조합소식
지금 해외에서는 — 김영미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대외협력팀)

생협평론 2012 여름 (7호)

길잡이
탐욕이 아닌 필요에서 출발하는 협동조합 — 염찬희 (편집위원장) — 4

특집 세계의 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시사점 — 기노채 (㈜아틀리에 대표이사/ 주택건설협동조합준비모임 대표) — 7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열린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 김신양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부회장) — 24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의 역사와 한국에서의 전망과 과제 — 김성오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 39

소비협동조합의 과제와 대안 — 전형수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52

신용조합과 협동조합은행 — 김창진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 63

생산자협동조합의 생성과 진화 — 장종익 (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교수) — 76

특별기고 - 살아있는 역사: 50년 전, 영국 북서부의 협동조합 매장 근무를 추억하며 — 로저 리차드슨 (영국 윈체스터대학 명예교수) — 90

Special Column - Living History: Working at the Co-op in north-west England fifty years ago — R.C.RICHARDSON — 102

좌담회
새로운 협동을 모색하는 협동조합들 — 국태봉, 김일섭, 석승억, 조성돈, 김아영 — 112

이슈

동일본 대지진-원전사고 1년, 그 현장을 가다 — 정재은 (미디어충청 기자) — 122

세계평화는 강정에서부터! — 여옥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133

아이쿱생협 만평 — 이동수 (만화가) — 144

돌발논문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고발한다 — 송명훈 (리셋 KBS뉴스 기자) — 145

서평
『자본주의, 그 이후』 — 이창근 (쌍용자동차 해고자) — 154

협동조합소식
지금 해외에서는 — 김영미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대외협력팀) — 159

생협평론 2012 가을 (8호)

길잡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독자를 기다리며 — 염찬희 (편집위원장) — 4

특집 협동조합의 이론과 실제

협동조합과 '일다운 일(Decent work)' 의 만남 — 신효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ODA인턴) — 7

협동조합은 고용 천국을 보장하는가? — 김성오 (『몬드라곤의 기적』저자) — 19

여성의 참여와 도전을 위한 협동조합의 원칙과 실천전략 — 김아영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박사과정) — 31

여성의 능력을 높이고 권한을 강화하는 협동조합을 지향하며 — 이미연 (아이쿱구로생협 이사장) — 40

협동조합 고유의 특성에 근거한 경영전략 — 이호중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 — 57

나그네 민주주의와 주인 민주주의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에 대해 — 신성식 (아이쿱생협 생산법인 경영대표) — 72

좌담회
협동조합에 대한 세간의 관심과 기대, 어떠세요? — 권미옥, 김현동, 박주희, 서재교, 김아영 — 86

이슈

절반의 승리 절반의 패배 -세종대 생협을 지키기 위한 싸움 — 문효규 (세종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이사장) — 102

협동조합기본법 시대를 앞두고 노동자 협동조합을 생각한다 — 김대훈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대외협력팀장) — 113

아이쿱생협 만평 — 이동수 (만화가) — 121

르뽀
농민의 꿈 — 안미선 (르뽀작가) — 122

돌발논문
밀양 송전탑 현장에서 — 이계삼 (765kV 송전탑 반대 故이치우열사 분신대책위 사무국장) — 134

서평
『협동조합, 참 좋다』 — 이정주 (쿱스토어 대표) — 146

협동조합소식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축하하며 진행된 다양한 기념행사 — 김영미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대외협력팀) — 149

생협평론 2012 겨울 (9호)

길잡이
협동조합시대, 자금 조달이라는 걸림돌 — 염찬희 (편집위원장) — 4

특집 자본 조달, 한국 생협의 난제

협동조합과 '자본' —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 7

협동조합을 위한 금융모델 — 조혜경 ((사)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16

협동조합에서 자금의 문제 — 정원각 ((가)아이쿱사회적경제지원센터 준비위원장) — 28

협동조합 지원금융 역할을 수행해온 캐나다 데잘댕신협 — 장종익 (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 42

좌담회
한국 생협의 자본 조달 현실 — 기노채, 김대훈, 민앵, 조향숙, 김아영 — 56

이슈

다시 꿈꾸고 싶은 청년들이 만드는 아름다운 연대, '청년연대은행(준)' — 조금득 (청년연대은행 추진위원장) — 73

이 세상 꿈이 모두 사라질 때 천국의 영광 보게 되리라 — 김남주 (변호사) — 84

아이쿱생협 만평 — 이동수 (만화가) — 95

르뽀
아직, 거기 그들이 있다 — 이혜정 (기록노동자) — 96

돌발논문
구미 불산 가스 유출사태, 무엇이 문제고 얼마나 심각한가? — 김수민 (구미시의회의원/ 아이쿱 구미생협 조합원) — 107

서평
『화폐전쟁』 —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 117

협동조합소식
코퍼라티브 유나이티드 (The Co-operative United) 참가기 — 이주희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대외협력팀) — 121

2012 윤리적 소비 공모전 수기부문 당선작 — 126

생협평론 2013 봄 (10호)

길잡이
왜 협동조합 생태계인가? 염찬희 (편집위원장) 4

특집 협동조합 생태계

한국 사회 경제위기의 대안 하나, 협동조합 생태계 김기태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7

협동조합 생태계에 대한 구상 신성식 (아이쿱생산법인 경영대표) 20

협동조합 생태계로 다함께 행복한 노동을 김홍범 ((주)아이쿱축산 상무대행) 35

협동조합 생태계와 조합원 활동: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의 경우 권미옥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활동국장) 52

협동조합 생태계는 어떤 모습일까? 오항식 (아이쿱생협 쿱서비스 경영이사) 68

좌담회
협동조합 생태계, 이렇게 만들어가야 한다 김동준, 송주희, 유창복, 이대중, 장은성, 조우석, 손범규 80

이슈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몰려온다 박기용 (한겨레 사회부) 98

금융협동조합을 통하여 협동조합을 육성하라 신철영 (아이쿱생협 클러스터추진위 집행위원장) 106

학생인권조례의 앞날은?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114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122

돌발논문
물의 공공성이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송미영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23

서평
『착한 것이 살아남는 경제의 숨겨진 법칙』 최은미 (밝맑 도서관) 133

협동조합소식
세계 협동조합 생태계는
어떻게 변화, 발전하고 있는가 김영미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138

특별기고
아이쿱생협은 과연 성장신화에 빠졌나? 신철영 (아이쿱생협 클러스터 추진위 집행위원장) 141

생협평론 2013 여름 (11호)

길잡이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을 위한 공부, 그 하나 — 염찬희 (편집위원장) — 4

특집 생협법 • 제도를 둘러싼 논쟁들: 조합원 외 이용을 허용할 것인가

일본 생협법의 조합원 외 이용 규제 — 번역: 이향숙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원) — 7

生協法における員外利用規制 — 関 英昭 (青山学院大学名誉教授) — 2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 46조를 철폐해야 하는 이유 — 김형미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상임이사) — 33

협동조합의 비조합원 이용 금지에 대하여 — 이재욱 (춘천산골마을협동조합 부이사장) — 46

협동조합의 비조합원 이용 문제에 대한 단상(短想) — 김성오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 53

좌담회
한국 생협법의 조합원 외 이용금지 조항, 어떻게 볼 것인가 — 김보라, 김창근, 문보경, 박은경, 김형미 — 64

이슈

아이쿱생협, 물 사유화 저지와 공공성 회복 운동에 뛰어들다 — 이미연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참여활동팀) — 81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 전아름 (보건의료노조 선전부장) — 97

아이쿱생협 만평 — 이동수 (만화가) — 109

르뽀
서부이촌동, 오세훈의 단순한 아이디어로 황폐화 된 삶의 터전 — 윤형중 (<한겨레> 사회부) — 110

기획연재
순천언론협동조합을 가다 — 김은남 (<시사IN> 선임기자) — 120

서평
『살림/살이 경제학을 위하여』 — 김기태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 130

협동조합소식
높아지고 있는 협동조합의 위상과 평가 — 김영미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 134

생협평론 2013 가을 (12호)

길잡이

협동조합, 정부 지원을 요구해야 하나	염찬희 (편집위원장)	4

특집 협동조합 법 • 제도를 둘러싼 논쟁들: 정부의 지원, 어디까지가 바람직한가

협동조합 정부지원, 협력적 사회 환경 조성이 우선이다	최유성 (전 특임장관실 제2조정관)	8
정부의 지원, 어디까지가 바람직한가?	이이재 (새누리당 국회의원)	22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 개정 쟁점 및 대안	김현미 (민주당 국회의원)	34
협동조합과 바람직한 국가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강민수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43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의 방향	김대훈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장)	54

좌담회

정부의 협동조합 지원, 어디까지가 바람직한가?	강완구, 박봉희, 손낙구, 정원각, 이향숙	66

이슈

못살겠다, 협동조합이다! - 프레시안의 협동조합 전환기	이대희 (프레시안 협동조합팀장)	84
국정원 사태와 실종된 한국 민주주의	배성인 (한신대학교)	93

아이쿱생협 만평	이동수 (만화가)	103
돌발논문 민영화의 덫,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김 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104
기획연재 / 협동조합을 가다 중국집 '철가방'들이 일군 협동의 힘	김은남 (<시사IN> 선임기자)	118
영화평 <위 캔 두 댓>	정설경 (생협평론 편집위원)	130
협동조합소식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의 사회적 확산을 보장하는 일	김영미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134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발간도서

번호	제 목	발행년도
1	생협의 사회 가치 – 아이쿱 생협을 대상으로	2013
2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 역사와 사람들	2013
3	살아 숨 쉬는 마을 만들기 – 미나미의료생협에서 배우는 협동과 돌봄	2013
4	연구보고서 〈2012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2013
5	"제 28회 후속교육 자료집 〈공정무역을 통한 인권회복 활동〉"	2013
6	"제 29회 포럼 자료집 〈아이쿱생협의 공정무역 현황과 방향〉"	2013
7	"제 29회 후속교육 자료집 〈생활협동조합의 경제적 역할 분석〉"	2013
8	"제 30회 포럼 자료집 〈한일 생협의 조합원 소비생활과 의식조사 결과발표〉"	2013
9	연구보고서 〈지대(地代)가 친환경농업에 미치는 영향〉	2013
10	『협동조합 운영 사례집』(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기획, 서울특별시 발행)	2013
11	『진짜 가격은 얼마 입니까?』 (e-book)	2013
12	"제 28회 포럼 자료집 〈 '농지가격이 친환경농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	2013
13	제 8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13
14	제 5회 『2012윤리적소비 공모전』논문부문 수상작 논문집	2012
15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 (김형미 외,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2012
16	〈유럽 주요 국가 소비자협동조합의 성패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2012
17	『협동조합, 그 아름다운 구상』 (에드가 파넬 저, 염찬희 옮김)	2012
18	『후쿠이생협의 도전』 (일본생협연합회 엮음, 이은선 옮김)	2012
19	『일러스트로 배우는 생활협동조합 매장 운영 가이드 북』 (오리토이사오 글, 와카니시 케이코 일러스트,이은선 옮김)	2012
20	『현대일본생협운동소사』 (사이토 요시아키 지음, 다나카 히로시 옮김)	2012
21	『꺼지지 않는 협동조합의 불꽃』 (와카츠키 타케유키 지음, 이은선 옮김)	2012
22	"출판기념세미나 및 제 26회 포럼 자료집 〈일본생협매장사업의 실제와 시사점〉, 〈『현대일본생협운동소사』 저자에게서 듣는 일본생협운동의 전망〉"	2012
23	"제 27회 포럼자료집 〈 한국 사회의 물 공공성과 식수 안전성을 생각해 보다〉"	2012
24	2012 세계 협동조합의 해 한국조직위원회 포럼 자료집〈한국 협동조합 운동에 대한 진단과 과제〉	2012
25	제 4회 윤리적 소비 공모전 〈논문 부분 수상작 논문집〉	2012
26	제 7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12
27	"제 26회 후속교육 자료집 〈ICA 총회 및 해외 협동조합 연수 보고회〉"	2012
28	"제 25회 후속교육 자료집 〈유럽 민중의 집과 지역 네트워크/ 아이쿱생협 경험연구 – 윤리적 소비와 지역생협 이사회 분석〉"	2012
29	제 24회 후속교육 자료집 〈유럽생협의 성공과 실패 요인 분석〉	2012
30	"제 25회 포럼 자료집 〈 '보편적 복지시대를 열어가는 친환경무상급식 운동의 성과와 향후 과제〉"	2012
31	제 24회 포럼 자료집 〈유럽생협의 성공과 실패 요인 분석〉	2012
32	"제 23회 포럼 자료집 〈 아이쿱생협의 새로운 생협운동 정책에 대한 평가〉"	2011
33	"제 22회 포럼 자료집 〈공정무역 5년의 성과와 과제〉"	2011
34	iCOOP협동조합연구소 연구보고 2011-01 〈iCOOP생협의 교육현황, 그리고 교육효과 및 만족도에 대한 연구〉	2011

35	iCOOP협동조합연구소 연구보고 2011-02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한 지자체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협력방안〉	2011
36	iCOOP협동조합연구소 번역서 2011-01 일본공익재단법인생협총합연구소 리포트 No.62 : 〈위기에 대응하는 외국생협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생협-의 동향〉	2011
37	iCOOP협동조합연구소 번역서 2011-02 일본공익재단법인생협총합연구소 리포트 No.64 : 〈협동조합의 출자금, 자본 회계 문제〉	2011
38	"제 19회 포럼 자료집 〈 아이쿱 직원복지의 바람직한 방향〉"	2011
39	"제 20회포럼자료집 〈조합원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향 모색〉"	2011
40	제 21회 포럼 자료집 〈조합원 활동가 교육 현황, 평가〉	2011
41	일본자료연구모임 '연리지' 2011년 활동 자료집	2011
42	"제 23회 후속교육 자료집 〈 협동조합기본법 해설〉"	2011
43	"제 20회 후속교육 자료집 〈 복지국가스웨덴에대한이해〉"	2011
44	제 16회 후속교육 자료집 〈성공회대학교 협동조합경영학과 영국 방문 보고〉	2011
45	제 14회 후속교육 자료집 〈개정된 생협시행령, 시행규칙, 내부 지침에 대한 과정과 이해〉	2011
46	(재)iCOOP협동조합연구소 5주년 기념 심포지엄 〈한국생협운동의 기원과 전개〉	2011
47	『뒤영벌은 어떻게 나는가』 (이바노 바르베리니 지음, 김형미 외 2인 옮김)	2011
48	『새로운 생협운동의 미래』 (신성식 지음)	2011
49	iCOOP협동조합연구소 연구보고 2010-01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 생협운동을 중심으로〉	2010
50	iCOOP협동조합연구소 연구보고 2010-0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의 공제조합운영에 관한 연구〉	2010
51	iCOOP협동조합연구소 연구보고 2010-03 〈생협 밸리 커뮤니티 디자인 연구〉	2010
52	iCOOP협동조합연구소 연구보고 2010-04 〈2009 iCOOP생협 조합원의 소비자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2010
53	"제 18회 포럼 자료집 〈 아이쿱생협 활동을 위한 이론 정리를 위한 토론〉"	2010
54	제 17회 포럼 자료집 〈유통인증 5년에 대한 평가〉	2010
55	제 16회 포럼 자료집 〈2009년 iCOOP생협 조합원 소비생활과 의식 결과 보고〉	2010
56	제 15회 포럼 자료집 〈생협에서 공제사업이 가지는 의미와 방향〉	2010
57	"제 14회포럼자료집 〈생협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2010
58	제 13회 포럼 자료집 〈통화 운동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2010
59	제 6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10
60	'일본어 자료 번역모임'의 활동자료집	2010
61	'일본어 자료 번역모임'의 활동자료집	2010
62	"제 13회 후속교육 자료집 〈 2010년 유럽영국몬드라곤 방문 보고회〉"	2010
63	"제 12회 후속교육 자료집 〈개정된 생협법에 대한 과정과 이해〉"	2010
64	iCOOP생협 ICA가입 기념 심포지엄 〈국제협동조합연맹(ICA) 가입과 생협의 사회적 책임〉	2009
65	제 2회 윤리적 소비 논문 수기 공모전 자료집 〈논문부분 수상자 논문집〉	2009
66	제 5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09
67	우리밀1%의 기적 10%의 희망을 위한 정책 세미나 〈생산과 소비의 상생연계를 통한 우리밀 산업화의 과제〉	2009
68	제 12회 포럼 자료집 〈생협의 노동과 임금〉	2009

69	제 11회 포럼 자료집 〈2009년 iCOOP생협 활동가 의식조사 결과 발표〉	2009
70	『생활속의 협동』 (오사와 마리 편저, iCOOP협동조합연구소 옮김)	2009
71	『세상을 바꾸는 소비자의 힘』 (iCOOP협동조합연구소 · 한겨레 경제연구소 옮김)	2009
72	"제 9회 후속교육 자료집 〈 한국의 조세 · 재정 현황과 바람직한 방안〉"	2009
73	제 8회 포럼 자료집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의 한국 경제와 생협 운동의 전망〉	2008
74	제 9회 포럼 자료집 〈광우병, 촛불 정국에서 생활 운동체인 iCOOP생협과 이후 과제〉	2008
75	"제 10회 포럼 자료집 〈람사르총회와 논습지 보전의 필요성과 과제〉"	2008
76	제 1회 대학원생 윤리적 소비 공모전 〈논문부분 수상작 자료집〉	2008
77	제 4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08
78	『협동, 생활의 윤리』 (iCOOP생협연대 지음)	2008
79	"제 6회 후속교육 자료집 〈협동조합에서 출자금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	2008
80	제 4회 포럼 자료집 〈친환경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의 사례와 향후 과제〉	2007
81	제 5회 포럼 자료집 〈우리 밀 생산과 소비 운동의 성과와 이후 과제〉	2007
82	"제 6회 포럼 자료집 〈 새로운 대안운동으로써의 사회적 경제와 생협운동〉"	2007
83	제 7회 포럼 자료집 〈iCOOP생협의 정체성에 대한 토론〉	2007
84	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보고서 〈한국생협연합회 소속 조합원을 중심으로〉	2007
85	〈iCOOP생협 10년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정리와 평가〉	2007
86	iCOOP협동조합연구소 2주년 기념 심포지엄 〈윤리적소비의 방향과 실천적 모색 – 공정무역을 통한 제3세계 지원과 우리밀 살리기 운동을 통한 식량 자급률 제고를 중심으로〉	2007
87	iCOOP협동조합연구소 창립 1주년 기념 심포지엄 〈한일 생협 조합원 의식조사 결과 발표〉	2007
88	제 3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07
89	"제 4회 후속교육 자료집 〈 사회발전에 있어서 협동조합의 역할〉"	2007
90	제 1회 포럼 자료집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형성을 위한 생협의 과제〉	2006
91	제 2회 포럼 자료집 〈한국 사회의 식문화 현황과 문제점 – 식육법의 필요에 대하여〉	2006
92	제 3회 포럼 자료집 〈생협에서 공정무역이 갖는 의미와 방향〉	2006
93	출판기념 토론회 〈생협인프라의 사회적 활용과 그 미래〉	2006
94	제 2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06
95	제 1기 생협아카데미 자료집	2006
96	"제 1회 후속교육 자료집 〈제 1기 아카데미 후속교육〉"	2006
97	『생협 인프라의 사회적 황용과 그 미래』 (일본 21세기 코프연구센터 엮음,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옮김)	2006
98	『새로운 생협운동』(한국 생협연대 지음)	2002
99	『서기2000년의 협동조합(1980년 모스크바ICA레이들로보고서)』 (김동희 역, (재)iCOOP협동조합연구소)	2000

구입 / 열람 문의 : icoop-institute@hanmail.net

BLUEPRINT FOR A CO-OPERATIVE DECADE

34
9 772093 987001
ISSN 2093-9876

CO-OPERATIVES JOURNAL vol.13 Winter 2013
The Journal of the iCOOP KOREA Cooperative Institute

A Debate on the Co-operative Identity

Presentation
Re-think Co-operatives
SHIN, Sungsik

Discussions
Find a way in the Co-operative Values and Principles
LEE, Hyunsuk

A Co-operative as a tree and as a forest: A thought on "Re-think Co-operative"
CHANG, Jongik

Recognize the difference of Money Economy and Social Economy
HONG, Gibin

Co-operative Movement: Move Forward with Deliberation
KIM, Dongjun

Round-table :
Re-thinking Co-operatives from the activists' perspective

(재)iCOOP협동조합연구소

서울시 구로구 항동 1-1 성공회대학교 일만관 2B 204호
TEL 02) 2060-1373 **FAX** 02) 2060-1374
E-Mail icoop-institute@hanmail.net
Podcast(coopcast) http://icoop-institute.iblug.com
Facebook http://www.facebook.com/icoopinstitute
www.icoop.re.kr

재생종이로 만든 책